

# 2010 간추린 改正稅法

2011

企劃財政部



## 머 리 말

지난해 우리경제는 그간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힘입어 6.2%의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는 등 빠른 경기회복의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이러한 거시경제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경기성과가 서민·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 등으로까지 확산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지난해 조세정책은 국민의 체감경기 개선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습니다.

신규고용창출인원에 비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고용창출형 투자지원제도를 도입하였고,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를 확대하였으며,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개선도 추진하였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위해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한편,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10 간추린 개정세법」은 2010년 정기국회 및 2010년(2011년 일부 포함)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 개정된 법률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일반 국민, 기업, 세무사·회계사 및 국세공무원 등에게 새로운 제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11년 6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주영섭



# 目 次

## [국세기본법·시행령]

|                                             |    |
|---------------------------------------------|----|
| I. 가산세 제도 개선 .....                          | 5  |
| 1.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제외 .....       | 5  |
| 2. 사전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의 상속·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개선 ..... | 6  |
| 3.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확대 등 .....            | 7  |
| 4. 가산세 한도 인하 .....                          | 8  |
| 5.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추가 .....                     | 9  |
| II.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강화 .....                    | 10 |
| 6. 결정·경정이 있는 경우의 경정청구기간 명확화 .....           | 10 |
| 7. 조세불복절차상 대리인 자격 확대 .....                  | 11 |
| 8.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외대상 명확화 .....                 | 12 |
| 9. 조기결정 신청대상 명확화 .....                      | 13 |
| III. 조세심판 등 제도 개선 .....                     | 14 |
| 10. 청구 취하와 재청구 금지 근거규정 정비 .....             | 14 |
| 11. 심판조사관 명칭 정비 .....                       | 15 |
| 12.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 .....                       | 16 |
| 13. 조세심판관의 제척·회피 사유 구체화 등 .....             | 17 |
| 14.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 요건 명확화 .....               | 18 |
| IV. 기타 제도 보완 .....                          | 19 |
| 15. 법인 아닌 단체 기준 명확화 등 .....                 | 19 |

|                                         |    |
|-----------------------------------------|----|
| 16.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추가 .....               | 20 |
| 17. 국세 부과제척기간 보완 .....                  | 21 |
| 18. 국세우선 원칙의 예외 범위 조정 .....             | 22 |
| 19.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위반시 세무조사 사유 추가 등 ..... | 23 |
| 20. 국세환급가산금 이율 법령화 및 인하조정 .....         | 24 |
| 21. 국세환급금 총당의 소급효 신설 .....              | 25 |
| 22.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일몰연장 ..   | 27 |

## [국세징수법]

|                                              |    |
|----------------------------------------------|----|
| I. 공매 절차 개선 .....                            | 32 |
| 1. 참가압류자 공매허용 .....                          | 32 |
| 2. 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 제도 신설 .....                  | 33 |
| 3. 공매공고 사항 추가 .....                          | 34 |
| 4. 공매공고의 등기 제도 신설 .....                      | 36 |
| 5. 배분요구 의무화 및 채권신고, 배분요구 안내통지 제도 신설 ..       | 37 |
| 6. 공매물건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규정 신설 .....              | 39 |
| 7. 공매절차 기한의 명확화 .....                        | 40 |
| 8. 매각결정 규정 정비 .....                          | 41 |
| 9. 배분기일의 지정 규정 신설 .....                      | 43 |
| 10. 배분계산서 원안 작성 및 비치, 공매기록 열람·복사 대상 확대 ..... | 44 |
| 11. 배분에 대한 이의절차 제도 신설 .....                  | 45 |
| II. 기타 법 조문 정비 .....                         | 46 |
| 1. 알기쉬운 법률 정비 .....                          | 46 |
| 2. 가산금 조항 정비 및 증가산금 조항 삭제 .....              | 47 |

##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                                      |    |
|--------------------------------------|----|
| I. 총괄·사업소득 .....                     | 55 |
| 가. 기부금 세제 개선 .....                   | 55 |
| 1. 특례기부금 폐지 .....                    | 55 |
| 2. 법정기부금 개선 .....                    | 57 |
| 3.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확대 .....              | 60 |
| 4. 기부금 특별공제 개선 .....                 | 61 |
| 나. 세원투명성 제고 .....                    | 62 |
| 1.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강화 .....         | 62 |
| 2.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일몰 연장 등 .....  | 63 |
| 3. 계산서불성실가산세 강화 .....                | 64 |
| 4.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시 가산세 보완 .....        | 65 |
| 5.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 특례 일몰 연장 .....   | 66 |
| 다. 비과세·감면 정비 .....                   | 67 |
| 1.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종료 .....    | 67 |
| 라. 납세편의 제고 등 기타 제도 개선 .....          | 69 |
| 1. 성실납세제도 폐지 .....                   | 69 |
| 2. 사업장별 구분 경리 개선 .....               | 71 |
| 3. 사업장현황 신고제도 개선 .....               | 72 |
| 4.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개선 .....             | 73 |
| 5.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전산자료 제공 요청 신설 .....  | 74 |
| 6.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신고방법 명확화 .....          | 75 |
| 7. 조세법률주의 관련 위임입법 개선 .....           | 76 |
| 8. 사업용계좌 제도 개선 .....                 | 77 |
| 9.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과세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개선 ..... | 79 |

|                                            |    |
|--------------------------------------------|----|
| 10. 신규사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축소 .....           | 80 |
| 11. 대손금의 귀속시기 명확화 .....                    | 81 |
| 12. 소득세 추계신고자의 소득상한배율 적용기한 명확화 .....       | 82 |
| 13. 농수산물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 제도 보완 ..     | 83 |
| 14. 사업소득원천징수 내역의 매입처별합계표 기재의무 폐지 .....     | 84 |
| 15. 「노동조합법」을 초과하여 노조전임자에게 급여 지급시 손비 부인 ... | 85 |
| 16. 퇴직급여충당금 한도를 단계적 축소 · 폐지 .....          | 86 |
| 17. 퇴직 보험 · 신탁 기 적립금에 대한 처리 .....          | 89 |
| 18.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 즉시상각 허용 .....            | 93 |
| 19.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조정 .....            | 94 |
| 20. 조정반 지정 제한 사유 완화 .....                  | 96 |
| 21. 기타 조문 정리 .....                         | 97 |

## II. 근로소득 ..... 102

### 가. 저출산 · 고령화 대비 ..... 102

#### 1.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 102

### 나. 중산 · 서민층 지원 ..... 103

#### 1. 근로장학금에 대한 비과세 ..... 103

#### 2.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 105

#### 3.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연장 ..... 106

### 다. 기타 제도 개선 ..... 107

#### 1.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연말정산 제도 개선 ..... 107

#### 2. 기타 원천징수 관련 법령 체계 정비 ..... 109

#### 3. 외국인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 110

#### 4.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확인 · 관리방법 개선 ..... 111

#### 5.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 112

|                                |     |
|--------------------------------|-----|
| 6. 외국인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 | 113 |
| 7. 기타 조문정리 .....               | 114 |

### III. 금융소득 ..... 115

#### 가. 비과세·감면 정비 ..... 115

|                                 |     |
|---------------------------------|-----|
| 1. 창투조합 등 출자금 소득공제 일몰연장 .....   | 115 |
| 2.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 일몰 종료 ..... | 118 |
| 3. 선박투자회사 과세특례 축소 및 일몰 연장 ..... | 120 |
| 4.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 일몰 연장 .....  | 122 |
| 5.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일몰 종료 .....  | 124 |
| 6.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공제금액 축소 .....    | 126 |

#### 나. 기타 제도 개선 ..... 128

|                                                             |     |
|-------------------------------------------------------------|-----|
| 1. 보유기간 과세대상에서 펀드이익 제외 .....                                | 128 |
| 2. 종합과세대상에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포함 .....                          | 129 |
| 3. 대차거래 수수료·보상액의 소득구분 .....                                 | 130 |
| 4.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조정 .....                                 | 132 |
| 5.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평가손익에 대한 손실상계<br>대상 펀드이익의 범위 확대 ..... | 133 |
| 6. 대차거래 보상액의 소득구분 신설 .....                                  | 135 |
| 7. 펀드이익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                                   | 138 |
| 1) 매매·평가차익이 과세제외되는 증권의 요건 완화 .....                          | 138 |
| 2) 펀드 매도시 배당소득세 과세 제외대상 명확화 .....                           | 139 |
| 8. 기타 조문정리 사항 .....                                         | 140 |

### IV. 퇴직·연금·기타소득 ..... 141

#### 가. 저출산·고령화 대비 ..... 141

|                                      |     |
|--------------------------------------|-----|
| 1.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 141 |
|--------------------------------------|-----|

|                                                  |            |
|--------------------------------------------------|------------|
| 2. 퇴직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축소 .....                     | 142        |
| <b>나.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 .....</b>                      | <b>143</b> |
| 1. 개인의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 유예 .....                      | 143        |
| <b>다. 기타 제도 개선 .....</b>                         | <b>144</b> |
| 1.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여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기타소득으로 과세 ..... | 144        |
| 2. 교수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 마련 .....                | 147        |
| 3.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신고 규정 보완 .....                    | 148        |

## [법인세 분야]

|                                                  |            |
|--------------------------------------------------|------------|
| <b>I.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세법 정비 .....</b>      | <b>155</b> |
| 1.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회계기준으로 포함 ..... | 155        |
| 2. K-IFRS 도입기업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            | 156        |
| 3.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요건 규정 .....                    | 158        |
| 4. 감가상각자산 업종·종류 구분 .....                         | 159        |
| 5. 감가상각비 신고조정한도 계산 세부규정 .....                    | 161        |
| 6. 기준내용연수의 50% 적용대상 건물에 축사 추가 .....              | 163        |
| 7.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신고 내용연수 산정방법 개정 .....            | 164        |
| 8.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신고 사유 추가 .....                | 166        |
| 9. 기능통화 도입기업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 .....                  | 167        |
| 10.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 .....                    | 169        |
| 11.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 인식 방법 개정 .....                  | 170        |
| 12.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신고조정 허용 .....                   | 173        |
| 13. 저축성보험료 책임준비금 적립한도 개정 .....                   | 174        |
| 14. 건설자금이자 자본화에 일반차입금 이자 포함 .....                | 175        |

|                                                    |     |
|----------------------------------------------------|-----|
| 15. 중소기업 장기할부거래 회수기준 신고조정 허용 .....                 | 176 |
| 16. 건설계약 수익인식 방법 개정 .....                          | 177 |
| 17. 법인세법상 리스분류 기준 개정 .....                         | 178 |
| 18. K-IFRS 도입기업 등의 과세표준 신고시 재무제표 제출방법<br>명확화 ..... | 179 |
| 19. 현행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규정 법령화 .....                    | 180 |
| 20. 단기매매증권 및 파생상품의 취득부대비용 귀속시기 변경 ...              | 181 |

## II. 기부금 지원세제의 종합적 개편 ..... 182

|                                                         |     |
|---------------------------------------------------------|-----|
| 1. 기부금 구분체계 간소화 .....                                   | 182 |
| 2. 기부금 단체의 공익성기준 명확화 .....                              | 183 |
| 3. 법정기부금 지정단체의 지정요건 및 의무 신설 .....                       | 185 |
| 4. 기부금단체 지정기간 보완 .....                                  | 187 |
| 5. 법정기부금 지정단체의 지정요건 이행실적 제출 의무 신설 및<br>지정취소 요건 신설 ..... | 188 |
| 6. 개인·법인 기부금간 기부금 기준 일치 .....                           | 190 |
| 7. 지정기부금 손비인정 한도 확대 .....                               | 191 |
| 8. 해외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신설 .....                               | 192 |
| 9. 지정기부금단체 추가등 .....                                    | 193 |
| 10. 현물기부자산 평가 및 취득가액 보완 .....                           | 198 |
| 11. 특례기부금 폐지 .....                                      | 199 |

## III. 법인세법 관련 기타 제도보완 ..... 201

|                                                             |     |
|-------------------------------------------------------------|-----|
| 1.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시 사업영위기간 요건 적용 제외 .....                       | 201 |
| 2.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적격합병 등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br>보유 의무 예외 사유 추가 ..... | 202 |
| 3. 합병시 피합병법인 지배주주등에 대한 주식교부 요건 완화 ..                        | 204 |
| 4. 합병·분할 등 기업구조개편 관련 조문 명확화 .....                           | 206 |
| 5. 노조법에 위반하여 급여 지급시 손비 부인 .....                             | 210 |

|                                                        |     |
|--------------------------------------------------------|-----|
| 6. 퇴직급여 적립액 손비 한도 개선 .....                             | 211 |
| 7.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퇴직연금등의 범위 보완 .....                       | 213 |
| 8. 퇴직 보험·신탁 기 적립금에 대한 처리 .....                         | 214 |
| 9.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범위 명확화 ..                    | 215 |
| 10. 소액채권의 대손요건 완화 .....                                | 216 |
| 11.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 즉시상각 허용 .....                        | 217 |
| 12.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시가 기준 개선 .....                          | 218 |
| 13. 연결납세 적용법인의 합병·분할시 연결사업연도 관련규정 보완 ....              | 219 |
| 14.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 보완 .....                         | 220 |
| 15.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방법 개선 .....                             | 221 |
| 16. 사업의 포괄적 출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승계 허용 .....                  | 222 |
| 17. 투자회사 등의 집합투자재산 중 비유동자산 평가방식 개선 ..                  | 223 |
| 18. 채권등 중도매도시 원천징수 대상소득 범위 조정 .....                    | 225 |
| 19. 중도매도시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범위<br>명확화 .....       | 227 |
| 20. 비영리법인의 비과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보완 .....                     | 228 |
| 21. 종교단체의 소속 단체도 종교단체로서 비수익사업 영위 대상에<br>포함됨을 명확화 ..... | 230 |
| 2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폐기물처리사업 등에 대한 비과세 ...                  | 231 |
| 2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대상 확대 ..                 | 232 |
| 24. 농수산물 중도매인·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br>제도 보완 .....     | 234 |
| 25.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                     | 235 |
| 26. 의제 감가상각의 법적 근거 명확화 .....                           | 236 |
| 27. 성실납세제도 폐지 .....                                    | 237 |
| 28. 기타 조문 정비 .....                                     | 238 |

#### IV.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기타 제도보완 ..... 240

|                              |     |
|------------------------------|-----|
| 1.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 익금산입 유예 ..... | 240 |
|------------------------------|-----|

|                                                 |     |
|-------------------------------------------------|-----|
|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목적 기금에 대한 출연시 세액공제 신설            | 241 |
| 3. 취약종목 세제지원 제도 신설                              | 242 |
| 4. 지방 시·군 소재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br>설정 한도 확대 | 244 |
| 5.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포기 요건 정비                        | 245 |
| 6.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동업기업의 동업자에 대한 세무신고 내용<br>통보 의무화  | 246 |
| 7. 자산의 포괄적 양도시 이월 세액감면·세액공제 승계 허용               | 247 |
| 8. 자산의 포괄적 양도시 이월결손금 및 내재손실 공제 제한               | 248 |
| 9. 기업구조개편 관련 조문 명확화                             | 249 |
| 10.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통한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조세특례<br>정비     | 250 |
| 11. 기업구조조정 지원 특례 일몰연장                           | 253 |
| 12.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 과세특례 일몰연장                    | 254 |
| 13.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 255 |
| 14.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대체취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br>일몰연장      | 256 |
| 15. 학교법인 자회사가 학교법인에 출연시 손금인정 특례 일몰연장            | 257 |
| 16.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일몰연장               | 258 |
| 17.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 259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시행규칙]

|                                               |     |
|-----------------------------------------------|-----|
| I. 일자리 창출 지원                                  | 265 |
| 1.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 265 |
| 2. 지역특구 세제지원시 지원한도 신설                         | 267 |
| 3. 청소업 등을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br>업종에 추가 | 268 |

|                                               |            |
|-----------------------------------------------|------------|
| 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 추가 ..... | 269        |
| 5.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 270        |
| 6.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신설 .....               | 271        |
| 7. 사회적 기업 세액감면 일몰연장 및 최저한세율 우대적용 .....        | 272        |
| 8.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세제지원 일몰 연장 .....              | 273        |
| <b>II. 중소기업지원 .....</b>                       | <b>274</b> |
|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목적 기금에 대한 출연시 세액공제 신설          | 274        |
| 2.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당기분 일반R&D 세액공제율 단계적 인하         | 275        |
| 3.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최저한세율 단계적 인상 .....             | 276        |
| 4.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 .....           | 277        |
| <b>III. 지속성장 지원 .....</b>                     | <b>278</b> |
| 1.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정비 .....                | 278        |
| 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합리화 .....                 | 279        |
| 3.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                   | 280        |
| 4.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              | 281        |
| 5.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 및 일몰연장 .....          | 282        |
| 6.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 .....                  | 283        |
| 7. 투자세액공제 대상 리스의 요건 규정 .....                  | 284        |
| 8.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              | 285        |
| 9.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 지방미분양주택의 범위 규정 ·         | 286        |
| 10. 중소기업 범위 산정시 파트타임 근로자 인원수 계산방법 변경 ...      | 288        |
| <b>IV. 지역발전지원 및 기타 지원제도 .....</b>             | <b>289</b> |
| 1. 금융중심지內 창업·사업장신설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 289        |
| 2. 지방이전 세제지원제도 보완 .....                       | 291        |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                                                        |     |
|--------------------------------------------------------|-----|
| 1.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조문정리 .....                              | 296 |
| 2. 기타 조문정리 .....                                       | 297 |
| 3. 조특법·관세법 등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등 .....                       | 299 |
| 4.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법인설립등기의 등록면허세 면제분에 대한<br>농특세 비과세 신설 ..... | 301 |

## [ 국제조세분야 ]

### I. 비거주자·외국법인·외투기업 관련 제도 개선 ..... 308

|                                                       |     |
|-------------------------------------------------------|-----|
| 1. 외국 Hybrid사업체를 통한 국외 투자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br>추가 .....    | 308 |
| 2.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방법 명확화 .....                            | 309 |
| 3. 외국손회사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                 | 311 |
| 4.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제외대상 추가 .....                          | 312 |
| 5. 비거주자·외국법인 자산 경매·공매시 원천징수 관련 특례 신설 ..               | 313 |
| 6.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취득한 유가증권 취득가액<br>계산방법 명확화 ..... | 314 |
| 7. 지점세 과세의 상호주의 예외 신설 .....                           | 315 |
| 8. 지점세 과세대상금액 계산시 음수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 조정 ..                 | 316 |
| 9. 외투기업 세제지원시 지원한도 및 고용인센티브 신설 .....                  | 318 |
| 10. 증자시 외투비율 적용 명확화 .....                             | 320 |

### II. 이전가격세제 제도 개선 ..... 321

|                                 |     |
|---------------------------------|-----|
| 1. 국제거래 범위 명확화 .....            | 321 |
| 2. 정상가격 과세조정시 감액경정 규정 명확화 ..... | 322 |
| 3.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순서 폐지 .....      | 323 |

|                                                           |            |
|-----------------------------------------------------------|------------|
| 4.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시 소급적용 기간 명확화 .....                      | 324        |
| 5.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과태료 현실화 .....                              | 325        |
| 6.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기준 법령화 .....                         | 326        |
| 7. 정보교환 협정 관련 규정 개선 .....                                 | 327        |
| 8. 거래이익법 보완규정 개선 .....                                    | 328        |
| 9.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기준 추가 .....                                | 329        |
| 10. 특수관계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과의 적합성요소 구체화 .....                   | 330        |
| 11. 비교가능성 분석을 위한 일반사항 규정 .....                            | 332        |
| 12. 비교가능성 분석 절차 신설 .....                                  | 333        |
| 13.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구체화 .....                            | 334        |
| 14.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에 대한 규정 보완 .....                           | 335        |
| 15. 거래 통합분석 및 다년도 자료분석 사용 신설 .....                        | 336        |
| 16. 거래의 통합분석 적용례 구체화 .....                                | 337        |
| 17. 다년도 자료분석 적용례 구체화 .....                                | 338        |
| 18. 임시유보 처분통지후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미반환시 처분업무<br>절차 개선 .....      | 339        |
| <b>Ⅲ.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설 .....</b>                            | <b>340</b> |
|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 340        |
| 2.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                                     | 341        |
| 3. 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 .....                                    | 342        |
| 4.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                             | 343        |
| <b>Ⅳ. 기 타 .....</b>                                       | <b>344</b> |
| 1.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규정<br>명확화 .....            | 344        |
| 2. 유보소득 합산과세 익금불산입 기간 폐지 .....                            | 345        |
| 3.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 비적용 요건으로서 ‘같은<br>지역 등’ 대상 확대 ..... | 346        |

## [양도소득 관련]

|                                                               |     |
|---------------------------------------------------------------|-----|
| I. 농어민 세제지원 .....                                             | 351 |
| 1.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세감면 일몰연장 ..                           | 351 |
| 2. 자경기간 계산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방법 개선 .....                          | 352 |
| II. 부동산거래 활성화 .....                                           | 353 |
| 1. 양도세 중과완화의 일몰연장 .....                                       | 353 |
| 2.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                                         | 354 |
| III. 과세정상화 .....                                              | 355 |
| 1.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세 비과세·감면 제한 .....                              | 355 |
| 2.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이중공제 배제 명확화 .....                              | 356 |
| 3. 증권예탁증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의 명확화 .....                         | 357 |
| IV. 납세자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                                   | 358 |
| 1.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방법 보완 .....                                    | 358 |
| 2. 양도세 이월과세제도 보완 .....                                        | 359 |
| 3. 1세대1주택 판정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br>계산방법 보완 .....        | 360 |
| 4. 일시적 2주택(1주택·1조합원입주권)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br>완화 .....            | 361 |
| V. 기타 제도개선 .....                                              | 362 |
| 1. 협의분할되지 않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단기준 보완 .....                          | 362 |
| 2. 주식의 기타자산 판정시 부동산가액 계산방법 보완 .....                           | 363 |
| 3. 양도세 중과세율(50%) 대상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 및<br>조합원입주권의 범위 완화 ..... | 364 |

|                                        |     |
|----------------------------------------|-----|
| 4. 공익사업 ‘사업시행자’의 범위 명확화 .....          | 365 |
| 5.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적용시 취득시기 보완 ..... | 366 |
| 6.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시 5년간 감면한도 설정 .....      | 367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시행규칙]

|                                        |     |
|----------------------------------------|-----|
| I. 중산·서민층, 중소기업 등 세제지원 .....           | 372 |
| 1.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                  | 372 |
| II. 납세자 권리 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          | 374 |
| 1. 기한 후 신고시 연부연납신청 허용 .....            | 374 |
| 2. 장애인 인적공제 산정 및 종신통기금 평가방법 개선 .....   | 375 |
| 3.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 확대 .....               | 376 |
| 4. 유사매매사례가액 제도 개선 .....                | 377 |
| 5. 봉안시설에 자연장 비용 추가 .....               | 378 |
| III. 기타 제도개선 .....                     | 379 |
| 1. 성실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미적용 범위 확대 .....       | 379 |
| 2. 부득이한 사유로 공익목적에 사용 못하는 재산의 사용기한 설정 · | 380 |
| 3.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       | 381 |
| 4.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자료 제출 근거조항 마련 .....       | 382 |
| 5. 공익법인 외부감사제도의 개선 .....               | 383 |
| 6. 외국납부세액 순손익가치 차감항목 추가 .....          | 384 |
| 7.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대상 확대 .....             | 385 |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                           |     |
|---------------------------|-----|
| 1. 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요건 완화 ..... | 390 |
|---------------------------|-----|

|                                      |     |
|--------------------------------------|-----|
| 2. 세 부담 상한 적용기준 보완 .....             | 391 |
| 3.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요건 미충족시 적용기준 보완 ..... | 392 |

## [부가가치세 분야]

|                         |     |
|-------------------------|-----|
| I.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 ..... | 399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     |
|----------------------------------------|-----|
| 1. 목재펠릿에 대해 한시적 부가가치세 면제 .....         | 399 |
| 2.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추가 .....         | 400 |
| 3. 사립학교 민자사업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 .....       | 401 |
| 4.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 402 |
| 5.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현금지급 의무화 ... | 403 |

### [농림특례규정]

|                            |     |
|----------------------------|-----|
| 6.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 추가 .....   | 404 |
| 7. 사후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 추가 ..... | 405 |
| 8. 사후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 추가 ..... | 406 |

|                    |     |
|--------------------|-----|
| II. 중소기업인 지원 ..... | 407 |
|--------------------|-----|

### [부가가치세법]

|                                  |     |
|----------------------------------|-----|
| 1.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 일몰연장 등 ..... | 407 |
| 2. 신용카드 매출세액 우대공제 일몰연장 .....     | 408 |
| 3.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시 천원미만 절사 .....     | 409 |
| 4. 사업폐업시 부가세 신고·납부 편의지원 .....    | 410 |

### [조세특례제한법]

|                       |     |
|-----------------------|-----|
| 5. 면세금지금제도 일몰연장 ..... | 411 |
|-----------------------|-----|

|                      |     |
|----------------------|-----|
| III. 산업 활성화 지원 ..... | 412 |
|----------------------|-----|

**[부가가치세법 · 시행령]**

- 1. 신용정보사 채권추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 ..... 412
- 2.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 413
- 3.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 ..... 414

**[조세특례제한법 · 시행령]**

- 4.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대한 세제지원 ..... 415
- 5.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에 대한 세제지원 ..... 416
- 6.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 ..... 417

**IV. 과세기반 확대 ..... 41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1.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과세 ..... 418
- 2. 의사 동물진료 용역에 대해 과세 ..... 419
- 3. 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해 과세 ..... 420

**V. 세원 투명성 제고 ..... 421**

**[부가가치세법 · 시행령]**

- 1. 간이과세 제도의 합리화 ..... 421
  - 가. 간이과세 적용기준 합리화 ..... 421
  - 나. 복식부기의무자는 간이과세 배제 ..... 422
- 2. 전자세금계산서의 성공적 정착 지원 ..... 423
  - 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423
  - 나.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제도 보완 ..... 424
  - 다. 공인인증서 발급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 425
  - 라. IPTV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등 ..... 426
- 3. 전부자료상에 대한 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 ..... 427
- 4. 위장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가산세 부과 ..... 428

**VI. 납세편의 제고 및 기타 제도 보완 ..... 429**

## **[부가가치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     |
|-----------------------------------------|-----|
| 1. 신용카드 등 당첨금 제도 폐지 .....               | 429 |
| 2. 사업자 미등록가산세 부과기준 개선 .....             | 430 |
| 3. 재고매입세액 공제 및 납부대상 자산에 ‘건설중인 자산’ 추가 .. | 431 |
| 4. ‘건설중인 자산’의 재고매입세액 계산 .....           | 432 |
| 5. 사업양수인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대상 명확화 .....        | 433 |
| 6. 사업자 단위사업과세 포기제한제도 폐지 .....           | 434 |
| 7.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      | 435 |
| 8. 공동사용건물의 매입세액 안분계산제도 개선 .....         | 436 |
| 9. 재수입에 대한 부가세 · 관세 면제범위 일치 .....       | 437 |
| 10. 면세소금의 범위 조정 .....                   | 438 |
| 11. 월합계세금계산서 기재사항 개선 .....              | 439 |
| 12. 영세율 적용대상 외교관 등의 정의 개선 .....         | 440 |
| 13. 계약해지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명확화 .....        | 441 |
| 14. 매입세액 불공제 소형승용차 범위 명확화 .....         | 442 |
| 15. 공급가액·부가세액 구분표시 사업자 범위 명확화 .....     | 443 |
| 16. 국제경쟁입찰방식 차관자금사업 VAT 영세율 폐지 .....    | 444 |
| 17. 한국은행에 부가세 납부시 신고서 제출규정 삭제 .....     | 445 |
| 18. 장기할부판매요건 명확화 .....                  | 446 |
| 19. 영수증 발급대상에 자동차 제조업 등 추가 .....        | 447 |
| 20.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조정 .....         | 448 |
| 21. 사업장의 범위 조정 .....                    | 449 |

## **[조세특례제한법 · 시행령]**

|                                    |     |
|------------------------------------|-----|
| 22.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시 공급중단제도 개선 ..... | 450 |
| 23. 외교관에 대한 VAT 사후환급절차 개선 .....    | 451 |

## **[농림특례규정]**

|                                       |     |
|---------------------------------------|-----|
| 24. 조세지원대상 농민의 범위 조정 .....            | 452 |
| 25. 면세유 지원대상 낚시어선의 범위 조정 .....        | 453 |
| 26.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장치 부착대상 농업기계의 범위 조정 .. | 454 |

|                            |     |
|----------------------------|-----|
| 27. 면세유 사후관리 대행기관 추가 ..... | 455 |
|----------------------------|-----|

## **[외국인특례규정]**

|                                 |     |
|---------------------------------|-----|
| 28.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 요건 신설 .....  | 456 |
| 29. VAT 사후환급 가능한 거래가액 명확화 ..... | 457 |
| 30. 일부품목에 대한 반출확인 절차 보완 .....   | 458 |

## **[개별소비세법·시행령·시행규칙]**

### **[1. 개별소비세법 관련]**

|                                        |     |
|----------------------------------------|-----|
| 1. 경마·경륜·경정장 장외발매소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과세 ..    | 462 |
| 2.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신고기한 합리화 .....           | 463 |
| 3. 개별소비세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도 도입 .....        | 464 |
| 4. 외국인 관광객 등의 유흥음식행위 개별소비세 면제제도 폐지 ... | 465 |
| 5. 주한외교관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제도 합리화 .....      | 466 |
| 6. 미납세반출제도 추가 .....                    | 468 |
| 7. 폐업 신고제도 간소화 .....                   | 469 |

### **[2.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                                       |     |
|---------------------------------------|-----|
| 8.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종료 .....            | 470 |
| 9. 택시 LPG부탄 유류세 지원체계 합리화 및 일몰연장 ..... | 471 |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관련]**

|                                      |     |
|--------------------------------------|-----|
| 1. 교통·에너지·환경세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도 도입 ..... | 476 |
| 2. 주한외교관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면제제도 합리화 ..  | 477 |
| 3. 미납세반출제도 추가 .....                  | 478 |
| 4. 폐업 신고제도 간소화 .....                 | 479 |

## [2.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 5. 바이오디젤 유류세 면제 일몰 1년 연장 ..... 480
- 6. 경차 유류세 환급 일몰 2년 연장 ..... 481

## [증권거래세법]

- 1.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규과세 ..... 486
- 2. 국가관리 공공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관세전환 명확화 ..... 487
- 3. 내국법인 증권예탁증권(DR) 증권거래세 과세 ..... 488

## [주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1. 탁·약주의 원료 및 주류 첨가재료 확대 ..... 492
- 2.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적용법률 명확화 ..... 493
- 3. 검사목적으로 수거하는 수입주류의 주세면제 ..... 494
- 4. 농민주의 생산자 및 제조원료 범위 확대 ..... 496
- 5. 국·공립연구기관 등의 시험재조시 제조면허 면제 ..... 497
- 6.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의 환급절차 간소화 ..... 498
- 7. 주류 제조시설 기준 완화 ..... 499
- 8.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완화 ..... 501
- 9. 의제주류판매업면허 범위 확대 ..... 502
- 10. 탁·약주의 알코올분 허용한도 확대 ..... 503
- 11. 탁·약주의 제조방법 다양화 ..... 504
- 12. 주류의 제조면허 등 신청 서류의 법령화 ..... 505

## [관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I. 수출입 통관질서 확립 ..... 511

|                                                  |            |
|--------------------------------------------------|------------|
| 1. 지식재산권 보호대상 확대 .....                           | 511        |
| 2. 허위·오인 표시 물품 통관제한 .....                        | 512        |
| 3. 특허보세구역 반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 신설 .....              | 513        |
| 4. 고액·상습 채납자 명단공개 범위 확대 .....                    | 514        |
| 5. 의무보관 신고서류에 반송신고서류 추가 .....                    | 515        |
| <b>II. 특혜원산지 제도 개선 .....</b>                     | <b>516</b> |
| 1. 특혜원산지 확인기준 적용 범위 추가 .....                     | 516        |
| 2.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근거 신설 .....                     | 517        |
| 3. 세관당국의 수출물품 원산지 조사권한 신설 .....                  | 518        |
| 4.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등 진위여부에 대한 조사 절차 및 방법<br>신설 ..... | 519        |
| 5. 수입물품 원산지증명서 확인요청 절차 신설 .....                  | 520        |
| <b>III. 관세감면제도 정비 .....</b>                      | <b>521</b> |
| 1. 방위산업용품 관세감면제도 및 항공기 항행안전용품 관세감면제도<br>폐지 ..... | 521        |
| 2.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기관 추가 .....                     | 522        |
| 3.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감면대상기관 추가 .....                   | 523        |
| 4.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세면제 .....                          | 524        |
| <b>IV. 기타 제도 개선 .....</b>                        | <b>525</b> |
| 1. 기본관세율 인하 .....                                | 525        |
| 2. 승객예약자료 제출범위 명확화 .....                         | 526        |
| 3. 수출입 중소기업 AEO 공인인증 획득 지원근거 마련 .....            | 527        |
| 4. 밀수품 취득죄 예비범에 대한 처벌 경감 .....                   | 528        |
| 5.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시 담보제공 생략 가능 범위 명확화 .....           | 529        |
| 6.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 등 범위 신설 .....                | 530        |



## **국세기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 시행령]

## 【개정 한 주요내용】

### I. 가산세 제도 개선

1.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제외
2. 사전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의 상속·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개선
3.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확대 등
4. 가산세 한도 인하
5.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추가

### II.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강화

6. 결정·경정이 있는 경우의 경정청구기간 명확화
7. 조세불복절차상 대리인 자격 확대
8.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외대상 명확화
9. 조기결정 신청대상 명확화

### III. 조세심판 등 제도 개선

10. 청구 취하와 재청구 금지 근거규정 정비
11. 심판조사관 명칭 정비
12.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
13. 조세심판관의 제척·회피 사유 구체화 등
14.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 요건 명확화

### IV. 기타 제도 보완

15. 법인 아닌 단체 기준 명확화 등
16.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추가
17. 국세 부과제척기간 보완
18. 국세우선 원칙의 예외 범위 조정
19.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위반시 세무조사 사유 추가 등
20. 국세환급가산금 이율 법령화 및 인하조정
21. 국세환급금 충당의 소급효 신설
22.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일몰 연장

**【국세기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일자】**

- 법 률 : 2010.12.27 (제10405호)
- 대통령령 : 2010.12.30 (제22572호)
- 기획재정부령 : 2011.4.11 (제205호)
- 법 률 : 2011.5.2 (제10621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일자】**

- 법 률 : 2010.12.27 (제10406호)

## I. 가산세 제도 개선

### 1.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제외 (법§47의2⑦ · §47의3③)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무신고 ·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제외 신설<br><br>○ 양도소득세, 상속 · 증여세 결정 · 경정시 추가납부세액<br>(가산세액 제외)이 없는 경우 |

#### (2) 개정이유

- 면제 또는 각종 공제 등으로 추가 납부할 양도소득세액 또는 상속 · 증여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납세자의 신고부담을 완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 · 결정 ·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2. 사전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의 상속·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개선 (법§47의2⑧·§47의3③)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상속·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p> <p>○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 가산세율</p> <p>* (상속재산가액 + 사전 증여재산가액 - 상속공제액 등) × 상속세율</p> | <p>□ 사전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의 상속·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개선</p> <p>○ 산출세액 계산방법 합리화<br/>⇒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 가산세율</p> |

### (2) 개정이유

- 상속·증여세 결정·경정시 합산되는 사전 증여재산의 경우 이미 증여세를 신고·납부했거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합리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3.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확대 등 (법§48②)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p> <p>○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시 : 50% 감면</p> | <p>□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확대 등</p> <p>○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시 : 50% 감면</p> <p>○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시 : 20% 감면</p> |

#### (2) 개정이유

- 가산세 감면대상이 되는 기한 후 신고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도 자진 신고·납부를 유도
-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 뿐 아니라 납부의무도 이행해야 함을 명확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 4. 가산세 한도 인하 (법§49①)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가산세 한도<br>* 단순한 협력의무 위반으로서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br><br>○ 1억원 | <input type="checkbox"/> 가산세 한도 인하<br><br>○ 5천만원<br>- 단,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2①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

##### (2) 개정이유

-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등의 경우 가산세 한도의 혜택을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가산세 한도를 낮춤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 5.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추가 (법§49①4호)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 중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p> <p>○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 사용계획 등 보고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법§78③)</p> <p>○ 공익법인 등 외부전문가 세무 확인에 대한 보고불이행 가산세 (법§78⑤)</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 <p>□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 중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추가</p> <p>○ 지급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법§78⑫ · ⑬)</p> |

### (2) 개정이유

- 지급명세서 등 제출의무도 단순 협력의무에 불과하므로 그 위반에 따른 가산세에 대해서도 가산세 한도를 적용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Ⅱ.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강화

### 6. 결정·경정이 있는 경우의 경정청구기간 명확화 (법§45의2①)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경정청구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li> <li>○ 결정·경정이 있는 경우에는<br/>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br/>기간(90일)</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결정·경정이 있는 경우의 경정<br/>청구기간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수정신고분) 법정신고<br/>기한 경과 후 3년</li> <li>- (결정·경정에 따른 증가분)<br/>결정·경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br/>부터 90일</li> </ul> </li> </ul> |

#### (2) 개정이유

- 결정·경정이 있는 경우에도 결정 등에 따른 증가분에 한해 90일의 경정청구기간이 적용될 뿐 최초·수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3년임을 명확화

## 7. 조세불복절차상 대리인 자격 확대 (법§59②)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br>절차에서의 대리인 자격<br><input type="checkbox"/> 변호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br><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 <input type="checkbox"/> 대리인 자격 확대<br><input type="checkbox"/> (좌 동)<br><input type="checkbox"/> 소액사건(심판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의 경우 배우자 및 본인 ·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도 가능 |

### (2) 개정이유

- 조세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어려운 소액사건에 대한 불복절차에서의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신청 ·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8.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외대상 명확화 (법§81의15②)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외대상<br>○ 납기전징수 사유가 있거나 수시 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br>○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br>○ 국세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br>○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input type="checkbox"/> 제외대상 명확화<br>○ (좌 동)<br>○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br>○ (좌 동)<br>○ (좌 동) |

### (2) 개정이유

- 조세범칙사건으로 조사한 결과 무혐의 등으로 고발 또는 통고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가능함을 명확화

## 9. 조기결정 신청대상 명확화 (법§81의15⑦)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조기결정 신청대상</p> <p>○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세무조사결과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 통지의 내용</p> <p>※ 조기결정 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조사결과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30일)의 미납가산세 등 부담이 경감되도록 과세표준·세액을 즉시 결정고지하는 제도</li> </ul> | <p>□ 신청대상 명확화</p> <p>○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 통지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p> |

### (2) 개정이유

-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내용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의가 있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의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기결정 신청이 가능함을 명확화

### Ⅲ. 조세심판 등 제도 개선

#### 10. 청구 취하와 재청구 금지 근거규정 정비 (법§56①)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심사청구·심판청구 관련 「행정심판법」 준용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대표자(법 §15)</li> <li>○ 청구인 지위 승계(법 §16)</li> <li>○ 심판참가(법 §20~§22)</li> <li>○ 청구인 변경(법 §29)</li> <li>○ 직권심리(법 §39)</li> <li>○ 심리의 방식(법 §40)</li> </ul> | <input type="checkbox"/> 「행정심판법」 준용규정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판청구 등의 취하(법 §42)</li> <li>○ 심판재청구의 금지(법 §51)</li> </ul> |

##### (2) 개정이유

- 심판청구 등의 취하는 당연히 허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심사청구·심판청구 취하 근거를 명확화
- 불필요한 분쟁절차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 재청구 금지 근거를 명확화

## 11. 심판조사관 명칭 정비 (법§67⑦)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조세심판원에서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조사사무를 담당하는 직위 명칭(과장급)<br><br>○ 조사관 | <input type="checkbox"/> 명칭 정비<br><br>○ 심판조사관 |

### (2) 개정이유

- 조세심판원에서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조사사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 역할과 직위에 맞는 명칭 부여

## 12.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 (법§69③)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심판청구에 대한 세무서장의 답변서<br>제출기한<br><br>○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 <input type="checkbox"/>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br><br>○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

### (2) 개정이유

- 최근 국제거래·금융거래 증가 등으로 인해 심판청구사건의 쟁점이 복잡·전문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한과 동일하게 연장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신청·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13. 조세심판관의 제척·회피 사유 구체화 등 (법§73①·②·§74의2)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조세심판관의 제척·회피 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호) 청구인·대리인의 친족</li> <li>○ (2호) 청구인·대리인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기타 청구인·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 <p>□ 제척·회피 사유 구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호) 청구인·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li> <li>○ (2호) 1호의 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li> <li>○ (3호) 1호의 자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li> <li>○ (4호) 불복대상 처분 등에 관해 증언·감정을 한 경우</li> <li>○ (5호) 청구일 전 5년 이내에 세무공무원으로서 불복대상 처분 등에 관여한 경우</li> <li>○ (6호) 기타 청구인·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li> </ul> <p>□ 심판조사관에 대해서도 조세심판관의 제척·회피·기피에 관한 규정(법 §73·§74) 준용</p> |

#### (2) 개정이유

- 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세심판관의 제척·회피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척·회피·기피 대상을 심판조사관에 까지 확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신청·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14.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 요건 명확화 (법§78②)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 요건<br>○ 종전의 심판결정례를 변경하는 의결을 하는 경우<br>○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input type="checkbox"/> 상정 요건 명확화<br>○ 종전에 조세심판원에서 한 세법의 해석적용을 변경하는 의결을 하는 경우<br>○ (좌 동) |

### (2) 개정이유

-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상정 요건을 명확히 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세심판 운영 도모

## Ⅳ. 기타 제도 보완

### 15. 법인 아닌 단체 기준 명확화 등 (법§13, 영§8)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법인격 없는 단체<br><br>○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 <input type="checkbox"/> 법인 아닌 단체(약칭 변경)<br><br>○ 법인세법상 법인(§1 1·3호의 내국법인·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

#### (2) 개정이유

- 특히 국외 단체의 경우 법인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입법례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인격이 없는’ 단체 대신 ‘법인세법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로 기준 명확화

## 16.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추가 (영§9의3③)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1명 포함,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li> <li>○ 위원장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li> <li>○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재정부 · 법제처 · 국세청 · 관세청 소속 3급 공무원 ·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위원장 지명 · 소속기관장 추천)</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 · 회계 또는 경제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장 위촉)</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 추가</li> <li>- 조세심판원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원장 추천)</li> </ul> |

### (2) 개정이유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에 국세 관련 행정심판기관인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을 추가함으로써 세법 해석의 전문성 및 통일성을 제고

## 17. 국세 부과제척기간 보완 (법§26의2①1호의2)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국세 부과제척기간</p> <p>○ 부당한 방법*으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 : 10년</p> <p>*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p> <p>&lt;신 설.&gt;</p> <p>○ 일반 무신고 : 7년</p> <p>○ 일반 과소신고 : 5년</p> | <p>□ 부과제척기간 특례</p> <p>○ (좌 동)</p> <p>○ 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부과되는 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 등 불성실가산세* : 10년</p> <p>* 소득세법 §81③4호, 법인세법 §76⑨1호·부가세법 §22③·⑥</p> <p>○ (좌 동)</p> <p>○ (좌 동)</p> |

### (2) 개정이유

- 자료상이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더라도 매출·매입 금액을 맞추어 본세액의 포탈이 없는 경우 부당한 방법에 해당됨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못하는 불균형 해소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 또는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

## 18. 국세우선 원칙의 예외 범위 조정 (법§35①1호)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국세우선 원칙*의 예외<br>* 국세·가산금·채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br>기타 채권에 우선<br>○ 지방세·공과금 채납처분시 그<br>채납처분금액에서 국세·가산금·<br>채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br>- 그 지방세·공과금의 가산금·<br>채납처분비는 국세에 우선 | <input type="checkbox"/> 예외 범위 조정<br><br>- 그 지방세·공과금의 채납처분비는<br>국세에 우선 |

### (2) 개정이유

- '09년말 법 개정으로 채납 공과금 총당 순서가 '채납처분비-공과금-가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과금은 국세보다 후순위임에도 공과금의 가산금을 국세보다 우선하게 되는 불합리 해소

\* (개정전) 채납처분비-가산금-공과금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 19.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위반시 세무조사 사유 추가 등 (법§47의2⑤ · §81의6②1호)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무신고가산세와의 중복 부과 배제 대상<br>* 가산세액이 큰 쪽만 적용(가산세액이 같으면 무신고가산세만 적용)<br><input type="checkbox"/> 기장의무불성실가산세(소득세법 §81⑧ · §115, 법인세법 §76①)<br><신 설>                                                                                                      | <input type="checkbox"/> 중복 부과 배제 대상 추가<br><input type="checkbox"/> (좌 동)<br><input type="checkbox"/> 성실신고확인서제출의무불성실가산세(소득세법 §81⑬) 추가 |
| <input type="checkbox"/> 수시 세무조사 사유<br><input type="checkbox"/> 신고, 계산서·세금계산서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 작성·제출 등 의무 위반<br><input type="checkbox"/>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br><input type="checkbox"/> 구체적인 탈세 제보<br><input type="checkbox"/> 신고내용의 탈루·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 명백한 자료 | <input type="checkbox"/> 수시 세무조사 사유 추가<br><input type="checkbox"/>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위반 추가                                                 |

### (2) 개정이유

-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8.3.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20. 국세환급가산금 이율 법령화 및 인하조정 (규칙§13의2)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국세환급가산금 이율</p> <p>○ 은행권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br/>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br/>장관이 정하여 고시</p> <p>- 1일 10만분의 11.8(연 4.3%)</p> <p>*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5호(2010.3.3.1)</p> | <p>○ 시행규칙에 직접 규정</p> <p>- 연 3.7%로 인하</p> |

### (2) 개정이유

- 납세자가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법령화하는 한편, 은행권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변동상황을 감안하여 인하조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4.1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 21. 국세환급금 총당의 소급효 신설 (법§51③, 영§32)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국세환급금의 총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환급금 결정시 다음 국세 등에 총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li> <li>(ii) 체납된 국세·가산금 체납처분비</li> <li>(iii) 자진 납부하는 국세</li> </ul> </li> <li>· 단, (i)(iii)의 경우 납세자가 총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 <p><input type="checkbox"/>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총당시 소급효 부여</p> <p>○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시점으로 소급</p> <p><input type="checkbox"/> 국세환급금 발생일</p> <p>○ 착오·이중납부 또는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부과의 취소·경정에 따른 환급 : 납부일</p> <p>○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에 따른 환급 : 감면 결정일</p> <p>○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개정에 따른 환급 : 개정법률 시행일</p> <p>○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에 따른 환급세액 신고 또는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에 따른 환급 : 신고일(미신고로 인한 결정에 따른 환급의 경우 결정일)</p> <p>○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 : 연말정산·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만료일</p> |

(2) 개정이유

- 국가의 징수노력에 불구하고 압류선택주의에 따라 제3자가 우선 만족을 얻게 되는 불합리를 개선
- 국세환급금 충당이 소급효 인정으로 체납된 국세의 소멸시점이 앞당겨짐으로써 체납자의 가산금 부담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대한 충당분부터 적용

## 22.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일몰연장 (조특법§99의5)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p> <p>○ (적용대상) 개인사업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12.31 이전에 폐업</li> <li>- '10.1.1~'10.12.31 기간 중 사업 재개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li> <li>- 폐업 전 3년간 연평균 수입금액 2억원 미만 등</li> </ul> <p>○ (대상세액) '09.12.31 이전에 결손처분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농특세·가산금·채납처분비 포함)</p> <p>○ (신청기간) '11.12.31까지</p> <p>○ (소멸한도) 1인당 500만원</p> | <p>□ 일몰연장(2년)</p> <p>○ (적용대상) 개인사업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12.31 이전에 폐업</li> <li>- '10.1.1~'12.12.31 기간 중 사업 재개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li> <li>- (좌 동)</li> </ul> <p>○ (대상세액) '11.12.31 이전에 결손처분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농특세·가산금·채납처분비 포함)</p> <p>○ (신청기간) '13.12.31까지</p> <p>○ (좌 동)</p> |

### (2) 개정이유

- 국세 채납액으로 인해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국세징수법



# [국세징수법]

## 【개정 한 주요내용】

### I. 공매 절차 개선

1. 참가압류자 공매허용
2. 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 제도 신설
3. 공매공고 사항 추가
4. 공매공고의 등기 제도 신설
5. 배분요구 의무화 및 채권신고, 배분요구 안내통지 제도 신설
6. 공매물건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규정 신설
7. 공매절차 기한의 명확화
8. 매각결정 규정 정비
9. 배분기일의 지정 규정 신설
10. 배분계산서 원안 작성 및 비치, 공매기록 열람·복사 대상 확대
11. 배분에 대한 이의절차 제도 신설

### II. 기타 법 조문 정비

1. 알기쉬운 법률 정비
2. 가산금 조항 정비 및 증가산금 조항 삭제

### 【법 개정일자】

- 법      른 : 2011.4.4(제10527호)

# I. 공매 절차 개선

## 1. 참가압류자 공매 허용 (법 §58)

### (1) 개정 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압류재산 공매권자<br>: 최초 압류한 기관<br><br><div style="text-align: center;">&lt; 신 설 &gt;</div> <div style="text-align: center;">&lt; 신 설 &gt;</div> | <input type="checkbox"/> 압류재산 공매권자 확대<br><br><div style="margin-left: 40px;"> <input type="checkbox"/> ① 최초 압류한 기관<br/> <input type="checkbox"/> ② 참가압류한 세무서장<br/> (단, 최초 압류한 기관이 매각<br/>최고를 받고 3개월 이내 다음<br/>어느 하나의 매각절차에 착수하<br/>지 않는 경우 허용) </div> <input type="checkbox"/> 참가압류한 세무서장이 공매에<br>착수할 경우 그 내용을 기압류<br>기관에 통지<br><br><input type="checkbox"/> 통지를 받은 기압류기관은 점유<br>중인 압류재산을 참가압류한<br>세무서장에게 인도 |

### (2) 개정 이유

- 최초 압류한 기관이 공매착수를 지연하는 경우 후행 참가  
압류한 세무서장의 공매를 허용하여 공매 지체를 방지  
⇒ 공매지체시 발생하는 조세채권징수 지연 및 채납자의 납부가산금  
증가 문제 해결

### (3) 적용 시기 및 적용례

- 2011.4.4 이후 최초로 매각처분을 최고하는 분부터 적용

## 2. 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 제도 신설 (법 §62의2)

### (1) 개정 내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세무서장의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재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li> <li>○ (권한) 건물 출입, 채무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 또는 문서 제시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 가능</li> </ul> </li> </ul> |

### (2) 개정 이유

- 공매물건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조사하고 공시하기 위해 현황조사제도를 의무화
  - 정확한 현황조사를 위해서 세무공무원에게 민사집행법상의 집행관에 준하는 권한 부여

### (3) 적용 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공매하는 분부터 적용

### 3. 공매공고 사항 추가 (법 §67)

#### (1) 개정 내용

| 종 전                                                                                                                                                                                                                                                                                                                                          | 개 정                                                                                                                                                                                                                                                                                                                                                                                                                   |
|----------------------------------------------------------------------------------------------------------------------------------------------------------------------------------------------------------------------------------------------------------------------------------------------------------------------------------------------|-----------------------------------------------------------------------------------------------------------------------------------------------------------------------------------------------------------------------------------------------------------------------------------------------------------------------------------------------------------------------------------------------------------------------|
| <p><input type="checkbox"/> 공매공고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li> <li>2. 공매재산의 명칭·소재·수량·품질·매각예정가격 기타 중요한 사항</li> <li>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li> <li>4. 개찰의 장소와 일시</li> <li>5. 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li> <li>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li> </ol> <p style="text-align: center;">&lt; 이하 신설 &gt;</p> | <p><input type="checkbox"/> 공매공고 사항 추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7. 배분요구의 종기(終期)<br/>: 최초 입찰기일 이전으로 정함</li> <li>8.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li> <li>9. 매각결정 기일<br/>: 개찰일부터 3일 이내로 정함</li> <li>10. 매각으로도 소멸하지 아니하는 공매재산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li> <li>11. 공매재산의 매수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사실</li> <li>12. 제68조의3제2항에 따른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내용 및 기간</li> </ol> |

(2) 개정 이유

- 배분요구 종기 및 매각결정 기일 신설 등에 맞추어 공고 내용을 추가하여 원활한 공매절차 진행 및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 제고

(3) 적용 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

#### 4. 공매공고의 등기 제도 신설 (법 §67의2, §71의2)

##### (1) 개정 내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공매공고 후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 촉탁 (§67의2)<br><br><input type="checkbox"/> 공매취소의 공고 (§69), 공매의 중지 (§71), 매각결정 취소 (§78①1호) 시에는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촉탁 (§71의2) |

##### (2) 개정 이유

- 공매공고 사실을 명확히 공시하여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

##### (3) 적용 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

## 5. 배분요구 의무화 및 채권신고, 배분요구 안내통지 제도 신설 (법 §68의 2, §81 ①)

### (1) 개정 내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p>□ 배분요구 의무화</p> <p>○ 대상 채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의 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압류에 관계되는 채납액</li> <li>ii)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채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li> <li>iii)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li> <li>iv)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li> <li>v)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li> <li>vi)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 채권</li> <li>vii)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li> </ul> </li> <li>- 최선순위 전세권(매각으로 소멸되지 않은 전세권)</li> </ul> <p>○ 배분요구 기한 : 배분요구의 종기까지</p> <p>○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의 인수부담이 달라지는 경우 배분 요구를 한 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철회 불가</p> <p>○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배분 (법 §81 ①)</p> |

|  |                                                                                                                                                                                                                                                                                                                                                                                                                                                                                                                                                                        |
|--|------------------------------------------------------------------------------------------------------------------------------------------------------------------------------------------------------------------------------------------------------------------------------------------------------------------------------------------------------------------------------------------------------------------------------------------------------------------------------------------------------------------------------------------------------------------------|
|  | <p>□ 채권신고 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서장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에 등기·등록된 위 i)~vii)의 채권을 가진 자에게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신고하도록 최고</li> <li>○ 세무서장은 해당 채권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해당 채권자의 채권액을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경우 해당 채권자는 채권액 추가 불가</li> </ul> </li> </ul> <p>□ 배분요구 안내 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서장은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다음 채권자에게 통지(다만, 공매통지로 같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분요구 의무화 대상</li> <li>- 국세청, 관세청</li> <li>- 행정안전부</li> <li>-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li> </ul> </li> </ul> |
|--|------------------------------------------------------------------------------------------------------------------------------------------------------------------------------------------------------------------------------------------------------------------------------------------------------------------------------------------------------------------------------------------------------------------------------------------------------------------------------------------------------------------------------------------------------------------------|

## (2) 개정 이유

- 공매공고 등기 후 첫 입찰기일 전에 배분요구 종기를 설정하고 배분요구를 의무화함으로써 입찰 전에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  
⇒ 공매물건이 적정한 가격에 낙찰되도록 하여 매수인, 채납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국고 손실 방지

## (3) 적용 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

## 6. 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규정 신설 (법 §68의 3)

### (1) 개정 내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p><input type="checkbox"/> 세무서장은 현황조사(법§62의 2)를 기초로 공매 재산명세서 작성</p> <p>○ 명세서 내용 : 공매재산에 관한 사항, 점유관계 등, 배분요구 및 채권신고 현황, 공매재산에 대한 등기 된 권리 및 가치분,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p> <p><input type="checkbox"/> 세무서장은 공매재산명세서, 감정평가서 등을 세무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입찰참가자에게 열람</p> <p>○ 열람기간 : 입찰시작 7일전부터<br/>입찰마감 전까지</p> |

### (2) 개정 이유

- 조세채권 신고 및 임차인의 배당요구 사항 등 입찰 관련 충분한 정보를 입찰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단, 공매재산명세서에는 조세채권 신고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감안하여 열람기간을 제한

### (3) 적용 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

## 7. 공매절차 기한의 명확화 (법 §69, §71 ①, §73의2 ①)

### (1) 개정 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공매취소의 공고<br>○ “매각결정통지 전”에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때        | <input type="checkbox"/> 공매취소의 공고<br>○ “매각결정 기일 전”에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때        |
| <input type="checkbox"/> 공매의 중지<br>○ “매각결정통지 전”에 채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채납세액을 완납한 때 | <input type="checkbox"/> 공매의 중지<br>○ “매각결정 기일 전”에 채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채납세액을 완납한 때 |
| <input type="checkbox"/> 공유자의 우선매수 신고<br>○ 낙찰자가 “매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기 전”          | <input type="checkbox"/> 공유자의 우선매수 신고<br>○ “매각결정 기일 전”                      |

### (2) 개정 이유

- 매수인의 매각결정통지서 수령 시점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매각결정통지 전’보다 공고에 의해 미리 정해지는 ‘매각결정 기일 전’으로 변경하여 이해관계인의 법적 예측가능성 제고

### (3) 적용 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

## 8. 매각결정 규정 정비 (법 §75)

### (1) 개정 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매각결정 규정</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 서무서장은 매각결정 한 때 매수인에게 매각결정 통지서 발급</p> <p>○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기한</p> <p>-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내</p> <p>- 필요시 납부기한을 60일 한도로 연장 가능</p> | <p>○ 세무서장은 매각결정 기일에 낙찰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p> <p>- 예외 :</p> <p>i) 매각결정 전에 법§71에 따른 공매중지사유가 있을 경우</p> <p>ii) 낙찰자가 §72에 따른 공매 참가의 제한을 받는 자로 확인된 경우</p> <p>iii) §73의 2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의 신고를 한 경우</p> <p>iv)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p> <p>○ 매각결정의 효력 : 매각결정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 발생</p> <p>○ (좌동)</p> <p>○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기한 연장 기간 단축</p> <p>- (좌동)</p> <p>- 필요시 납부기한을 30일 한도로 연장 가능</p> |

(2) 개정 이유

- 매각결정 시기·효력을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 발생 방지
- 매각기간 단축에 따른 체납액 조기 충당으로 체납자의 가산금 부담이 완화되고 전체적인 공매행정의 효율성 증대 기대

(3) 적용 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

## 9. 배분기일의 지정 규정 신설 (법 §80의 2)

### (1) 개정 내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배분기일의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서장은 잔대금 완납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배분기일을 정하고, 채납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30일 이내 배분계산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 30일 내에서 배분기일 연기 가능</li> </ul> </li> <li>○ 세무서장은 채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에게 배분기일을 통지</li> </ul> |

### (2) 개정 이유

- 배분기일을 지정하여 배분계산서 작성 및 배분에 대한 이의 신청 기한의 기준이 되도록 함

### (3) 적용 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

## 10. 배분계산서 원안 작성 및 비치, 구매기록 열람·복사 대상 확대 (법 §83)

### (1) 개정 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배분계산서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서장은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에게 교부</li> <li>○ 체납처분은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종결</li> <li>○ 구매기록 열람·복사 대상 - 배분계산서</li> <li>○ 세무서장은 열람 또는 복사 신청에 응하여야 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분기일 7일 전까지 배분계산서 원안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삭 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매기록 열람·복사 대상 확대 - 배분계산서 원안,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li> <li>○ (좌 동)</li> </ul> |

### (2) 개정 이유

- 배분순위 및 배분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기록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여 구매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 (3) 적용 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구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

## 11. 배분에 대한 이의절차 제도 신설 (법 §83의2)

### (1) 개정 내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절차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분기일에 출석한 채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 제기 가능</li> <li>○ 채납자의 경우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서면으로 이의제기 가능</li> <li>○ 이의가 없거나 이의내용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은 배분계산서 원안대로 확정</li> <li>○ 이의가 정당하거나 당사자간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 경정하여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확정</li> </ul> |

### (2) 개정 이유

-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와 유사하게 배분처분에 대한 사전 이의신청 절차를 도입하며,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제고

### (3) 적용 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

## Ⅱ. 기타 법 조문 정비

### 1. 알기쉬운 법률 정비 (법 전반)

#### (1) 개정 내용

| 종 전   | 개 정                                                                                                                                                                                                                                                               |
|-------|-------------------------------------------------------------------------------------------------------------------------------------------------------------------------------------------------------------------------------------------------------------------|
| <정 비> | <div><input type="checkbox"/> 용어 및 표현 정비</div>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교부,’ ‘기재’ 등 어려운 한자를 쉬운말로 수정</li><li>○ ‘관하여,’ ‘당해’ 등 일본식 용어 수정</li><li>○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를 준용하다’ 등의 축약·단서·준용 조문의 내용을 풀어씀</li><li>○ 그밖에 법 내용에 맞게 조제목 정비</li></ul></div> |

#### (2) 개정 이유

- 법적 간결성·합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국민의 이해가능성을 제고

#### (3) 적용 시기 및 적용례

- 2011.4.4부터 시행

## 2. 가산금 조항 정비 및 중가산금 조항 삭제 (법 §21, §22)

### (1) 개정 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가산금</p> <p>○ 국세채납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00분의 3의 가산금 징수</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 <p>○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가산 하여 징수</p> <p>-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채납 국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p> <p>- 가산금 징수기간은 60개월 초과 불가</p> |
| <p>□ 중가산금</p> <p>○ 채납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간 경과 후 1개월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가산</p> <p>-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채납 국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p> <p>- 가산금 징수기간은 60개월 초과 불가</p> | <p style="text-align: center;">&lt;삭 제&gt;</p>                                                                                           |

(2) 개정 이유

- ‘증가산금’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가산금’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써 ‘가산금’만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등 타 세법과의 일관성 유지

(3) 적용 시기 및 적용례

- 2011.4.4부터 시행



## **소득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소득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개정된 주요내용】

### I. 총괄 · 사업소득

#### 가. 기부금 세제 개선

1. 특례기부금 폐지
2. 법정기부금 개선
3.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확대
4. 기부금 특별공제 개선

#### 나. 세원투명성 제고

1.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강화
2.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일몰 연장 등
3. 계산서불성실가산세 강화
4.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시 가산세 보완
5.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 특례 일몰 연장

#### 다. 비과세 · 감면 정비

1.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종료

#### 라. 납세편의 제고 등 기타 제도 개선

1. 성실납세제도 폐지
2. 사업장별 구분 경리 개선
3. 사업장현황 신고제도 개선
4.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개선

5.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전산자료 제공 요청 신설
6.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신고방법 명확화
7. 조세법률주의 관련 위임입법 개선
8. 사업용계좌 제도 개선
9.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과세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개선
10. 신규사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축소
11. 대손금의 귀속시기 명확화
12. 소득세 추계신고자의 소득상한배율 적용기한 명확화
13. 농수산물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 제도 보완
14. 사업소득원천징수 내역의 매입처별합계표 기재의무 폐지
15. 「노동조합법」을 초과하여 노조전임자에게 급여 지급시 손비 부인
16. 퇴직급여충당금 한도를 단계적 축소·폐지
17. 퇴직 보험·신탁 기 적립금에 대한 처리
18.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 즉시상각 허용
19.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조정
20. 조정반 지정 제한 사유 완화
21. 기타 조문 정리

## II. 근로소득

### 가. 저출산·고령화 대비

1.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 나. 중산·서민층 지원

1. 근로장학금에 대한 비과세
2.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3.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연장

#### 다. 기타 제도 개선

1.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연말정산 제도 개선
2. 기타 원천징수 관련 법령 체계 정비
3. 외국인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4.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확인·관리방법 개선
5.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6. 외국인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7. 기타 조문정리

### Ⅲ. 금융소득

#### 가. 비과세·감면 정비

1. 창투조합 등 출자금 소득공제 일몰연장
2.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 일몰 종료
3. 선박투자회사 과세특례 축소 및 일몰 연장
4.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 일몰 연장
5.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일몰 종료
6.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공제금액 축소

#### 나. 기타 제도 개선

1. 보유기간 과세대상에서 펀드이익 제외
2. 종합과세대상에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포함
3. 대차거래 수수료·보상액의 소득구분
4.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조정
5.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평가손익에 대한 손실

- 상계 대상 펀드이익의 범위 확대
- 6. 대차거래 보상액의 소득구분 신설
- 7. 펀드이익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 1) 매매·평가차익이 과세제외되는 증권의 요건 완화
  - 2) 펀드 매도시 배당소득세 과세 제외대상 명확화
- 8. 기타 조문정리

#### IV. 퇴직·연금·기타소득

##### 가. 저출산·고령화 대비

- 1.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2. 퇴직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축소

##### 나.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

- 1. 개인의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 유예

##### 다. 기타 제도 개선

- 1.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여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기타소득으로 과세
- 2. 교수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 마련
- 3.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신고 규정 보완

####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 소득세법 : 2010.12.27(제10408호)
- 조세특례제한법 : 2011.12.27(제10406호)
- 소득세법 시행령 : 2011.12.30(제22580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 2011.3.28(제195호)

# I. 총괄 · 사업소득

## 가. 기부금 세제 개선

### 1. 특례기부금 폐지(조특법 §73)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input type="checkbox"/> 다음 기부금(특례기부금)은 소득 금액의 50%(개인 · 법인 공통)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허용</p> <p>○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12.31 이전 지출분</li> <li>· 단, 대학교 시설비등 기부금은 ‘10.12.31 이전 지출분</li> </ul> <p>○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진흥기금 (개인 100%한도)</li> <li>- 대학병원 등에 시설비 · 교육비 ·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li> <li>- 대학교등에 시설비 · 교육비 · 장학금 · 연구비 명목 기부금 (법인 100% 한도)</li> <li>-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한정)</li> <li>- 독립기념관, EBS, 한국국제 교류재단, 국민신탁법인</li> <li>-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li> <li>- 사회복지공동모금회</li> </ul> | <p><input type="checkbox"/> 특례기부금 폐지</p> <p>○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7월부터 적용</li> <li>* ‘11.7월부터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재분류 · 지원</li> <li>** 대학교 시설비등 기부금은 ‘11년부터 법정기부금으로 지원</li> </ul>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식·빈곤층아동 지원</li> <li>-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박물관<br/>자료·미술관자료 기부</li> <li>-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 등</li> </ul> |  |
|------------------------------------------------------------------------------------------------------------------------------------|--|

## (2) 개정이유

- 현행 법정·특례·지정 기부금 구분 체계를 법정·지정 기부금  
구분 체계로 간소화
  - 현행 특례기부금은 분류기준에 맞추어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  
으로 재분류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7. 1 이후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 대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명목 기부금은 ‘10년말  
일몰 폐지

## 2. 법정기부금 개선(법 §34②)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법정기부금 : 소득의 100% 범위<br/>에서 비용 인정</p> <p>○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국군<br/>장병 위문금품</li> <li>- 천재·지변에 따른 이재민 구호<br/>금품</li> <li>-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가액</li> <li>- 공공 교육기관*에 시설비·<br/>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br/>지출하는 기부금</li> </ul> <p>* 사립학교,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외<br/>국교육기관, 산학협력단, 사립학교 시설<br/>확충 목적의 비영리재단법인, KAIST·<br/>GIST·DGIST(개인 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 의료기관*에 시설비·<br/>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br/>지출하는 기부금</li> </ul> <p>* 국립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p> <p>※ 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국립암센터, 대한<br/>적십자사병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br/>명목 기부금은 특례기부금</p> | <p>○ 법정기부금 범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좌 동</li> <li>- 좌 동</li> <li>- 좌 동</li> </ul> <p>* 사립학교,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외<br/>국교육기관, 산학협력단, 사립학교 시설<br/>확충 목적의 비영리재단법인, KAIST·<br/>GIST·DGIST(개인·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 대상 확대</li> </ul> <p>* 사립대병원, 국립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br/>치과병원, 국립의료원, 지방의료원, 국립암센터,<br/>대한적십자사병원</p>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 적십자사 지출 기부금</li> <li>-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금액</li> <li>- 무료·실비 사회복지시설, 불우 이웃돕기 결연기관 기부금</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모금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금 모집·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法)</li> </ul> </li> <li>- 「공공기관운영법」上 공공기관 (단, 공기업 제외) 및 개별법에 설립근거가 있는 기관으로서 수입 상당부분이 기부금·정부 지원금인 법인·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의료·학술·연구·장학·자선·사회 복지·문화·예술·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한정</li> <li>▪ 6년마다 수입요건 등 충족 여부를 재심사하여 존치·삭제 결정</li> </ul> </li> <li>- 지정기부금으로 재분류</li> </ul> |
|---------------------------------------------------------------------------------------------------------------------------------------------------|----------------------------------------------------------------------------------------------------------------------------------------------------------------------------------------------------------------------------------------------------------------------------------------------------------------------------------------------------------------------------------------------------------------------------------------------|

## (2) 개정이유

- 현행 법정·특례·지정 기부금 구분 체계를 법정·지정 기부금 구분 체계로 간소화
  -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 기부 활성화 지원 및 특례기부금 폐지 등을 감안하여 법정기부금 범위를 확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7.1 이후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3.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확대(법 §34①, §52⑥)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지정기부금 한도<br>○ 소득의 20% 범위 내 비용 인정<br>* 종교단체는 10% 범위 내 | <input type="checkbox"/>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br>○ 소득의 30% 범위 내 비용 인정<br>* 종교단체는 10% 범위로 현행 유지 |

#### (2) 개정이유

- 세제상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기부활성화 도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1. 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 4. 기부금 특별공제 개선(법 §34④, §52⑥)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br>○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br>○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b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납세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 <input type="checkbox"/>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 확대<br>○ (좌 동)<br>○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 형제자매 등)가 지출한 기부금 |

##### (2) 개정이유

- 다른 지출경비의 소득공제 대상과 동일하게 기부금 공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기부금으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나. 세원투명성 제고

### 1.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강화(법 §§81⑪)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br>가산세<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li> <li>○ 가산세율<br/>- 미가입기간 총수입금액의 0.5%</li> </ul> | <input type="checkbox"/>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br>가산세 강화<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가산세율 인상<br/>- 미가입기간 총수입금액의 1%</li> </ul> |

#### (2) 개정이유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합리적으로 보완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1. 1 이후 결정세액에 더하는 분부터 적용

2.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일몰 연장 등(조특법 §122의3)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input type="checkbox"/> 성실사업자에 대해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p> <p>○ 성실사업자</p> <p>–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li> <li>·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li> <li>·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li> <li>· 3년평균 수입금액대비 1.0 배 초과</li> </ul> <p>○ 일몰기한 : '10.12.31</p> | <p>○ (좌 동)</p> <p>○ 일몰 연장 : '12.12.31</p> |

## (2) 개정이유

- 거래내역이 노출되어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성실사업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1. 1. 이후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3. 계산서불성실가산세 강화(소법 §81③)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계산서불성실가산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산서 미발급 또는 부실기재,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부실 기재</li> <li>○ 가산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가액의 1%</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산세 대상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공(위장) 계산서 授受</li> </ul> </li> <li>○ 가산세율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 수수 : 공급가액의 2%</li> <li>- 그 외 : 공급가액의 1%</li> </ul> </li> </ul> <p>* 단,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2%)와 중복 배제</p> |

#### (2) 개정이유

-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수준으로 강화하여 계산서 교부질서의 정상화 유도
  - 다만, 가산세의 중복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공(위장) 계산서 수취에 대해 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의 적용은 배제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 4.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시 가산세 보완(소법 §81①)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br><br>○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br><br>○ 가산세율 : 지급금액의 2%<br>- 제출기한 1개월 이내 제출시 1% | ○ 가산세 대상 확대<br>-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br><br>○ 가산세율 완화<br>- 제출기한 3개월 이내 제출시 1% |

##### (2) 개정이유

-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도 장부상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고 지급명세서만 제출하거나,
  - 실제 지급액보다 과다하게 임금을 기재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여 지급명세서 교부질서의 정상화 유도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1. 1. 이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5.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 특례 일몰 연장(조특법 §126의3)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 특례<br><br>○ 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발급 승인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당 20원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br><br>○ 일몰기한 : '10.12.31 | <input type="checkbox"/> 일몰 연장<br><br>○ (좌 동)<br><br>○ 일몰기한 : '13.12.31(3년) |

### (2) 개정이유

- 전화망을 이용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
  - 특히,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 전화망을 이용하는 일반 과세자는 손해를 보는 점을 고려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1. 1. 이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 다. 비과세 · 감면 정비

### 1.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종료(조특법 §122)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br><br>○ 대상<br>-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POS · 전과식별시스템 · 통합전산시스템 · 전자상거래 등에 의한 수입금액<br>-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한 중개수수료 수입금액<br>-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한 수입금액<br>- 금 사업자가 금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br><br>○ 전년대비 수입금액 증가분의 50%(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의 5%) 상당 소득세액 공제<br><br>○ 일몰시한 : '10.12.31 | <input type="checkbox"/>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폐지 |

(2) 개정이유

-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가 보편화되고,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자리잡은 상황을 감안하여 세제를 정상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1. 1. 이후 발생하는 수입금액분부터 적용

## 라. 납세편의 제고 등 기타 제도 개선

### 1. 성실납세제도 폐지(소법 §87의2~87의7)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성실납세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금액 1.5~6억원 이하</li> <li>- ERP, POS 등 거래의 투명성이 노출되는 장치를 갖추고 복식부기에 의해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li> </ul> </li> <li>○ 신청 및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li> <li>-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1월이 되는 날까지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li> </ul> </li> <li>○ 감가상각비 등 계산 단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금 한도 : 수입금액의 1%</li> <li>- 접대비 한도 : 1,900만원</li> <li>- 상각방법 : 정액법으로 단일화</li> <li>- 내용연수 : 5년(건물 20년)</li> </ul> </li> <li>○ 표준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특법상 각종 감면을 배제하되, 수도권 15%, 비수도권 25% 공제 적용</li> </ul> </li> <li>○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li> <li>○ 최저한세 적용 배제</li> </ul> | <input type="checkbox"/> 성실납세제도 폐지 |

(2) 개정이유

- 성실납세제도의 도입 취지와 제도의 구체적 내용의 부조화에 따른 한계를 고려하여 폐지
- 다만, 이미 성실납세제도를 도입한 사업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제도 적용을 허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1. 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다만, 이미 성실납세제도를 도입한 사업자는 '13.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적용 가능

## 2. 사업장별 구분 경리 개선(소법 §160⑤)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사업장별 구분 경리<br>○ 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사업장별 구분 경리 | ○ 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해 의무적으로 구분 경리 |

### (2) 개정이유

- 사업장별 구분 경리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
  - 사업장별 구분 경리는 사실상 사업장별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만 실익이 있는 점을 감안
  - \* 사업자단위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신고 등을 행하는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부가세법 §5) 등의 경우 사업장별로 구분 경리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1. 1. 이후 장부에 기록하는 분부터 적용

### 3. 사업장현황 신고제도 개선(소법 §78①)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금액 명세·결제수단별 내역</li> <li>- 계산서·세금계산서 등 수취내역</li> <li>- 임차료·인건비 등 비용 내역</li> </ul> </li> <li>○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li> <li>- 단, 휴·폐업 사업자<br/>: 휴·폐업 신고 시</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한 연장<br/>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li> </ul> |

#### (2) 개정이유

- 사업장 현황신고기한을 연장하여 사업자 및 세무사의 신고부담을 완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1. 1. 이후 사업장현황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4.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개선(소법 §87②)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금액은 약정 손익분배비율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에 의하여 개별 거주자에 분배</li> </ul> </li> <li>○ 공동사업장 관련 가산세액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분되는 공동사업장 관련 가산세에서 무기장가산세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사업자별 무기장가산세는 공동사업장의 무기장 소득금액을 배분하여 계산</li> </ul> </li> </ul> |

##### (2) 개정이유

- 공동사업장 자체의 산출세액이 없어 공동사업자의 무기장 가산세를 계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
  - \* 무기장가산세는 무기장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1. 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5.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전산자료 제공 요청 신설(소법 §166)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전산 정보자료의 이용</p> <p>○ 국세청장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사무의 지도·감독기관의 장에게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 자료의 제공을 요청</p>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 <p><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전산 정보자료의 이용 확대</p> <p>○ (좌 동)</p> <p>○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전산 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p> <p>* 법원행정처장</p> |

### (2) 개정이유

-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기본공제대상 여부의 확인을 위해 납세자에게 직접 자료를 요청함에 따라 발생하는 납세자의 불편·불만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1. 1. 이후 정보를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

## 6.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신고방법 명확화(조특법 §104의7①)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input type="checkbox"/> 전환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 특례</p> <p>* '03.6.30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p> <p>○ 전환정비조합은 동 조합 및 조합원을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 적용</p> <p>○ 단, 법인세법에 따라 과표와 세액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 <p>○ 조합이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사업장으로 변경 금지</p> |

### (2) 개정이유

- 전환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세부담 축소를 목적으로 신고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 한번 선택한 신고방법을 계속 적용하도록 규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1. 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7. 조세법률주의 관련 위임입법 개선(소법 §§12. 2)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비과세소득의 범위<br>○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br>* 시행령에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소득(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으로 규정 |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대상을 명확화<br>○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임대소득(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 제외) |

### (2) 개정이유

- 비과세되는 주택의 임대소득의 위임 범위를 명확히하여 조세법률주의 위반 논란을 차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1. 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8. 사업용계좌 제도 개선(소법 §52⑨, §80②, §81⑨, §160의5, 소령 §147의5)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사업용계좌 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관에 사업용 계좌를 가계용과 분리하여 개설하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li> <li>○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사업자중 복식부기의무자*</li> </ul> </li> </ul> <p>* 수입금액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 제조(3억원), 음식·숙박(1.5억원), 부동산임대·서비스업(75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대상 : 금융거래, 인건비, 임차료</li> <li>○ 신고기한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신규사업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내</li> <li>○ 사업용계좌 미개설시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 경정</li> <li>- 가산세 부과 : 미개설기간 수입금액의 0.2%</li> <li>- 조특법상 감면 배제</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기존 계좌를 신고하는 경우도 허용</li> <li>○ 신고기한 연장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신규사업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내</li> <li>○ 가산세 적용 특례 신설 : 결정·경정·수정신고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가산세 미적용</li> </ul> |

## (2) 개정이유

- '08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에 별도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인정되도록 한 취지에 맞춰 조문정리
-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과 통일시킴으로써 사업자가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을 몰라 가산세, 감면배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완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1. 1. 이후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9.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과세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개선 (소득영 §143③)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가장하지 않은 경우 추계과세 방법</p> <p>○ 주요경비(인건비, 임차료, 매입비용)는 증빙서류로, 기타경비는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 인정</p> <p>*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수입금액 6,000만원 이상</li> <li>- 제조·음식·숙박업, 건설업 : 수입금액 3,600만원 이상</li> <li>- 부동산임대업, 개인서비스업 :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li> </ul> | <p>○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과세시 기준경비율 인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 계산</li> </ul> |

### (2) 개정이유

- 복식부기의무자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가장신고 시에 비해 추계신고시 세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1. 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10. 신규사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축소(소득영 §143④)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단순경비율 제도</p> <p>○ 의의 : 장부가 없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추계과세 방법</p> <p>○ 적용 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사업자</li> <li>-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 6,000만원</li> <li>· 제조, 음식·숙박업, 건설업 : 3,600만원</li> <li>· 부동산임대업, 개인서비스업 : 3,600만원</li> </ul> </li> </ul> <p>○ 과세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금액=수입금액×(1-경비율)</li> </ul> | <p>○ 적용 대상 축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자 제외</li> </ul> <p>* 농어업, 도소매업 : 3억원 이상<br/>제조, 음식·숙박업 : 1.5억원 이상<br/>부동산임대, 서비스업 : 0.75억원 이상</p> |

### (2) 개정이유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 주요경비의 증빙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1. 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11. 대손금의 귀속시기 명확화 (소득영 §55②·⑦)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lt;신 설&gt;</p> <p>※ 필요경비 귀속연도 : 필요경비가<br/>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법<br/>         §39①)</p> | <p>□ 대손금의 귀속시기 규정</p> <p>○ 법인세법을 준용*</p> <p>* 대손사유에 따라 i) 해당 사유가<br/>         발생한 날과 ii)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br/>         손금 계상한 날로 구분하여 규정<br/>         (법인영 §19의2③)</p> |

### (2) 개정이유

- 대손금의 귀속시기를 명확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11. 1. 1. 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12. 소득세 추계신고자의 소득상한배율 적용기한 명확화 (소득영 §143③)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input type="checkbox"/>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소득세 추계신고 시 소득상한배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결정 가능</p> <p>*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 경비율에 의한 금액의 일정 배율을 넘지 않도록 규정</p> <p>○ 적용기한 : '12.12.31까지</p> | <p>○ 적용기한 : '12.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p> |

### (2) 개정이유

- 현행 규정에 따른 경우 '12년 귀속 소득금액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이 '13년에 이루어질 경우
  - 소득상한배율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논란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규정을 명확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3. 농수산물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 제도 보완  
(소득영 §147, 대통령령 제15969호 부칙 §19)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        |        |        |                                                                                                                                                                                                                           |     |     |     |     |       |        |        |        |
|-----------------------------------------------------------------------------------------------------------------------------------------------------------------------------------------------------------------------------------------------------------------------------------------------------------------------------|--------|--------|--------|-----|-------|--------|--------|--------|---------------------------------------------------------------------------------------------------------------------------------------------------------------------------------------------------------------------------|-----|-----|-----|-----|-------|--------|--------|--------|
| <div><div><input type="checkbox"/> 중도매인의 총매출액 중<br/>계산서 교부 금액의 비율이 과세<br/>기간 별로 다음 비율에 미달하는<br/>경우에 한해 계산서보고불성실<br/>가산세 부과</div><table><tr><td>년 도</td><td>'08</td><td>'09</td><td>'10</td></tr><tr><td>비율(%)</td><td>30(50)</td><td>35(55)</td><td>40(60)</td></tr></table><div>* ( )안은 서울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br/>중도매</div></div> | 년 도    | '08    | '09    | '10 | 비율(%) | 30(50) | 35(55) | 40(60) | <div><div>○ 의무교부비율 상향 조정</div><table><tr><td>년 도</td><td>'11</td><td>'12</td><td>'13</td></tr><tr><td>비율(%)</td><td>45(65)</td><td>50(70)</td><td>55(75)</td></tr></table><div>* ( )안은 서울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br/>중도매</div></div> | 년 도 | '11 | '12 | '13 | 비율(%) | 45(65) | 50(70) | 55(75) |
| 년 도                                                                                                                                                                                                                                                                                                                         | '08    | '09    | '10    |     |       |        |        |        |                                                                                                                                                                                                                           |     |     |     |     |       |        |        |        |
| 비율(%)                                                                                                                                                                                                                                                                                                                       | 30(50) | 35(55) | 40(60) |     |       |        |        |        |                                                                                                                                                                                                                           |     |     |     |     |       |        |        |        |
| 년 도                                                                                                                                                                                                                                                                                                                         | '11    | '12    | '13    |     |       |        |        |        |                                                                                                                                                                                                                           |     |     |     |     |       |        |        |        |
| 비율(%)                                                                                                                                                                                                                                                                                                                       | 45(65) | 50(70) | 55(75) |     |       |        |        |        |                                                                                                                                                                                                                           |     |     |     |     |       |        |        |        |

(2) 개정이유

- 중도매인의 완전한 계산서 교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의무교부비율 제도를 연장하여 적용하되
  - 계산서 제도의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의무교부비율을 상향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14. 사업소득원천징수 내역의 매입처별합계표 기재의무 폐지 (소득영 §212①)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p> <p>○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p> | <p>○ 원천징수영수증 포함 의무 폐지</p> |

##### (2) 개정이유

-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납세자 불편을 해소
  - 현재 사업자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액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는 반면, 인적용역 제공자는 대부분 매출처별계산서 제출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반영하지 않아 불부합자료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1. 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5. 「노동조합법」을 초과하여 노조전임자에게 급여 지급시 손비 부인 (소득영 §78)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사용자가 노조전임자 등에 임금 지급시</p> <p>○ 인건비로 하여 손비 인정</p> <p>-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허용 (예규)</p> | <p>- 「노동조합법」 상 Time-Off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시 손금산입 불허</p> <p>*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내용과 동일</p> |

(2) 개정이유

- 위법·부당한 경비의 손비 부인 근거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16. 퇴직급여충당금 한도를 단계적 축소·폐지(소령 §57②)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퇴직급여충당금 적립금액의 손금산입 한도(①② 동시충족)</p> <p>①(해당사업연도기준) 총급여액의 5%</p> <p>②(누적기준)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 추계액의 30%</p> | <p>□ 충당금 손금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p> <p>○좌 동</p> <p>○(누적기준) '11년부터 매년 5%씩 축소하여 '15년말 폐지</p> <p>- 既 적립금에 대한 특례 규정(부칙)</p> <p>: Max { ㉠, ㉡ }</p> <p>㉠연도별 누적기준(매년 축소)</p> <p>㉡전년말 퇴충잔액 - 당해연도 퇴직금 지급액</p> <p>* 既 적립 충당금이 한도축소에 따라 익금산입되지 않도록 보완</p> |

### (2) 개정이유

- 퇴직금 사내유보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축소·폐지하여 퇴직연금(사외적립) 활성화 유도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종 전                                                                                                                    | 개 정                                                                                      |
|------------------------------------------------------------------------------------------------------------------------|------------------------------------------------------------------------------------------|
| 제57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생 략)                                                                                          | 제57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현행과 같음)                                                         |
| ②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u>추계액의 100분의 30</u> 을 한도로 한다. | ②-----<br>-----<br>-----<br>-----<br>----- <u>추계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u> -----<br>-----. |
| <신 설>                                                                                                                  | 1. <u>과세기간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30</u>                              |
| <신 설>                                                                                                                  | 2. <u>과세기간이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25</u>                              |
| <신 설>                                                                                                                  | 3. <u>과세기간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20</u>                              |
| <신 설>                                                                                                                  | 4. <u>과세기간이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15</u>                              |

|                           |                                                                                                                                                                                                                               |
|---------------------------|-------------------------------------------------------------------------------------------------------------------------------------------------------------------------------------------------------------------------------|
| <p><u>&lt;신 설&gt;</u></p> | <p>5. <u>과세기간이 2014년 1월 1일<br/>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br/>인 경우: 100분의 10</u></p>                                                                                                                                                  |
| <p><u>&lt;신 설&gt;</u></p> | <p>6. <u>과세기간이 2015년 1월 1일<br/>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br/>인 경우: 100분의 5</u></p>                                                                                                                                                   |
| <p><u>&lt;신 설&gt;</u></p> | <p>7. <u>과세기간이 2016년 1월 1일<br/>이후인 경우: 100분의 0</u></p>                                                                                                                                                                        |
| <p>③ · ④ (생 략)</p>        | <p>③ · ④ (현행과 같음)</p>                                                                                                                                                                                                         |
| <p><u>&lt;신 설&gt;</u></p> | <p>⑤ 제2항 각 호의 한도 내에서<br/>필요경비에 산입한 퇴직급여충<br/>당금의 누적액에서 퇴직급여충<br/>당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과<br/>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중 종<br/>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뺀<br/>금액이 제2항에 따른 추계액에<br/>같은 항 각 호의 비율을 곱한<br/>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br/>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으로 환<br/>입하지 아니한다.</p> |
| <p>⑤ (생 략)</p>            | <p>⑥ (현행 제5항과 같음)</p>                                                                                                                                                                                                         |

## 17. 퇴직 보험 · 신탁 既 적립금에 대한 처리(소득영§55①, ③~⑤)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퇴직보험 · 신탁 보험료 등의 손금산입</p> <p>○ 보험료등 납입액은 ‘퇴직급여 추계액 -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p> <p>- 既 납입 보험료등 적립금 운용수익은 퇴직보험 · 신탁 보험료 등으로 하여 손금산입</p> | <p>□ 既 납입 적립금에 대한 특례</p> <p>○ ‘11.1.1이후 납입하는 퇴직보험 · 신탁 보험료 등은 손금산입 불허</p> <p>- 다만, 既 납입 보험료등 적립금 운용수익에 한하여 손금산입 허용(부칙)</p> <p>※ 既 적립금은 종전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함(부칙)</p> <p>* 퇴직금 지급시 익금산입</p> |

### (2) 개정이유

- 2011년부터 퇴직보험 · 신탁이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同 보험료 등을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퇴직급여 비용으로 불인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납입 분부터 적용

| 종 전                                                                                                                                                                                   | 개 정                                                                                                              |
|---------------------------------------------------------------------------------------------------------------------------------------------------------------------------------------|------------------------------------------------------------------------------------------------------------------|
|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br>-----<br>-----<br>-----<br>-----                                                 |
| 1. ~ 9. (생략)                                                                                                                                                                          | 1. ~ 9. (현행과 같음)                                                                                                 |
| 10. 제38조제1항제12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보험료, 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 10. 제38조제1항제12호라목에 따른 공제부금                                                                                       |
| 10의2. ~ 27. (생략)                                                                                                                                                                      | 10의2. ~ 27. (현행과 같음)                                                                                             |
| ③ 제1항제10호 및 제10호의2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보험료, 신탁부금, 공제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중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개인퇴직계좌(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라 한다)에 납부한 부담금은 전액 필요경 | ③ 제1항제10호의2-----<br>-----<br>-- 부담금-----<br>-----<br>-----<br>-----<br>-----<br>-----<br>-----<br>-----<br>----- |

비에 산입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에 납부한 부담금을 제외한 보험료 등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에 가입한 자는 제외한다)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또는 신탁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 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료 등에서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둘 이상의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보험 또는 신탁의 보험료 등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④ 제1항제10호 및 제10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보험료등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부담금-----  
-----  
-----  
-----  
-----  
-----  
-----  
-----  
----- 퇴직연금-----  
-----  
----- 부담금-----  
-----  
----- 부담금-----  
-----  
----- 부담금-----  
----- 퇴직연금의 부담금-----  
-----.

④ 제1항제10호의2에 따라 부담금을 -----  
-----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  
-----.

|                                                                                                                                                                                                                                                                           |                                                                                                                                                                                                                                                                                                                                           |
|---------------------------------------------------------------------------------------------------------------------------------------------------------------------------------------------------------------------------------------------------------------------------|-------------------------------------------------------------------------------------------------------------------------------------------------------------------------------------------------------------------------------------------------------------------------------------------------------------------------------------------|
| <p>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p> <p>1. 사업자가 보험금등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담보로 제공한 보험금등에 대한 보험료등에 상당하는 금액</p> <p>2.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보험금등</p> <p>3. 4. (생략)</p> | <p>⑤제38조제1항12호다목의 보험료(2011년 1월 1일 이전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을-----</p> <p>----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p> <p>----- 해당 각 호-----</p> <p>-----.</p> <p>1. ----- 퇴직보험금·신탁금 및 퇴직연금-----</p> <p>----- 퇴직보험금·신탁금 및 퇴직연금-----</p> <p>----- 보험료·신탁부금 및 부담금-----</p> <p>2. -----</p> <p>----- 퇴직보험금·신탁금-----</p> <p>3. 4. (현행과 같음)</p> |
|---------------------------------------------------------------------------------------------------------------------------------------------------------------------------------------------------------------------------------------------------------------------------|-------------------------------------------------------------------------------------------------------------------------------------------------------------------------------------------------------------------------------------------------------------------------------------------------------------------------------------------|

## 18.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 즉시상각 허용 (소득영 §67⑦)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즉시상각 대상 재산<br>○ 소액자산<br>- 개당 100만원 이하로서 고유 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 아닌 자산<br>○ 기타자산<br>-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어구, 영화필름, 공구, 가구, 가정용 기구, 시계, 시험기기, 전기기구, 가스기기 등 | <input type="checkbox"/> 즉시상각 대상 재산 추가<br><br>- 전화기(휴대용 전화기 포함), 개인용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추가 |

### (2) 개정이유

- 개인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19.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조정 (소득규칙 §23)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간주임대료 이자율 : 4.3%<br>* 3.4% → 4.3% ('10.4월 개정) | <input type="checkbox"/> 이자율 조정 (4.3% → 3.7%) |

### (2) 개정이유

- 간주임대료 이자율 산정의 근거가 되는 은행권 1년만기 정기 예금이자율이 '10. 3월 당시 보다 인하(4.3%→3.7%) 된 것을 감안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참 고

신구조문 대비표(간주임대료 적용 이자율)

| 종 전                                                                                                   | 개 정                                                                |
|-------------------------------------------------------------------------------------------------------|--------------------------------------------------------------------|
|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br>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br>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br>이자율” 이란 연간 <u>1,000분의 43</u><br>을 말한다.  |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br>① -----<br>-----<br>-----1,000분의 37<br>-----. |
| ② ~ ③ (생 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
| ④ 영 제53조제7항 산식 외의<br><u>부분 후단을 적용할 때 사업시<br/>설을 포함하여 전전세 또는 전<br/>대한 경우에는 그 가액의 비율<br/>에 따라 계산한다.</u> | <삭 제>                                                              |

## 20. 조정반 지정 제한 사유 완화 (소득규칙 §65의3⑤)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세무사, 회계사의 조정반*<br>지정이 제한되는 경우<br><br>* 조정계산서 작성 | ○ 지정 제한 사유 완화 |
| ○ 직무정지, 자격정지의 징계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 - (좌 동)       |
| ○ 조정반 지정 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 (좌 동)       |
| ○ 추계신고한 과세기간 종료일 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 (좌 동)       |
| ○ 지정 신청일 현재 국세 체납                                                        | - (삭 제)       |

### (2) 개정이유

- 개인적 사정으로 일시 체납이 발생한 세무사에 대한 제한 완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3. 28.이후 조정반으로 지정받는 분부터 적용

## 21. 기타 조문 정리

□ 연금저축 관련 소득 구분 명확화(소득법 §20의3①4호, §21 ①21호)

- 사망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 연금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소득이 연금소득에 해당한다는 내용 등(조특법 §86의2)을 소득세법에도 명확히 규정

□ 지방세법 인용조문 개정(소득법 §26⑧)

- 지방세법 상 “환부이자”의 “지방세환급가산금”으로 명칭 변경 및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근거조문 변경 내용 반영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규정 보완(소득법 §27①, §33, §37)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규정(법§37)이 필요경비계산에 관한 일반 규정(법§27, §33)과 중복·충돌하는 점을 보완

□ 거주자 편에 규정되어 있는 비거주자 관련 내용은 비거주자편에서 규정 (소득법 §46 ①, ②, §76③, §133의2①)

- (현행) 거주자등 → (개정) 거주자

□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규정 정비(소득영§8의2)

<법률 개정 내용>

-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이관

<시행령 개정사항>

-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범위와 관련된 위임조항 삭제

□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관련 규정 정비(소득영§53⑦)

<시행령 개정사항>

- 사업시설을 포함하여 부동산의 일부만을 전전세 또는 전대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시 보증금에 산입할 금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시행규칙(§23④)에서 시행령으로 이관

※ (개정 이유) 부동산의 일부만을 전전세 또는 전대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시 보증금에 산입할 금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 사업시설을 포함하여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의 안분계산방법은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의 통일을 기하고자 함

□ 법정기부금 개선에 따른 규정 정비(소득영§79②·③, §79의2, §81⑤~⑦)

<법률 개정 내용>

-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의 법인세법 이관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시행령 개정사항>

- 법정기부금과 관련된 위임조항 삭제 및 자원봉사용역 관련 규정 조항 번호 수정

□ 특례기부금 폐지에 따른 규정 정비(소득영§80①, §81③④⑧)

<법률 개정 내용>

- 조특법 상 특례기부금을 폐지하고 법정·지정기부금으로 전환

<시행령 개정사항>

- 특례기부금 중 개인의 “공익법인 기부 조건 신탁” 관련 규정 (조특법§①11, ⑥)을 지정기부금 관련 규정에 이관
- 특례기부금(조특법§73) 관련 조항 삭제

□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확대(소득영§81④)

<법률 개정 내용>

- 개인의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소득의 20→30%)

<시행령 개정사항>

- 법률 규정에 맞추어 개인의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여 규정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규정 정비(소득영§85)

<법률 개정 내용>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구분경리 의무 완화

<시행령 개정사항>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규정 정비

□ 기타소득의 범위 규정 정비(소득영§87)

<법률 개정 내용>

- 기타소득 중 80%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 마련

<시행령 개정사항>

- 법률 상 근거 규정 마련에 따른 시행령의 체계 정비

□ 사업용계좌의 개설 조항 삭제(소득영§113의2, §208의5)

<법률 개정 내용>

-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도 허용

<시행령 개정사항>

- 사업용계좌의 개설 조항 삭제

□ 성실납세제도 규정 정비(소득영§122, §143④, §150의2~§150의7)

<법률 개정 내용>

- 성실납세제도 폐지

<시행령 개정사항>

- 성실납세제도와 관련된 위임조항 삭제
  - 단,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관련 규정은 소득영§122로 이관하여 규정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제공에 대한 규정 정비(소득영 §218)

<법률 개정 내용>

- 국세청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 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시행령 개정사항>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제공에 대한 위임조항 정비

□ 특례기부금 폐지에 따른 규정 정비(조특영§69의2, 소득령§81)

<법률 개정 내용>

- 기부금 구분 체계 간소화에 따라 특례기부금을 폐지

<시행령 개정사항>

- 특례기부금과 관련된 위임조항 삭제
  - 단, 공익법인신탁 기부금 관련 내용(조특법§73⑪ 및 조특령 §69의2③⑥)은 소득영 §80①으로 이관

□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정비(조특영§117)

<법률 개정 내용>

-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종료

<시행령 개정사항>

-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된 위임조항 삭제

□ 기타 자구 수정

- 다목 후단의 “제1호에 따른 날” → “가목에 따른 날”(소득영§48. 10의4)
- 제106조제9항의 서류 → 제106조제10항의 서류(소득영§130② 1의2.)

## Ⅱ. 근로소득

### 가. 저출산·고령화 대비

#### 1.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소법 §51의2)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다자녀 추가공제<br>○ 자녀 2명 : 50만원<br>○ 자녀 2인 초과 : 1인당 100만원 | <input type="checkbox"/>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br>○ 자녀 2명 : 100만원<br>○ 자녀 2인 초과 : 1인당 200만원 |

##### (2) 개정이유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나. 중산·서민층 지원

### 1. 근로장학금에 대한 비과세(소득법 §12.3)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에 근로 장학금 포함*<br><br>*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

#### (2) 개정이유

-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이 대학으로부터 근로장학금을 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대학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장학금 비과세 이유

-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이 대학으로부터 받는 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에 따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 발생
-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근로소득 포함,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

⇒ 근로장학금을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포함시켜 근로 장학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

## 2.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소법 §129①)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br><input type="radio"/> 원천징수세율 : 8% | <input type="checkbox"/>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br><input type="radio"/> 원천징수세율 : 6% |

### (2) 개정이유

- 저소득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세제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식

$$\begin{aligned}
 \text{원천징수세액} &= [(\text{일급여액} - 10\text{만원}) \times \text{원천징수세율}(8\% \rightarrow 6\%)] \\
 &\quad - \text{근로소득세액공제}(\text{산출세액} \times 55\%)
 \end{aligned}$$

### 3.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연장(조특법 §30의3③)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고용유지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br><input type="radio"/> 공제율 : 전년대비 임금총액 감소분의 50%<br><input type="radio"/> 공제한도 : 1,000만원<br><input type="radio"/> 일몰기간 : '10.12.31 | <input type="checkbox"/> 일몰 연장<br><input type="radio"/> 일몰기간 : '11.12.31 |

#### (2) 개정이유

- 동 제도는 '08년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써 고용유지기업 지원을 위해 '11년말 까지 일몰 연장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다. 기타 제도개선

### 1.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연말정산 제도 개선(법 §47⑤⑥, §137③,⑤, §137조의2 신설, §142①,②)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공제(법§47⑤,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액 계산 :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근로소득 공제액 계산</li> <li>○ 공제액이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보다 큰 경우 차액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li> </ul>                                                                                                                                                                                                                                                                                                                                                                                                |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공제(법§47⑤,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액 계산 : (좌 동)</li> </ul> <p>&lt;삭 제&gt;</p>                                            |
| <input type="checkbox"/> 연말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근무지의 신고(법§142①②, 영§1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는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해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에 신고 의무</li> <li>○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는 신고사항을 세무서장에게 보고 하고 종된 근무지에 통보</li> </ul> </li> <li>②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제출 (영§199③, §200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된 근무지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전까지 주된 근무지에 제출</li> </ul> </li> <li>③ 연말정산(법§137③,⑤, 영§199④,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된 근무지 :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li> <li>○ 종된 근무지 : 해당 근로소득 금액에 기본세율 적용</li> </ul> </li> </ul> | <input type="checkbox"/> 연말정산(법§137의2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는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고 종된 근무지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주된 근무지에 제출</li> </ul> <p>○ (좌 동)</p> |

## (2) 개정이유

### ① 근로소득공제 개정(소득법§47⑤,⑥)

-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적용시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하므로,
  - 차액을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여지가 없음

### ② 근무지의 신고 조문 삭제(소득법§142①,②)

- 법 제142조는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해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 실제로는 이행되지 않고 있어 사문화된 조문임
- ⇒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하기 전까지 신고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임의규정화하면서 간소화(2인 이상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연말정산 조문 신설)

### ③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연말정산 조문 신설(소득법§137③,⑤, §137의2신설)

-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받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 현재 법과 시행령의 여러 규정에 산재되어 있어 혼란을 야기
- ⇒ 관련 사항을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체계화해 납세 편의 제고

### ④ 기타 인용 조문 등 개정(소득법§73②,③,④, §80②2호, §134조②, §150③)

## (3) 적용시기

- 201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2. 기타 원천징수 관련 법령 체계 정비

- 지급시기 의제 규정 정리(소득법 §131, §132, §135, §144의5, §145의2, §147)
  - “지급시기의 의제”를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로 변경
    - 일정한 시기가 도래하면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지급시기의 의제”를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로 변경
    - 법과 시행령에서 중복 규정한 부분을 정비
  - 11.1~12.31에 이익이 처분되는 배당의 원천징수시기를 근로소득 등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
-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및 각 소득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조문 정비(소득법 §137①,②,④, §143①,②, §143의7, §144①, §144의4, §145②, §146②)
  -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규정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각 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조문을 시행령과 통합해 정비
- 근로소득자 및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 규정 정비(소득법 §140①,④, §143의6①,②,③,④)
  -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신고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과 관련한 사항이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따라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산재되어 있어 체계상 혼란 야기
    - 소득공제 신고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후 변동 사항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통합·일원화
  - 공적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그 전에 연금소득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시행규칙 사항을 법으로 이관

### 3. 외국인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합리화(조특법 §18의2)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br>○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적용 | ○ 근로소득간이세액표와 15% 단일세율 중 선택<br>- 15% 단일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 제출 |

#### (2) 개정이유

- 15%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과도한 환급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
  - 외국인근로자의 납세편의 제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4.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4.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확인·관리방법 개선(조특법 §87⑨)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무주택세대주 확인 통보기한<br>○ 국토부장관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무주택 세대주 여부를 확인해 국세청장에게 통보<br>○ 기한 : 다음연도 1월 20일 | <input type="checkbox"/> 통보기한 연장<br>○ 기한 : 다음연도 3월 말일 |

##### (2) 개정이유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주택 취득·양도 자료 구축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현행 법정기한인 1월 20일까지 통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
  - 1월 20일에 통보된 자료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 상반기의 취득·양도자료만 반영되어 업무 활용에 부적합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5.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소득영 별표2)

- ①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이 2배 확대됨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를 개정, 원천징수세액 인하
- ② 간이세액표 개정시 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액은 월급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하

(단위 : 원)

| 월급여       | 현행<br>① | 개정<br>② | 월간감소액<br>③=①-② | 연간감소액<br>④×12개월 | 감소율<br>④/① |
|-----------|---------|---------|----------------|-----------------|------------|
| 2,000,000 | 5,430   | 4,300   | 1,130          | 13,560          | 20.81%     |
| 3,000,000 | 30,970  | 29,220  | 1,750          | 21,000          | 5.65%      |
| 4,000,000 | 136,550 | 129,760 | 6,790          | 81,480          | 4.97%      |
| 5,000,000 | 264,050 | 257,260 | 6,790          | 81,480          | 2.57%      |

※ 홑벌이 4인가구(20세 이하 자녀 2인) 전제

- ③ 위 간이세액은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특별공제 등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이 근로자가 실제 지급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반영한 실제 세부담(연말정산시 납부세액)보다 큰 경우 연말정산시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 이에 따라 실제 세부담 경감폭은 위 간이세액표상 경감폭보다 더 커질 수 있음

## 6. 외국인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합리화(조특령 §16의2)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신 설 > | <p><input type="checkbox"/> 외국인근로자 15% 단일세율 원천징수 신청방법</p> <p>○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제출*</p> <p>* 외국인기술자 과세특례(조특법§18) 신청 절차와 동일</p> |

### (2) 개정이유

- 법에서 위임한 구체적 신청절차 규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4.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7. 기타 조문정리

### □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정리(소득영§137, §201의11)

- 방문판매업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한 경우에만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 법§73·§144의2, 시행령§137·§201의11 등의 조문이 서로 연계되어 있어 조문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

⇒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제외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변경하고 조문체계를 간소화

### □ 각 소득별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관련 조문 정리(소득영§193①,②, §199③, §200①,②,③, §201의4②, §201의8)

- 각 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관련 조문을 법으로 이관

### □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주된 근무지 신고 조문 정비(소득영§199)

-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해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 실제로는 이행되지 않고 있어 사문화된 조문임

⇒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하기 전까지 신고 가능하도록 하면서 조문 간소화

### □ 근로소득자 및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 규정 정비(소득영 §198, §201의7)

-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신고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과 관련한 사항이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따라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산재되어 있어 체계상 혼란 야기

- 소득공제 신고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통합·일원화

### Ⅲ. 금융소득

#### 가. 비과세·감면 정비

##### 1. 창투조합 등 출자금 소득공제 일몰 연장(조특법 §16)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창투조합 등 소득공제<br><br>○ 공제대상 : 창투조합, 벤처조합,<br>벤처기업 등에 출자<br><br>○ 공제금액 : 출자금액의 10%(종<br>합소득의 30% 한도)<br><br>* 5년내 출자지분 이전·회수시 추정<br><br>○ 일몰 : 2010.12.31까지 출자분 | <input type="checkbox"/> 일몰 연장<br><br><br><br><br><br><br><br><br>○ 일몰 : 2012.12.31까지 출자분 |

###### (2) 개정이유

- 창투조합 등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 필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2011.1.1) 이후 최초로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참고 1

## 창투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개요

---

### ☐ 조세특례 내용

-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종합소득금액의 30%한도) 소득공제

### ☐ 투자대상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한국벤처투자조합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 벤처기업 투자신탁
- 벤처기업에 개인이 직접투자

### ☐ 특이사항

- 출자지분 등 5년미만 보유시 공제액 추징
- 일몰기한 : 2012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 신구조문 대비표

| 종 전                                                                                                                                                                                                                                                                                                                               | 개 정                                                                                                                                                                                                                                         |
|-----------------------------------------------------------------------------------------------------------------------------------------------------------------------------------------------------------------------------------------------------------------------------------------------------------------------------------|---------------------------------------------------------------------------------------------------------------------------------------------------------------------------------------------------------------------------------------------|
|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u>2010년 12월 31일까지</u>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br>-----<br>-----<br>-----2012년 12월 31일-----<br>-----<br>-----<br>-----<br>-----<br>-----<br>-----<br>-----<br>-----<br>-----<br>-----<br>-----<br>-----<br>-----<br>-----<br>-----<br>-----<br>-----. |
| 1. ~ 4. (생략)<br>② ~ ④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br>② ~ ④ (현행과 같음)                                                                                                                                                                                                          |

## 2.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 일몰 종료(조특법 §91)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br>과세특례<br><br>○ 대상 : 3년 이상 보유한<br>상장주식<br><br>○ 세율 : 액면가액 3천만원 이하<br>비과세, 1억원 이하 5%<br><br>○ 일몰 : 2010.12.31 | <input type="checkbox"/> 일몰 종료 |

### (2) 개정이유

- 동 제도는 주식의 장기보유를 통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으나, 실효성이 크지 않음
- 타 금융소득과의 과세불형평,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나가는 정책방향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2011.1.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3. 선박투자회사 과세특례 축소 및 일몰 연장(조특법 §87의5)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선박투자회사 배당소득<br>분리과세<br><br>○ 세율 : 액면가액 3억원 이하<br>5%, 3억원 초과분 14%<br><br>○ 일몰 : 2010.12.31까지 지급분 | <input type="checkbox"/> 선박투자회사 과세특례 축소<br>및 일몰 연장<br><br>○ 세율 : 액면가액 1억원 이하<br>5%, 1억원 초과분 14%<br><br>○ 일몰 : 2013.12.31까지 지급분 |

#### (2) 개정이유

- 선박펀드를 통한 국적선사 확충 효과, 조선사업의 높은 전후방 효과 등을 고려하여 일몰을 3년 연장하되
  - 비과세·감면 축소 필요성, 여타 펀드상품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세제지원은 축소
- \* 고수익고위험펀드('09년말 일몰 종료), 인프라 펀드의 경우에도 액면가액 1억원 이하분은 5% 분리과세, 1억원 초과분은 14% 분리과세 적용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2011.1.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참고

신구조문 대비표

| 종 전                                                                                                                                                                                                                                                          | 개 정                                                                                                                                                                      |
|--------------------------------------------------------------------------------------------------------------------------------------------------------------------------------------------------------------------------------------------------------------|--------------------------------------------------------------------------------------------------------------------------------------------------------------------------|
| 제87조의5(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 제                                                                                                                                                                                                                            | 제87조의5(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
| ②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이하 “선박투자회사”라 한다)로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額面價額) 3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유주식(액면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을 포함한다)의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② ----- 「선박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br>----- 2013년 12월 31일 -----<br>----- 1억원 -----<br>-----<br>-----<br>-----<br>-----<br>----- 1억원-----<br>-----<br>-----<br>-----<br>-----. |
| ③ ~ ⑤ (생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4.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 일몰 연장(조특법 §91의4)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사회기반시설투자회사<br>배당소득 분리과세<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 액면가액 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14%</li> <li>○ 일몰 : 2010.12.31 지급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몰 2년 연장(2012.12.31)</li> </ul> |

##### (2) 개정이유

- 인프라펀드는 민간자금을 조달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제도로써 부족한 정부재정을 보완하는 공익적 성격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일몰을 2년간 추가 연장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2011.1.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의의 :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민자사업에 투융자하여 그 수익을 펀드 출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
  
- 법적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설립절차 : 기획재정부장관 협의 → 금융위 등록
  - 설립요건 : 설립자본금 10억원
  - 자산운용 : 자본금의 30%까지 차입 · 사채발행 가능

## 5.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일몰 종료(조특법 §91의8)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br>* 정의 :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기부금등으로 지출하는 펀드<br>○ 투자자의 배당소득 중 일부* 비과세<br>* 지정기부금등÷집합투자기구 수익<br>○ 일몰 : 2010.12.31 | <input type="checkbox"/> 일몰 종료 |

### (2) 개정이유

- 동 제도는 '08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실제 적용사례 없음
-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201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개념 : 펀드 이익의 전부·일부를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펀드
  - 도입취지 : 금융상품을 통한 기부확대를 유도하고 다수인의 소액 기부를 활성화를 위해 '08년부터 도입
  - 적용대상 (①, ② 모두 충족)
    - ①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일 것
    - ② 펀드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부금으로 지출할 것
  - 과세특례 내용
    - 공익기부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기부금 공제대상 공익 사업에 기부하는 금액에 대해 2010.12.31까지 비과세
- \* 비과세 금액 = 공익기부펀드의 배당소득  $\times$   $\frac{\text{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text{공익기부펀드의 수익}}$

## 6.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공제금액 축소(소득세법 §63)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input type="checkbox"/>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과세특례</p> <p>* 근로자가 퇴직·탈퇴하여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소법 §16①10호, 이자소득)</p> <p>○ 초과반환금에서 다음(①+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연분연승법(기본세율 적용) 적용</p> <p>① 초과반환금의 50%</p> <p>② 납입연수별 공제금액</p> | <p><input type="checkbox"/> 공제금액(①+②) 축소</p> <p>① 초과반환금의 40%</p> <p>② ( 좌 동 )</p> |

### (2) 개정이유

- 퇴직소득과의 과세형평성 고려
  - 퇴직소득에 대한 공제율은 '06년부터 50%→45%로 축소했으며, '11년부터 45%→40%로 축소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201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 직장공제회의 개념(소득영 §26)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공제조합으로서 동일직장·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

##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과세방법 (퇴직소득 과세방법과 동일)

- 무조건 분리과세 적용(소득법 §14)
- 퇴직소득과 유사한 방법으로 세액계산(소득법 §63)

## ① 초과반환금에 대한 공제 ( i + ii )

i ) 정률공제 : 초과반환금의 40%

ii ) 납입연수공제

| 납입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30만원 × 납입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150만원 + 50만원×(납입연수-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400만원 + 80만원×(납입연수-10년)    |
| 20년 초과        | 1,200만원 + 120만원×(납입연수-20년) |

## ② 연분연승법 적용

: (과세표준 ÷ 납입연수 × 기본세율) × 납입연수

## 나. 기타 제도 개선

### 1. 보유기간 과세대상에서 펀드이익 제외(소득법 §46, §133의2)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보유기간 과세 적용대상<br><br>○ 채권의 이자 및 할인액<br>○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input type="checkbox"/> 보유기간 과세대상에서 펀드이익 제외<br><br>○ (좌 동)<br>< 삭제 > |

#### (2) 개정이유

- 펀드 이익은 보유기간 과세 여부와 무관하게 원천징수가 가능(소득세법 §17, §130)하므로 보유기간 과세 조항에서 삭제
- 보유기간 과세는 채권 이자와 같이 기간별로 소득이 일정한 경우에 투자자가 실제 보유한 기간의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한 수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논리적으로 보유기간 과세제도에 맞지 않음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4.1 이후 펀드이익을 지급받거나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

## 2. 종합과세대상에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포함(소득법 §14③)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분리과세 금융소득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조건 분리과세 : 장기채권 이자 및 할인액,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조특법」상 분리과세 소득</li> <li>○ 조건부 분리과세 : 금융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의무(제127조)가 적용되는 소득</li> </ul> <p>* 원천징수의무는 있으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도 조건부 분리과세대상에 포함</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조건부 분리과세 : 금융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u>원천징수된 소득</u></li> </ul> |

### (2) 개정이유

-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일실 문제 해결
  -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과세가 불가능
- \* 사례 : 법원 등이 경매를 거쳐 경락대금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10.6월, 예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2011.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3. 대차거래 수수료·보상액의 소득구분(소득법 §21, 소득영 §26·26의3 )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대차거래시 대여자가 지급받는 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수료 : 기타소득</li> <li>○ 채권대차거래 보상액 : 이자소득</li> <li>○ 주식대차거래 보상액 : 배당소득</li> </ul> |

#### (2) 개정이유

- 현행 예규·실무\*상 대차수수료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21①8호)’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으나,
  - ‘물품’의 범위에 유가증권이 포함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화
- 주식대차거래 보상액에 대해 대여자에 따라 상이하게 과세(거주자는 기타소득, 외국법인은 배당소득)하는 문제 해결
  - 채권대차거래 보상액에 대하여도 이자소득으로 과세됨을 명확히 규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2011.1.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7. (생략)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 25. (생략)
-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조정(소득법 §164)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p> <p>○ 지급일* 다음 연도 2월말일</p> <p>* 배당결의일로부터 3개월 내에 미지급시 3개월이 되는 날</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 <p>○ 배당결의일부터 3개월 내에 미지급시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연도 2월말일</p> |

##### (2) 개정이유

- 배당결의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배당 미지급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배당결의일(Y년)이나, 지급명세서는 다음 다음 연도(Y+2년) 2월말에 제출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

\* 예: 배당결의 '09.12.10, 지급시기 의제 '10.3.10 → 지급명세서 제출 : '11.2.28

※ 12월분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미지급시 지급일은 다음 연도(Y+1년) 2월말로 의제(§135, §147)하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다음 다음 연도(Y+2년) 3월10일 또는 2월말이 아닌 다음 연도(Y+1년) 2월말로 규정(§164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201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5.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평가손익에 대한 손실상계 대상 펀드이익의 범위 확대(조특법 부칙 §74③)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input type="checkbox"/>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평가손실*과 상계가능한 이익의 범위</p> <p>* '07.6~'09.12 중 발생한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손실만 해당</p> <p>○ '10.1.1~'10.12.31 중 발생한 해외펀드의 이익</p> | <p><input type="checkbox"/> 상계가능한 해외펀드 이익의 범위 확대</p> <p>○ '10.1.1~'11.12.31 중 발생한 해외펀드의 이익</p> |

### (2) 개정이유

- 동 제도는 '10.1.1부터 해외펀드 비과세를 폐지하면서 펀드 투자자가 실제 펀드이익보다 과도하게 과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였으나,
  - 중국 등 해외주식시장 불황으로 해외 주식형펀드 계좌 중 약 70%가 투자원금 이하('10.8 현재)인 점을 고려하여 손실과 상계되는 펀드이익의 발생기간을 연장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2011.1.1) 이후 최초로 결산·분배, 환매하는 분부터 적용

##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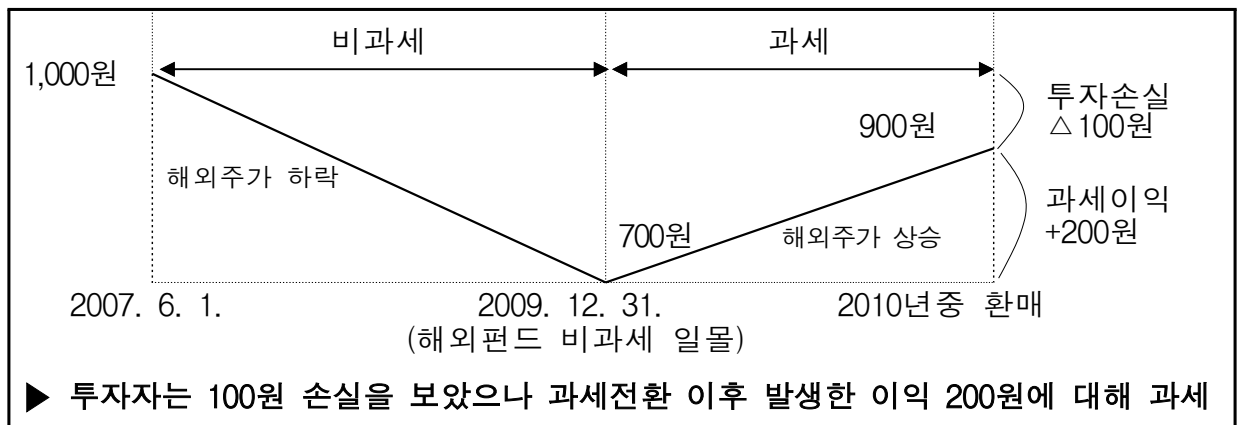
## 해외펀드 손실상계 신설 당시 개정내용('09 세제개편)

□ (종전) 개인투자자가 국내에 설정된 펀드를 통해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한 경우 주식매매·평가손익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09.12.31일까지 발생하는 손익에 한함)

□ (개정) 일몰 종료하되, 비과세 기간중의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손실을 '10.1.1 이후 '10.12.31까지 발생한 이익과 상계 허용

\* 해외펀드 규모('09.7월) : 639만 계좌, (설정원본) 62조원, (현재가치) 46조원

⇒ 일몰 종료로 과세 전환시 원금을 회복하지 못했음에도 손실의 일부 회복분에 대해 과세되는 문제점 완화



## 6. 대차거래 보상액의 소득구분 신설 (소득영§26, §26의3)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신 설 > | <input type="checkbox"/> 대차거래시 대여자가 지급받는 보상액*의 소득구분<br>* 유가증권 차입자는 대차기간 중 해당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수익 (이자, 배당, 무상주 등)을 대여자에게 지급<br>○ 채권대차거래 보상액 : 이자소득<br>○ 주식대차거래 보상액 : 배당소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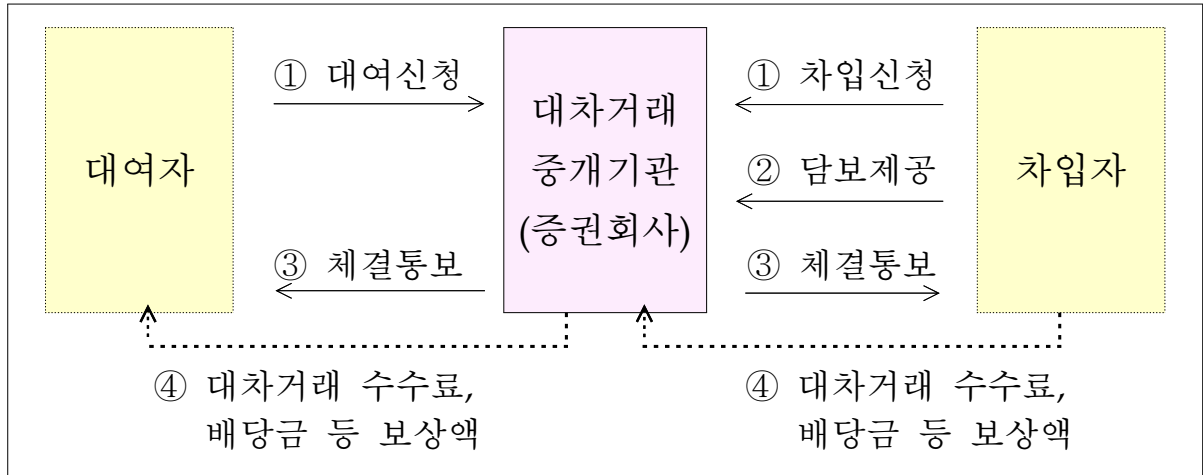
### (2) 개정이유

- 대차거래시 대여자가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액에 대한 소득구분 명확화
  - 주식 대차거래 보상액의 경우 대여자에 따라 상이하게 과세\* 하는 문제 해결
    - \* 주식대차거래 보상액의 소득구분 관련 예규
      - 대여자가 거주자인 경우 : 기타소득(국세청 원천세과-2386, '08.10)
      - 대여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 배당소득(재국조 46017-66, '01.4)
- 채권대차거래 보상액에 대하여도 이자소득으로 과세됨을 명확히 규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20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

## 참고 1 대차거래 흐름도



## 참고 2 주식 대차거래 관련 예규

- 대역자가 거주자인 경우 : 기타소득(국세청 원천세과-2386, '08.10)
- 대역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 배당소득(재국조 46017-66, '01.4)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①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① (생략)

②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 7. 펀드이익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소득영§26의2)

### 1) 매매·평가차익이 과세제외되는 증권의 요건 완화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매매·평가차익이 과세제외되는 증권의 범위<br><br>○ 펀드가 직접 취득한 증권<br>(상장주식·장내파생상품 등)<br><br>○ 집합투자기구가 다른 집합투자 증권만을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 | <input type="checkbox"/> 매매·평가차익이 과세제외되는 증권의 요건 완화<br><br>○ ( 좌 동 )<br><br>○ 집합투자기구가 다른 집합투자 증권을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 |

#### (2) 개정이유

- 펀드가 투자자산의 일부를 다른 펀드에 투자하여 과세제외되는 증권을 간접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동 증권의 매매·평가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
  - 현재 재간접펀드(전액 펀드에만 투자)는 약 4%에 불과하며 통상 주식·채권 등에 함께 투자하는 점 고려
  - \* 현행 규정상 펀드자산 전액을 다른 펀드에 투자하여 과세제외되는 증권을 취득한 경우에만 동 증권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간주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20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

## 2) 펀드 매도시 배당소득세 과세 제외대상 명확화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펀드매도시 배당소득세 과세제외 대상</p> <p>○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펀드<br/>(국내상장주식 중 대주주 거래분, 비상장주식, 외국법인의 주식)</p> <p>※ 펀드매매차익 이중과세 방지</p> <p>○ 국내 주식형 ETF</p> <p>○ 투자회사형 펀드<br/>(단, 배당가능이익 전액 분배할 것)</p> | <p>□ 펀드매도시 배당소득세 과세제외 대상 명확화</p> <p>○ ( 좌 동 )</p> <p>○ ( 좌 동 )</p> <p>○ 상장 투자회사형 펀드<br/>(단, 배당가능이익 전액 분배할 것)</p> |

### (2) 개정이유

- 국내주식형 ETF와 뮤추얼 펀드는 상장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배당소득에 대해 최종소지자 과세방식을 적용하나,
  - 비상장 뮤추얼 펀드에 대해 최종소지자 과세방식을 적용할 경우 펀드 매매차익에 대해 이중과세\*되는 문제 발생

\* 펀드 매매차익에 대해 매도자에게 양도차익으로 과세하며, 매수자가 이후 환매·해지하는 경우 결산시~환매·해지시까지의 가격상승분을 배당소득으로 과세 ⇒ 비상장 뮤추얼펀드는 일반펀드와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안내('10.5.18)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20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

## 8. 기타 조문정리 사항

### ☐ 펀드 매도시 과세방법 관련 조문 정리

※ 소득세법(§46) 개정으로 펀드 매매차익을 보유기간 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점 반영

- 펀드 매매차익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  
(소득영 §102 ① 2호 → §26의2)
- 보유기간 과세 관련 시행령 규정에서 펀드관련 내용 삭제  
(소득영 §46, §102 ①, §193의2 ④)

### ☐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 시기 관련
  -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소득 지급시기 규정 정비  
(영 §192 → 법 §131)
- 원천징수의무의 대리·위임 규정(영 §184의3→법§127) 삭제

## Ⅳ. 퇴직·연금·기타소득

### 가. 저출산·고령화 대비

#### 1.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86의2①,⑤)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퇴직연금+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br>○ 한도 : 300만원 | <input type="checkbox"/> 「퇴직연금+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br>○ 한도 : 400만원 |

##### (2) 개정이유

-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 및 저축 장려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20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

## 2. 퇴직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축소(소법 §48①)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퇴직소득 정률공제<br>○ 퇴직소득금액의 45% | <input type="checkbox"/> 퇴직소득 정률공제 축소<br>○ 퇴직소득금액의 40% |

### (2) 개정이유

- 근로자 퇴직시 일시금보다 연금 수령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20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나.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

### 1. 개인의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소득법 부칙)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개인의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br><br>○ 과세방법 :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br>*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원천징수 세율 20%<br><br>○ 과세 대상<br>: 점당 양도가액 6,000만원 이상인 회화·데생 등 미술품, 골동품<br>* 국내 생존작가의 작품 제외<br><br>○ 과세시기<br>: '11.1.1. 이후 거래분 | <input type="checkbox"/> 개인의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 2년 유예<br><br>○ (좌 동)<br><br><br>○ (좌 동)<br><br><br>○ 과세시기<br>: '13.1.1. 이후 거래분 |

#### (2) 개정이유

- 미술품 거래 위축 등 미술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다. 기타 제도 개선

### 1. 「노동조합법」을 초과하여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기타 소득으로 과세 (소득영 §41⑨)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노조전임자가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예규) | <input type="checkbox"/>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법」 상 Time-Off*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기타소득으로 과세<br><br>*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노조법」에서 인정하는 사용자와 교섭, 노조 유지·관리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Time-Off 한도 내에서 급여지급 허용 |

#### (2) 개정이유

- Time-Off 한도 내에서 적법하게 지급한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 Time-Off 한도 초과시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 기존의 근로소득으로서 받던 각종 공제혜택을 배제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1. 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참고 1****Time-Off(근로시간면제) 제도 개요**

## □ 의의

-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법」에서 인정하는 소정의 활동을 하는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급여지급을 허용하는 제도 (단,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 필요)

## □ 근로시간면제 한도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노동부장관 고시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총 시간 및 대상 인원으로 정함
-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
  -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
  -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

## &lt;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 비교&gt;

| 구 분  | 노조전임자       | 근로시간면제자           |
|------|-------------|-------------------|
| 근 거  | 노조법 §24①②   | 노조법 §24④          |
| 업무범위 | 노조업무(제한 없음) | 노조법 §24④에서 정하는 업무 |
| 급여지급 | 무급          | 한도 내에서 유급 가능      |
| 인원수  | 노사합의        | 한도 내에서 노사합의       |

| 종 전                                                                                                                                                                                                                                                                                                                                                              | 개 정                                                                                                                                                                                                                                                                                                                                                                                                                                            |
|------------------------------------------------------------------------------------------------------------------------------------------------------------------------------------------------------------------------------------------------------------------------------------------------------------------------------------------------------------------|------------------------------------------------------------------------------------------------------------------------------------------------------------------------------------------------------------------------------------------------------------------------------------------------------------------------------------------------------------------------------------------------------------------------------------------------|
|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①<br>~ ⑧ (생략)                                                                                                                                                                                                                                                                                                                                   |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①<br>~ ⑧ (현행과 같음)                                                                                                                                                                                                                                                                                                                                                                                                             |
| ⑨법 제21조제1항제13호에서<br>“경제적 이익”이라 함은 「법<br>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br>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br>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서<br>처분되는 배당·상여외에 법인<br>의 자산 또는 개인의 사업용으<br>로 제공되어 소득발생의 원천이<br>되는 자산(이하 “사업용자<br>산”이라 한다)을 무상 또는 저<br>가로 이용함으로써 인하여 개인이<br>받는 이익으로서 그 자산의 이<br>용으로 인하여 통상 지급하여야<br>할 사용료 기타 이용의 대가(통<br>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저<br>가로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br>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br>액으로 한다)를 말한다. | ⑨ 법 제21조제1항제13호에 따<br>른 경제적 이익은 다음 각 호에<br>해당하는 이익으로 한다.<br>1.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br>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br>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br>할 때 처분되는 배당·상여<br>외에 법인의 자산 또는 개인<br>의 사업용으로 제공되어 소득<br>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이하<br>“사업용자산”이라 한다)<br>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용함<br>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이<br>익으로서 그 자산의 이용으로<br>인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br>사용료 또는 그 밖에 이용의<br>대가(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br>액보다 저가로 그 대가를 지<br>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br>이를 공제한 금액)<br>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br>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br>을 위반하여 지급받는 급여 |

## 2. 교수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 마련(소득영 §41⑪)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교수 등의 연구용역 소득<br><br>○ 직접 계약을 맺어 수행하는 연구용역의 연구비는 사업소득으로 과세<br><br>※ 대학이 주체가 되는 연구용역으로서 교수가 지급받는 연구비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 (예규) | <input type="checkbox"/> 교수 등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br><br>○ (좌 동)<br><br>○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기타소득으로 과세(승) |

### (2) 개정이유

- 교수 등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해 예규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세관청에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어 발생하는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이견을 방지할 필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3.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규정 보완 (소득영§201의7)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연금소득공제 신고<br>○ 연금소득공제 신고서 제출<br>○ 연금소득공제신고서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 등 | <input type="checkbox"/> 연금소득공제 신고규정 정비<br>○ (삭제) 법률에서 규정<br>○ (현행과 동일)<br>○ 법률에서 규정하던 주민등본 첨부내용을 규정 등 |
| <input type="checkbox"/>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br>○ 교부기한 규정 등                                | <input type="checkbox"/>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규정 삭제<br>○ 법률에서 규정                                             |

#### (2) 개정이유

- 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2011.1.1)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 분야**  
**(법인세법령, 조세특례제한법령)**



## [법인세 분야]

### 【개정된 주요내용】

#### I.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세법 정비

1.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회계 기준으로 포함
2. K-IFRS 도입기업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3.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요건 규정
4. 감가상각자산 업종·종류 구분
5. 감가상각비 신고조정한도 계산 세부규정
6. 기준내용연수의 50% 적용대상 건물에 축사 추가
7.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신고 내용연수 산정방법 개정
8.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신고 사유 추가
9. 기능통화 도입기업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
10.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
11.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 인식 방법 개정
12.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신고조정 허용
13. 저축성보험료 책임준비금 적립한도 개정
14. 건설자금이자 자본화에 일반차입금 이자 포함
15. 중소기업 장기할부거래 회수기준 신고조정 허용
16. 건설계약 수익인식 방법 개정
17. 법인세법상 리스분류 기준 개정
18. K-IFRS 도입기업 등의 과세표준 신고시 재무제표 제출 방법 명확화
19. 현행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규정 법령화
20. 단기매매증권 및 파생상품의 취득부대비용 귀속시기 변경

#### II. 기부금 지원세제의 종합적 개편

1. 기부금 구분체계 간소화
2. 기부금 단체의 공익성기준 명확화

3. 법정기부금 지정단체의 지정요건 및 의무 신설
4. 기부금단체 지정기간 보완
5. 법정기부금 지정단체의 지정요건 이행실적 제출 의무 신설  
및 지정취소 요건 신설
6. 개인·법인 기부금간 기부금 구분 기준 일치
7. 지정기부금 손비인정 한도 확대
8. 해외 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신설
9. 지정기부금단체 추가등
10. 현물기부자산 평가 및 취득가액 보완
11. 특례기부금 폐지

### Ⅲ. 법인세법 관련 기타 제도보완

1.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시 사업영위기간 요건 적용 제외
2.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적격합병 등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보유 의무 예외 사유 추가
3. 합병시 피합병법인 지배주주등에 대한 주식교부 요건 완화
4. 합병·분할 등 기업구조개편 관련 조문 명확화
5. 노조법에 위반하여 급여 지급시 손비 부인
6. 퇴직급여 적립액 손비 한도 개선
7.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퇴직연금등의 범위 보완
8. 퇴직 보험·신탁 기 적립금에 대한 처리
9.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범위 명확화
10. 소액채권의 대손요건 완화
11. 전화기·개인용 컴퓨터 즉시상각 허용
12. 가자금금 인정이자율의 시가 기준 개선
13. 연결납세 적용법인의 합병·분할시 연결사업연도 관련  
규정 보완
14.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 보완
15.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방법 개선
16. 사업의 포괄적 출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승계 허용

17. 투자회사 등의 집합투자재산 중 비유동자산 평가방식 개선
18. 채권등 중도매도시 원천징수 대상소득 범위 조정
19. 중도매도시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범위 명확화
20. 비영리법인의 비과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보완
21. 종교단체의 소속 단체도 종교단체로서 비수익사업 영위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화
2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폐기물처리사업 등에 대한 비과세
2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대상 확대
24. 농수산물 중도매인·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보고불성실 가산세 제도 보완
25.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26. 의제 감가상각의 법적 근거 명확화
27. 성실납세제도 폐지
28. 기타 조문 정비

#### IV.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기타 제도보완

1.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 익금산입 유예
2. 상생협력 목적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신설
3. 취약종목 세제지원 제도 신설
4. 지방 시·군 소재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한도 확대
5.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포기 요건 정비
6.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동업기업의 동업자에 대한 세무신고 내용 통보 의무화
7.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시 동업자에 통보 의무화
8. 자산의 포괄적 양도시 이월결손금 및 내재손실 공제 제한
9. 기업구조개편 관련 조문 명확화
10.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통한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조세특례 정비

11. 기업구조조정 지원 특례 일몰연장
12.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 과세특례 일몰연장
13.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14.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대체취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일몰연장
15. 학교법인이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에서 학교법인에 출연시 손금인정 특례제도 일몰연장
16.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일몰연장
17.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 【법 · 시행령 개정일자】

##### ○ 법 률

- 법인세법 : 2010.12.30 (제10423호)
- 조세특례제한법 : 2010.12.27 (제10406호)

##### ○ 대통령령

- 법인세법 시행령 : 2010.12.30 (제22577호)
- 법인세법 시행령 : 2011.3.31 (제22812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2010.12.30 (제22583호)

##### ○ 기획재정부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 2011.2.28 (제187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2011.4.7 (제204호)

## I.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세법 정비

### 1.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회계기준으로 포함 (영 §79)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감법」1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K-GAAP)</li> <li>○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li> <li>○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li> <li>○ 기타 법령에 따라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li> </ul> | <input type="checkbox"/> K-IFRS·일반기업회계기준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IFRS</li> <li>○ 「외감법」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li> <li>* ('10년 이전) 기업회계기준(K-GAAP)<br/>( '11년 이후) 일반기업회계기준</li> <li>○ 좌 동</li> <li>○ 좌 동</li> <li>○ 좌 동</li> </ul> |

#### (2) 개정이유

- 기업회계기준(K-GAAP)이 '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K-IFRS)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대체되는 점을 감안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 K-IFRS 도입기업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법 §23)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결산상 계상한<br>경우 손금산입<br>(결산조정사항)<br><br><신 설> | <input type="checkbox"/> 좌 동<br><br><input type="checkbox"/> 신고조정 선택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조정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법인 : K-IFRS 적용 법인</li> <li>- 대상자산 : 사업용 유형고정자산,<br/>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li> </ul> </li> <li>○ 신고조정 적용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산상 인식한 감가상각비에 추가하여 신고조정<br/>한도까지 손금 산입 가능</li> <li>- 개별 자산별로 신고조정 가능</li> </ul> </li> <li>○ 신고조정시 감가상각비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12.31일 이전 취득 자산 : K-IFRS 도입<br/>이전 개별 자산별 감가상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상각률) K-IFRS 도입이전 동일한 업종에<br/>사용되는 동종자산의 3년 평균 상각률</li> <li>▪ (자산별 한도) 자산별로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br/>자산별 한도 계산</li> <li>▪ (동종자산 한도) 동종자산에 대하여 기준상각<br/>률을 적용하여 동종자산별 한도 계산</li> </ul> </li> <li>⇒ 개별자산별로 신고조정한 감가상각비의 합계가<br/>동종자산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고조정<br/>감가상각비 결정</li> <li>- 2014.1.1일 이후 취득 자산 : 세법상 기준내용<br/>연수를 적용한 개별 자산별 감가상각비</li> </ul> </li> </ul> |

(2) 개정이유

- K-IFRS 도입시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세부담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참고> '13년 이전 취득분 신고조정 사례

- K-IFRS 도입전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
- 취득가액 및 내용연수

| 구분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내용연수<br>(K-GAAP) | 내용연수<br>(K-IFRS) |
|-----|--------|--------|------------------|------------------|
| A자산 | 1,000원 | 400원   | 5년               | 5년               |
| B자산 | 2,000원 | 1,000원 | 20년              | 40년              |
| C자산 | 3,000원 | 1,500원 | 10년              | 20년              |

① 기준정액상각률 :  $(200+100+300)/(1,000+2,000+3,000) = 10\%$

② 자산별 신고조정 한도

- A자산 :  $1,000 \times 10\% = 100\text{원} < \text{결산조정시 감가상각비 } 200\text{원}$
- B자산 :  $2,000 \times 10\% = 200\text{원} > \text{결산조정시 감가상각비 } 50\text{원}$
- C자산 :  $3,000 \times 10\% = 300\text{원} > \text{결산조정시 감가상각비 } 150\text{원}$

③ 회사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 총 700원

- A자산(결산조정 선택) : 200원
- B자산(신고조정 선택) : 200원
- C자산(신고조정 선택) : 300원

④ 총 손금산입액 한도 :  $(1,000+2,000+3,000) \times 10\% = 600\text{원}$

⇒ 감가상각비 700원중 100원 손금불산입

⑤ 손금불산입액 배분

- 개별 자산별 추가 신고조정 손금산입액 범위 내에서 법인이 손금불산입액 배분

### 3.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 요건 (규칙 §12)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p><input type="checkbox"/>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상 권리, 법령에 따른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으로서 법령·계약 등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기간이 무한하거나 유한하더라도 취득가액의 10% 미만 비용으로 갱신 가능한 것</li> <li>○ K-IFRS에 따라 결산상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으로 분류</li> <li>○ 결산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을 것</li> </ul> <p>* K-IFRS상 비한정내용연수 무형자산 : 특정 무형자산이 순 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는 경우의 그 무형자산</p> |

#### (2) 개정이유

-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대상인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요건 규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4. 감가상각자산 업종 및 종류 구분 (규칙 §13)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 <div> <input type="checkbox"/> 감가상각자산이 사용되는 업종의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자산 기준내용연수표(별표 6)에 따른 업종 분류</li> </ul> </div> <div> <input type="checkbox"/> 감가상각자산의 종류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별 기준내용연수 분류표상 동일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을 동일종류 자산으로 분류</li> </ul> </div> <table border="1"> <tr> <td>①</td><td>시험연구용 자산인 건물부속설비, 구축물, 기계장치</td></tr> <tr> <td>②</td><td>시험연구용 자산 광학기기, 시험기기, 측정기기, 공구, 기타 시험연구용 설비</td></tr> <tr> <td>③</td><td>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td></tr> <tr> <td>④</td><td>특허권, 어업권,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td></tr> <tr> <td>⑤</td><td>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축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td></tr> <tr> <td>⑥</td><td>댐사용권</td></tr> <tr> <td>⑦</td><td>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td></tr> <tr> <td>⑧</td><td>선박 및 항공기</td></tr> <tr> <td>⑨</td><td>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 및 구축물</td></tr> <tr> <td>⑩</td><td>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 및 구축물</td></tr> <tr> <td>⑪</td><td>기타 자산(기계장치 등)</td></tr> </table> | ① | 시험연구용 자산인 건물부속설비, 구축물, 기계장치 | ② | 시험연구용 자산 광학기기, 시험기기, 측정기기, 공구, 기타 시험연구용 설비 | ③ |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④ | 특허권, 어업권,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 ⑤ |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축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 ⑥ | 댐사용권 | ⑦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⑧ | 선박 및 항공기 | ⑨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 및 구축물 | ⑩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 및 구축물 | ⑪ | 기타 자산(기계장치 등) |
| ①     | 시험연구용 자산인 건물부속설비, 구축물, 기계장치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시험연구용 자산 광학기기, 시험기기, 측정기기, 공구, 기타 시험연구용 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                             |   |                                            |   |                       |   |                                                                         |   |                                                 |   |      |   |                       |   |          |   |                                                         |   |                                                 |   |               |
| ④     | 특허권, 어업권,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   |                             |   |                                            |   |                       |   |                                                                         |   |                                                 |   |      |   |                       |   |          |   |                                                         |   |                                                 |   |               |
| ⑤     |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축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   |                             |   |                                            |   |                       |   |                                                                         |   |                                                 |   |      |   |                       |   |          |   |                                                         |   |                                                 |   |               |
| ⑥     | 댐사용권                                                                                                                                                                                                                                                                                                                                                                                                                                                                                                                                                                                                                                                                                                                                                                                                                                                                                                                                                                                                                                           |   |                             |   |                                            |   |                       |   |                                                                         |   |                                                 |   |      |   |                       |   |          |   |                                                         |   |                                                 |   |               |
| ⑦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                             |   |                                            |   |                       |   |                                                                         |   |                                                 |   |      |   |                       |   |          |   |                                                         |   |                                                 |   |               |
| ⑧     | 선박 및 항공기                                                                                                                                                                                                                                                                                                                                                                                                                                                                                                                                                                                                                                                                                                                                                                                                                                                                                                                                                                                                                                       |   |                             |   |                                            |   |                       |   |                                                                         |   |                                                 |   |      |   |                       |   |          |   |                                                         |   |                                                 |   |               |
| ⑨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 및 구축물                                                                                                                                                                                                                                                                                                                                                                                                                                                                                                                                                                                                                                                                                                                                                                                                                                                                                                                                                                                        |   |                             |   |                                            |   |                       |   |                                                                         |   |                                                 |   |      |   |                       |   |          |   |                                                         |   |                                                 |   |               |
| ⑩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 및 구축물                                                                                                                                                                                                                                                                                                                                                                                                                                                                                                                                                                                                                                                                                                                                                                                                                                                                                                                                                                                                |   |                             |   |                                            |   |                       |   |                                                                         |   |                                                 |   |      |   |                       |   |          |   |                                                         |   |                                                 |   |               |
| ⑪     | 기타 자산(기계장치 등)                                                                                                                                                                                                                                                                                                                                                                                                                                                                                                                                                                                                                                                                                                                                                                                                                                                                                                                                                                                                                                  |   |                             |   |                                            |   |                       |   |                                                                         |   |                                                 |   |      |   |                       |   |          |   |                                                         |   |                                                 |   |               |

(2) 개정이유

- '13년 이전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한도 계산을 위해 감가상각 자산의 업종 및 종류 구분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5.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한도 계산 관련 세부 규정 (규칙 §13)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p>□ 사업연도중 취득한 자산의 기준상각률 및 신고조정 한도 계산 :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을 사용한 월수에 비례하게 축소</p> <p>* 사업연도중 취득한 자산은 실제 감가상각시 연간 감가상각률을 사용월수에 비례하게 축소하므로 조정하지 않을 경우 상각률이 과소평가됨</p> <p>○ 취득가액 : 장부상 취득가액 × (사용한 월수<sup>*</sup>/사업연도 월수)</p> <p>○ 미상각잔액 : 장부상 미상각잔액 × (사용한 월수<sup>*</sup> / 사업연도 월수)</p> <p>* 1월 미만의 기간은 1월로 간주</p> <p>□ K-IFRS 도입 전 동종자산에 대하여 결산상 정액법·정률법을 모두 사용한 경우 또는 적격합병등으로 동종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양도법인과 양수법인의 결산상각방법이 다른 경우 기준상각률 및 신고조정 한도 계산방법</p> <p>→ ①, ② 방법중 선택(선택시 계속 적용)</p> <p>① 기준연도 결산일 현재 취득가액이 더 큰 자산의 감가상각방법으로 통일하여 기준상각률 및 신고조정 한도 계산</p> <p>② 정액법·정률법 사용 자산 비중을 반영하여 기준상각률 및 신고조정 한도 계산</p>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연도 결산일 현재 정액법·정률법을 사용하는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액법 비중 : (정액법 사용 자산의 취득가액 합계)/(동종자산 취득가액 합계)</li> <li>- 정률법 비중 : (정률법 사용 자산의 취득가액 합계)/(동종자산 취득가액 합계)</li> </ul> </li> <li>○ 동종자산의 감가상각 한도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 × 정액법 비중 × 정액법 기준상각률] +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 × 정률법 비중 × 정률법 기준상각률]</li> </ul> </li> <li>○ 개별자산의 감가상각 한도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가액 × 정액법 비중 × 정액법 기준상각률] + [미상각잔액 × 정률법 비중 × 정률법 기준상각률]</li> </ul> </li> </ul> |
|--|--------------------------------------------------------------------------------------------------------------------------------------------------------------------------------------------------------------------------------------------------------------------------------------------------------------------------------------------------------------------------------------------------------------------------------------------------------------------------------------------------------------------------------------------------------------------|

## (2) 개정이유

- 동종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이 2개 이상인 경우 신고조정 한도 계산방법 규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6. 기준내용연수의 50%를 적용하는 건물의 범위에 축사 추가 (규칙 별표7)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건물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골, 콘크리트건축물 : 40년</li> <li>○ 기타 건축물 : 20년</li> <li>- 다만, 다음 건물은 위 내용연수의 50%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 정류장, 차고, 폐수 및 폐기물처리 건물, 대형점포, 국제회의시설, 무역 거래기반시설</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사 추가</li> </ul> |

### (2) 개정이유

- 축사의 경우 가축 배설물로 인한 부식 등의 영향으로 일반 건축물에 비해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준 내용연수 단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 기존 축사에 대한 개정 내용연수 적용 방법

- 2011.1.1 이전에 취득하여 감가상각하던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개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7.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 및 중고자산의 신고 내용연수 산정 방법 개정 (영 §29의2)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중고자산 취득시 신고내용연수 산정 : 기준내용연수의 50%~100%에서 신고내용연수 결정</p> <p>○ 특례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li> <li>- 기타의 방법으로 취득한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한 자산</li> </ul> <p>&lt;신 설&gt;</p> | <p>&lt;삭 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한 자산 (합병·분할로 인한 취득 포함)</li> </ul> <p>□ 적격합병·적격분할·적격자산의 포괄적 양도를 통해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산정 특례 : 두가지 방법중 선택</p> <p>① 피합병법인등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방법</p> <p>* 피합병법인 등의 신고상각방법 및 신고내용연수, 취득가액, 미상각잔액 등을 사용하여 상각범위액 계산</p> <p>② 취득이후 합병법인 등이 계속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합병법인등의 상각범위액을 적용하는 방법</p> <p>* 피합병법인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에 합병법인 등의 신고상각방법 및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범위액 계산</p> |

(2) 개정이유

- 적격합병 등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합병 등 전후에 동일한 감가상각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8.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신고 사유 추가 (영 §27, §29)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감가상각방법 변경사유<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사업인수·외국인투자·경제적 여건 변동 등의 경우 변경 신고 허용</li> </ul>     | <input type="checkbox"/> 변경사유 추가<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IFRS를 최초로 도입하여 결산상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li> <li>○ 모회사가 K-IFRS를 최초로 도입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 자회사가 회계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해 감가상각방법을 모회사와 동일하게 변경한 경우</li> </ul> |
| <input type="checkbox"/> 내용연수 변경사유<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의 훼손·가동률 증가신기술 보급·경제적 여건 변동 등의 경우 변경 신고 허용</li> </ul> | <input type="checkbox"/> 변경사유 추가<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IFRS 최초 도입하여 결산상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li> <li>○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li> </ul>                                                                |

### (2) 개정이유

- K-IFRS 도입시 일부기업의 감가상각방법이 변경(정률→정액)되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점을 감안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9. 기능통화 도입기업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 (법 §53의2)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p>□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 다음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세표준 계산 가능</p> <p>* 선택시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p> <p>○ (방법1) 기능통화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기능통화로 표시된 과세표준을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p> <p>○ (방법2) 원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재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p> <p>○ (방법3) 표시통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p> <p>* 대차대조표 항목은 기말환율, 손익계산서 항목은 거래일 환율(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등은 평균 환율)로 환산한 재무제표</p> |

### (2) 개정이유

-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를 위해 기능통화 도입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참고> 기능통화 세액계산 사례

- 자산 3개를 3회에 걸쳐 각각 3\$에 구입(환율 1,000원, 1,100원, 1,200원)  
 자산 2개를 2회에 걸쳐 각각 5\$에 판매(환율 1,300원, 1,400원),  
 나중에 판매한 대금(5\$)은 연말까지 매출채권으로 보유  
 취득가액 10\$(취득시 환율 1,000원)인 유형자산 감가상각(5년 정액법)  
 선입선출법, 기능통화는 미국달러, 세율 50%, 12월말에 세금 납부  
 연평균 환율 1,250원, 기말환율 1,500원

| 구분          | 방법1      | 방법2       | 방법3       |
|-------------|----------|-----------|-----------|
| 매출액         | \$10     | ₩ 13,500  | ₩ 13,500  |
| 매출원가        | \$6      | ₩ 6,300   | ₩ 6,300   |
| 감가상각비       | \$2      | ₩ 2,000** | ₩ 2,500** |
| 외화환산이익      | -        | ₩ 500***  | -         |
| 당기순이익       | \$2      | ₩ 5,700   | ₩ 4,700   |
| 외화환산이익익금불산입 | -        | ₩ 500     | -         |
| 과세표준        | \$2      | ₩ 5,200   | ₩ 4,700   |
| 산출세액        | \$1      | ₩ 2,600   | ₩ 2,350   |
| 납부할세액원화금액   | ₩ 1,250* | ₩ 2,600   | ₩ 2,350   |

\* 연평균환율 적용을 가정

\*\* (감가상각비) 방법2는 역사적환율 적용, 방법3은 평균환율 적용(표시통화 환산시 감가상각비 · 대손충당금 · 퇴직급여충당금 등은 평균환율 적용)

\*\*\* (외화환산이익) 매출채권 기말환율 적용에 따른 환산차익. 방법3의 경우 표시통화환산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

## 10.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 (법 §53의3)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환산방법은 3가지 방법중 선택</p> <p>① 화폐성여부로 구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폐성 항목 : 기말환율</li> <li>- 비화폐성 항목 : 거래일 환율</li> </ul> <p>②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구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차대조표 항목 : 기말환율</li> <li>- 손익계산서 항목 : 평균환율</li> </ul> <p>③ 모든 항목 기말환율적용</p> | <p>□ 기능통화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 중 선택</p> <p>* 선택시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p> <p>① (방법1) 해외사업장 통화로 계산한 과세표준을 원화로 환산</p> <p>② (방법2) 원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재작성</p> <p>③ (방법3) 표시통화 재무제표환산 방법 적용</p> <p>* 다만, 손익계산서 항목 원화환산시 거래일환율·평균환율중 선택 허용</p> |

### (2) 개정이유

○ K-IFRS도입에 따라 변경된 환산방법을 세법상 인정

\* 기능통화 과세표준 계산방식과 동일한 방법도 추가하고 기업의 선택 허용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K-IFRS 도입법인)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그밖의 법인)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11.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 인식 방법 개정 (영 §73, §76)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iv>□ 평가손익 인식대상 외화자산<br/>부채의 범위</div> <div>○ 은행<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외화자산 · 부채</li><li>- 통화선도 · 통화스왑</li></ul></div> <div>○ 비은행 : 평가손익 불허</div> <div>□ 외화자산의 평가 방법</div> <div>○ 은행 : ①, ② 중 선택</div> <table><tr><td></td><td>외화자산 · 부채</td><td>통화선도 · 스왑</td></tr><tr><td>①</td><td>평가 ○</td><td>평가 ×</td></tr><tr><td>②</td><td>평가 ○</td><td>평가 ○</td></tr></table> <div>○ 비은행 : 평가손익 불허</div> |                  | 외화자산 · 부채          | 통화선도 · 스왑 | ① | 평가 ○ | 평가 × | ② | 평가 ○ | 평가 ○ | <div>○ 은행<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화폐성 외화자산 · 부채</li><li>- 좌 동</li></ul></div> <div>○ 비은행<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화폐성 외화자산 · 부채</li><li>- 화폐성 외화자산 ·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선도 · 스왑</li></ul></div> <div>□ 외화자산의 평가 방법</div> <div>○ 은행 : ①, ② 중 선택</div> <table><tr><td></td><td>화폐성<br/>외화자산 · 부채</td><td>통화선도 · 스왑</td></tr><tr><td>①</td><td>평가 ○</td><td>평가 ×</td></tr><tr><td>②</td><td>평가 ○</td><td>평가 ○</td></tr></table> <div>○ 비은행 : ①, ② 중 선택</div> <table><tr><td></td><td>화폐성<br/>외화자산 · 부채</td><td>헷지 목적<br/>통화선도 · 스왑</td></tr><tr><td>①</td><td>평가 ×</td><td>평가 ×</td></tr><tr><td>②</td><td>평가 ○</td><td>평가 ○</td></tr></table> |  | 화폐성<br>외화자산 · 부채 | 통화선도 · 스왑 | ① | 평가 ○ | 평가 × | ② | 평가 ○ | 평가 ○ |  | 화폐성<br>외화자산 · 부채 | 헷지 목적<br>통화선도 · 스왑 | ① | 평가 × | 평가 × | ② | 평가 ○ | 평가 ○ |
|                                                                                                                                                                                                                                                                                                                                                                                                                    | 외화자산 · 부채        | 통화선도 · 스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 평가 ○             |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평가 ○             |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폐성<br>외화자산 · 부채 | 통화선도 · 스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 평가 ○             |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평가 ○             |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폐성<br>외화자산 · 부채 | 헷지 목적<br>통화선도 · 스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 평가 ×             |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평가 ○             |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개정이유

- 은행외 기업에 평가손익 불인정시 헷지거래로 실질소득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세부담이 발생하는 문제점 보완
  - \* 현재는 회계상 헷지대상자산의 평가손익과 헷지거래손익이 상쇄되는 경우에도 세법상 평가손익이 부인되어 거래손익만 인식되므로 세부담이 발생
  - \*\* 은행의 경우 K-IFRS 개정 사항을 반영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참고1> 최초 평가시 손익 인식 방법

(대통령령 제225772호 부칙§16, 2010.12.30)

#### □ 최초 평가시 평가손익

$$= \boxed{\text{평가손익을 최초로 인식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한 가액}} - \boxed{\text{평가손익을 최초로 인식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한 가액}}$$

- \* 평가손익 최초 인식시 당해연도 평가분만 반영되도록 하여 기존 평가손익 부인 누적액이 일시에 과세소득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
- 직전 사업연도까지 부인한 평가손익은 유보로 관리하고 처분시 익금 또는 손금 산입

## <참고2> 최초 평가손익 인식 사례

### < 사        례 >

외화자산을 2009년 중에 1\$에 취득하고, 2011년 사업연도부터 외화 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적법하게 신고한 후, 2013년에 동 자산을 처분한 경우

#### 1)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 일자        | 환율    | 회계상   |     | 세무상   |      | 세무조정(유보) |      |
|-----------|-------|-------|-----|-------|------|----------|------|
|           |       | 가액    | 손익  | 가액    | 손익   | 당기       | 누계   |
| '09년 중    | 1,000 | 1,000 | -   | 1,000 | -    | -        | -    |
| '09.12.31 | 1,200 | 1,200 | 200 | 1,000 | -    | Δ200     | Δ200 |
| '10.12.31 | 1,500 | 1,500 | 300 | 1,000 | -    | Δ300     | Δ500 |
| '11.12.31 | 1,600 | 1,600 | 100 | 1,100 | 100* | -        | Δ500 |
| '12.12.31 | 2,000 | 2,000 | 400 | 1,500 | 400  | -        | Δ500 |
| '13년 중    | 2,000 | 2,000 | -   | 2,000 | 500  | 500      | -    |

\* '11년말 회계상 가액(1,600) - '10년말 회계상 가액(1,500)

#### 2)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

| 일자        | 환율    | 회계상   |      | 세무상   |       | 세무조정(유보) |     |
|-----------|-------|-------|------|-------|-------|----------|-----|
|           |       | 가액    | 손익   | 가액    | 손익    | 당기       | 누계  |
| '09년 중    | 1,500 | 1,500 | -    | 1,500 | -     | -        | -   |
| '09.12.31 | 1,300 | 1,300 | Δ200 | 1,500 | -     | 200      | 200 |
| '10.12.31 | 1,000 | 1,000 | Δ300 | 1,500 | -     | 300      | 500 |
| '11.12.31 | 900   | 900   | Δ100 | 1,400 | Δ100* | -        | 500 |
| '12.12.31 | 500   | 500   | Δ400 | 1,000 | Δ400  | -        | 500 |
| '13년 중    | 500   | 500   | -    | 500   | Δ500  | Δ500     | -   |

\* '11년말 회계상 가액(900) - '10년말 회계상 가액(1,000)

## 12.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신고조정 허용 (법 §30)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input type="checkbox"/> 비상위험준비금을 결산상 비용계상한 경우 손금인정 (결산조정사항)</p> <p>○ 보험종목별 손금산입한도<br/>: 보유보험료 ×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 × 35%~100%</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 <p><input type="checkbox"/> 좌 동</p> <p><input type="checkbox"/> K-IFRS 적용 보험사는 비상위험준비금 신고조정 허용</p> <p>○ 손금산입 한도<br/>: <math>\sum(\text{보유보험료} \times \text{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 \times 90\%</math></p> |

### (2) 개정이유

- K-IFRS 도입시 비상위험준비금이 부채로 계상되지 않아 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 해소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13. 저축성보험료 책임준비금 적립한도 개정 (영 §57)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저축성보험료 책임준비금을<br/>결산상 비용 계상한 경우 다음<br/>한도내에서 손금 인정</p> <p>○ 결산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br/>해약시 지급하여야 할 금액</p> <p>* 보장성보험료 책임준비금 : 미경과<br/>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배당준<br/>비금 등</p> | <p>○ Max [현행한도, 금융위가 기획<br/>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br/>최소적립기준*]</p> <p>* K-IFRS에서 미래 예상수익률 기준<br/>으로 적립토록 함에 따라 금융위<br/>에서 적립 기준 마련 예정</p> <p>* 보장성보험료 책임준비금 : 현행<br/>유지</p> |

#### (2) 개정이유

- K-IFRS 도입시 적립기준 변경 사항을 세법에 반영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14. 건설자금이자 자본화에 일반차입금 이자 포함 (법 §28)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건설자금이자 자본화<br><br>○ 자본화 대상 : 특정차입금 이자<br><br>○ 자본화 강제여부 : 강제사항<br><br><신 설> | <input type="checkbox"/> 건설자금이자 자본화<br><br>○ 자본화 대상 : 특정차입금 및 일반차입금 이자<br><br>○ 자본화 강제여부<br>- 특정차입금 이자 : 강제<br>- 일반차입금 이자 : 선택<br><br>○ 자본화 대상 일반차입금 이자 계산방법<br><br>- $\text{Min}[(\text{지출액 적수}/\text{사업연도 일수} - \text{특정차입금 적수}/\text{사업연도 일수}) \times \text{자본화이자율}^*, \text{실제 발생 일반차입금 차입원가}]$<br><br>* 자본화이자율 : $\text{실제 발생 일반 차입금 차입원가} \div \text{일반차입금 적수}/\text{사업연도 일수}$ |

### (2) 개정이유

- K-IFRS에서 건설자금이자 자본화가 강제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차입금도 자본화 선택 허용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15. 중소기업 장기할부거래 회수기준 신고조정 허용 (영 §68)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장기할부거래 수익인식</p> <p>○ 인도기준 원칙</p> <p>- 다만, 결산상 회수기준으로 인식한 경우 회수시점에 수익 인식</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 <p>○ (중소기업 아닌 법인) 좌 동</p> <p>○ (중소기업) 결산상 인도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회수기준으로 신고조정 선택 허용</p> |

### (2) 개정이유

- K-IFRS에서 회수기준 선택을 금지하여 현행 세법 유지시 K-IFRS 적용 중소기업은 세법상 회수기준 적용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16. 건설계약 수익인식 방법 개정 (영 §69)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input type="checkbox"/> 건설계약·예약매출 수익인식</p> <p>○ 계약기간 1년이상 : 진행기준</p> <p>○ 계약기간 1년미만</p> <p>- (원칙) 인도기준</p> <p>- (예외) 진행기준으로 결산한 경우 진행기준 적용</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 <p><input type="checkbox"/> 수익인식 방법 변경</p> <p><input type="checkbox"/> 진행기준으로 통일</p> <p>- 다만, 법 51조의2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중 K-IFRS 도입 기업의 예약매출의 경우 인도 기준 적용</p> <p>* 명목회사로서 지급배당소득공제 적용대상 법인</p> <p>○ 중소기업의 1년미만 건설계약·예약매출의 경우 결산상 진행 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인도 기준으로 신고조정 선택 허용</p> |

### (2) 개정이유

- K-IFRS 도입에 따라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진행기준으로 통일하되,
  - 상장·비상장 중소기업간 과세형평을 위해 중소기업의 1년 미만 건설계약·예약매출에 대해 인도기준으로 신고조정 허용
- \* 다만, K-IFRS를 도입한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의 경우 회계·세무의 수익인식 시기가 다를 경우 지급배당 소득공제(법 §51의2)의 적용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인도기준 적용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17. 법인세법상 리스분류 기준 개정 (영 §24⑤)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리스 거래시 감가상각 인식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리스 :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li> <li>○ 운용리스 :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li> </ul>                                                                                                                                                                                   | <input type="checkbox"/> 좌 동                                                                                                                                                                                                                                                                   |
| <input type="checkbox"/> 금융·운용리스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요건중 하나를 만족시 금융리스로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스기간 종료시 당초 정한 금액으로 리스자산 양도</li> <li>- 리스기간 종료시 임대매수선택권 부여</li> <li>- 리스기간이 기준내용연수의 75% 이상</li> <li>-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장부가액의 90% 이상</li> <li>- 리스자산의 전용이 사실상 불가능</li> </ul> </li> </ul> | <input type="checkbox"/> 금융·운용리스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기업회계 처리기준*에 따른 분류 준용</li> </ul> <p>*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제회계기준</li> <li>2. 일반기업회계기준</li> <li>3.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 처리준칙</li> <li>4.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li> </ol> |

### (2) 개정이유

- K-IFRS상 리스의 분류기준이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다르므로 회계기준분류에 따르도록 하여 기업의 세무조정부담 완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산부터 적용

## 18. K-IFRS 도입기업 등의 과세표준 신고시 재무제표 제출방법 명확화 (법 §60, 영 §97)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과세표준신고시 재무제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br/>다만, 기능통화 도입기업은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의미함</li> </ul>                                                |
| <input type="checkbox"/> 추가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조정계산서</li> <li>○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 자산·부채명세서 등</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통화 도입기업은 표시통화 재무제표 제출</li> <li>○ 기능통화 도입기업중 원화기준 과세표준계산방법 선택기업은 원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작성한 재무제표 제출</li> </ul> |
| <input type="checkbox"/> 표준재무제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제표를 전자신고를 통해 표준재무제표로 제출 가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K-IFRS 도입 기업은 표준재무제표를 제출</li> </ul>                                                    |

### (2) 개정이유

- K-IFRS 적용기업과 기능통화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을 위하여 필요한 재무제표 제출 의무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19. 현행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규정 법령화 (영 §31, §71)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                                 |                                                |
|---------------------------------------------------------------------------------------------------------------------------------------------------------------------------------------------------------------------------------------------------------------------------------------------------------------------------------------------------------------------------------------------------------------------------------------------------------------------|---------------------------------|------|-----------|------|-----------------|---------------------------------|------------------------------------------------|
| <p><input type="checkbox"/> 예규로 운영되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산상 손상차손 인식한 경우 :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li> <li>○ 자산유동화를 위해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 : 해당자산이 매각된 것으로 보아 관련 손익의 귀속시기 결정</li> </ul> <p>* 회계상 자산유동화 및 받을 어음 할인 등의 처리 방법</p> <table border="1"> <tr> <td>기업회계기준 (K-GAPP)</td><td>매각거래</td></tr> <tr> <td>일반기업 회계기준</td><td>매각거래</td></tr> <tr> <td>국제회계기준 (K-IFRS)</td><td>거래의 실질에 따라 매각거래 또는 담보부 차입거래로 분류</td></tr> </table> | 기업회계기준 (K-GAPP)                 | 매각거래 | 일반기업 회계기준 | 매각거래 | 국제회계기준 (K-IFRS) | 거래의 실질에 따라 매각거래 또는 담보부 차입거래로 분류 | <p><input type="checkbox"/> 법인세법령 규정으로 명확화</p> |
| 기업회계기준 (K-GAPP)                                                                                                                                                                                                                                                                                                                                                                                                                                                     | 매각거래                            |      |           |      |                 |                                 |                                                |
| 일반기업 회계기준                                                                                                                                                                                                                                                                                                                                                                                                                                                           | 매각거래                            |      |           |      |                 |                                 |                                                |
| 국제회계기준 (K-IFRS)                                                                                                                                                                                                                                                                                                                                                                                                                                                     | 거래의 실질에 따라 매각거래 또는 담보부 차입거래로 분류 |      |           |      |                 |                                 |                                                |

### (2) 개정이유

- 현재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법령에 명확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해당 없음

## 20. 단기매매증권 및 파생상품 취득부대비용의 귀속시기 변경 (영 §72)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자산의 취득가액</p> <p>○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br/>매입가액에 부대비용 가산</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 <p>○ 좌 동</p> <p style="padding-left: 20px;">- 다만, 단기매매증권, 파생상품 제외</p> <p>○ 단기매매증권, 파생상품의 취득<br/>원가 : 매입가액(부대비용 포함<br/>하지 않음)</p> |

### (2) 개정이유

- K-IFRS 도입으로 인한 금융상품 취득부대비용 관련 회계처리 변경사항\*을 세무상 인정

\* 단기매매증권, 파생상품의 취득부대비용 회계처리 변경내용  
: (K-GAAP) 취득원가에 가산 → (K-IFRS) 당기비용처리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K-IFRS 적용기업) 2010.12.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그 밖의 기업)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Ⅱ. 기부금 지원세제의 종합적 개편

### <개 정 배 경>

- 최근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문화 성숙, 기부금 세제 지원 확대 등에 힘입어 우리사회의 기부문화가 점진적으로 확산되고는 있으나,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
  - 기부 활성화를 통해 ‘따뜻한 시장경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기부금단체의 투명성·공익성을 제고하는 등 기부금 지원세제를 합리적·종합적으로 개편하였음

### 1. 기부금 구분체계 간소화 (조특법 §73, 법 §24②)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기부금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50% (개인 100%) 한도 손비 인정</li> <li>○ 특례기부금 : 소득금액의 50% 한도 손비 인정('12년말 일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교 시설비등 기부금은 '10년말 일몰</li> </ul> </li> <li>○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5%(개인 20%) 한도 손비 인정</li> </ul> | □ 기부금 구분체계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폐 지)</li> <li>○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손비인정 한도는 2011.1.1 부터 10%(개인 30%)로 확대</li> </ul> </li> </ul> |

#### (2) 개정이유

- 기부금 구분체계의 간소화를 통해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7.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 2. 기부금 단체의 공익성기준 명확화 (법 §24②, 영 §36의2)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법정기부금 대상 (기관 단순열거)</p> <p>* 소득금액의 50%(개인 100%) 한도로<br/>손비 인정</p> <p>○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및<br/>국군장병 위문금품</p> <p>○ 천재·지변(특별재난 포함)에<br/>따른 이재민 구호금품</p> <p>○ 공공 교육기관(시설비·교육비·<br/>장학금·연구비 한정)</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개인 한정)</p> | <p>□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 명확화</p> <p>○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및<br/>국군장병 위문금품</p> <p>○ 천재·지변(특별재난 포함)에<br/>따른 이재민 구호금품</p> <p>○ 공공 교육기관(시설비·교육비·<br/>장학금·연구비 한정)</p> <p style="padding-left: 20px;">- 在外한국학교 포함 (단, 기부금<br/>모집·배분실적 홈페이지 공개<br/>및 국세청 제출 필요)</p> <p>○ 공공 의료기관(시설비·교육비·<br/>연구비 한정)</p> <p>* 종전 특례기부금 단체</p> <p>○ 전문모금기관</p> <p>* 기부금 모집·배분이 주된 목적인 비영리<br/>법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기관</p> <p style="padding-left: 20px;">- 기부금 모집·배분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br/>홈페이지를 개설</p> <p style="padding-left: 20px;">- 결산서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p> <p style="padding-left: 20px;">- 외부감사 및 전용계좌 개설</p> <p style="padding-left: 20px;">- 기부금 배분지출이 총지출의 80%이상,<br/>관리·운영비가 기부금수입의 10%이하</p> <p style="padding-left: 20px;">- 신청일전 1년 이전 설립될 것</p> <p style="padding-left: 20px;">- 개별단체 배분액이 총배분액의 25%이하,<br/>출연자등 특수관계법인에 배분 금지</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대한적십자사(개인 한정)</li><li>※ 특례기부금 (소득금액의 50% 한도내 소득공제)<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공의료기관, 문화예술진흥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독립기념관, EBS, 한국국제교류재단, 국민신탁법인,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li></ul></li></ul> <p>□ 법정기부금단체 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매년말 법률(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li></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공기관운영법」上 공공기관(단, 공기업 제외) 및 개별법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설립목적이 공익목적 활동이고, 정부지원금·기부금이 총 수입의 1/3이상</li></ul></li></ul> <p>□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전문모금기관, 공공기관등, 한국학교 : 반기 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li></ul> <table border="1"><tr><th>구 분</th><th>주무관청 추천 기한</th><th>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한</th></tr><tr><td>상반기</td><td>1.31</td><td>3.31</td></tr><tr><td>하반기</td><td>7.31</td><td>9.30</td></tr></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다만, 2011년 상반기에는 3.31까지 추천하고 7.31까지 지정</li><li>○ 상기 외의 단체 : 매년말 법인세법 개정</li></ul> | 구 분             | 주무관청 추천 기한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 상반기 | 1.31 | 3.31 | 하반기 | 7.31 | 9.30 |
|----------------------------------------------------------------------------------------------------------------------------------------------------------------------------------------------------------------------------------------------------------------------------------------------------------------------------------------|-----------------------------------------------------------------------------------------------------------------------------------------------------------------------------------------------------------------------------------------------------------------------------------------------------------------------------------------------------------------------------------------------------------------------------------------------------------------------------------------------------------------------------------------------------------------------------------------------------------------------------------|-----------------|------------|-----------------|-----|------|------|-----|------|------|
| 구 분                                                                                                                                                                                                                                                                                                                                    | 주무관청 추천 기한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            |                 |     |      |      |     |      |      |
| 상반기                                                                                                                                                                                                                                                                                                                                    | 1.31                                                                                                                                                                                                                                                                                                                                                                                                                                                                                                                                                                                                                              | 3.31            |            |                 |     |      |      |     |      |      |
| 하반기                                                                                                                                                                                                                                                                                                                                    | 7.31                                                                                                                                                                                                                                                                                                                                                                                                                                                                                                                                                                                                                              | 9.30            |            |                 |     |      |      |     |      |      |

## (2) 개정이유

- 기부금을 구분하는 공익성 기준 명확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7.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 3. 법정기부금 지정단체의 지정요건 및 의무 신설 (영 §36의2)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한국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학교</li> <li>○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li> <li>○ 지정 취소된 경우 지정취소일 부터 5년, 재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li> </ul>                                                                                                                                                                                                           |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전문모금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li> <li>○ 외부감사를 받을 것</li> <li>○ 결산서류등을 인터넷(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li> <li>○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li> <li>○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총지출금액의 80%이상</li> <li>○ 기부금 모집·배분·법인관리 운영에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이하</li> <li>○ 개별 법인별 평균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25%이하</li> <li>○ 상증세법상 특수관계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없을 것</li> <li>○ 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월의 종료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li> </ul> |

|                    |                                                                                                                                                                                                                                                                                                                |
|--------------------|----------------------------------------------------------------------------------------------------------------------------------------------------------------------------------------------------------------------------------------------------------------------------------------------------------------|
| <p>&lt;신 설&gt;</p> | <p>□ 공공기관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등 공익 목적</li> <li>○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li> <li>○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li> <li>○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정부지원금 및 기부금 합계액이 총 수입금액의 3분의1 이상</li> <li>○ 지정 취소된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2년, 재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났을 것</li> </ul> |
| <p>&lt;신 설&gt;</p> | <p>□ 법정기부금 지정단체의 의무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기부금 모금·배분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li> <li>○ 연간 기부금 모금·활용실적을 국세청장에게 제출</li> </ul>                                                                                                                                                            |

## (2) 개정이유

- 법정기부금 지정단체의 지정요건 및 의무 신설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7.1 이후 최초로 법정기부금단체로 정하는 분부터 적용

#### 4. 기부금단체 지정기간 보완 (영 §36①, §36의2)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br>○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이후 5개 사업연도<br>* 해당 기부금단체의 사업연도<br><input type="checkbox"/> 법정 기부금단체 지정기간<br>○ 공공 교육·의료기관 등 : 지정기간 없음<br><신 설> |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일부터 6년<br>○ 공공 교육·의료기관 등 : 지정기간 없음<br>○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일*부터 6년<br>* 다만 2011년은 2011.7.1 부터 적용 |

##### (2) 개정이유

- 기부금단체(비영리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지정 효과를 부여함에 따라
    - 지정일이 동일하더라도 기부금단체의 사업연도에 따라 지정 효과가 달라지는 문제 해소
- 例示) 12월말 결산법인(㉠)과 3월말 결산법인(㉡)을 '11.3월말 기부금단체로 지정 時  
 ㉠은 11.1월부터 지정효과가 발생하나 ㉡은 '10.4월부터 지정효과가 발생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지정기부금) 2011.3.31 이후 최초로 지정하는 단체부터 적용
- (법정기부금) 2011.7.1 이후 최초로 정하는 단체부터 적용

## 5. 법정기부금 지정단체의 지정요건 이행실적 제출 의무 신설 및 지정취소 요건 신설 (영 §36의2)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p>□ 법정기부금 지정단체(전문모금기관, 공공기관)에 대한 지정요건 이행 실적 제출 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단체는 지정 요건의 이행 실적을 주무관청에 제출*</li> <li>* 지정기부금단체와 같이 2년마다 제출</li> <li>○ 주무관청은 제출받은 이행실적의 점검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li> <li>* 지정기부금단체와 같이 2년마다 제출</li> </ul>                                                              |
| <신 설> | <p>□ 법정기부금 지정단체*에 대한 지정취소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공공기관등</li> <li>○ 사업연도별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li> <li>○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경우</li> <li>○ 지정요건·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지정요건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li> <li>○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li> </ul>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 <p><input type="checkbox"/> 재지정 배제 사유</p> <p>○ 지정기간중 지정취소사유에<br/>해당한 경우</p> |
|------------------------------------------------|-----------------------------------------------------------------------------|

(2) 개정이유

- 지정기부금 지정단체와 같이 법정기부금 지정단체도 이행실적 제출의무, 지정취소 및 재지정 배제 제도를 신설하여 법정기부금 지정단체의 투명성을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7.1 이후 최초로 정하는 법정기부금단체부터 적용

## 6. 개인·법인 기부금간 기부금 구분기준 일치 (법 §24②, 영 §36)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iv>□ 개인·법인 기부금간 기부금 구분<br/>(법정·특례·지정)이 차이</div>                                                                                                                                                                                                                                                                    | <div>□ 개인·법인 기부금간 기부금 구분<br/>(법정·지정) 통일</div>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tr><th>단체</th><th>개인</th><th>법인</th></tr><tr><td>대한적십자사</td><td>법정</td><td>지정</td></tr><tr><td>문화예술진흥기금</td><td>법정</td><td>특례</td></tr><tr><td>사회복지공동모금회</td><td>법정</td><td>특례</td></tr><tr><td>공공의료기관(대학병원, 국립암센터 등)</td><td>법정</td><td>특례</td></tr><tr><td>사내근로복지기금</td><td>-</td><td>특례</td></tr></table> | 단체                                            | 개인 | 법인 | 대한적십자사 | 법정 | 지정 | 문화예술진흥기금 | 법정 | 특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법정 | 특례 | 공공의료기관(대학병원, 국립암센터 등) | 법정 | 특례 | 사내근로복지기금 | - | 특례 | <table><tr><th>단체</th><th>개인·법인</th></tr><tr><td>대한적십자사</td><td>법정<br/>(단, 수입금액<br/>요건 충족 필요)</td></tr><tr><td>문화예술진흥기금</td><td>법정</td></tr><tr><td>사회복지공동모금회</td><td>법정</td></tr><tr><td>공공의료기관(대학병원, 국립암센터 등)</td><td>법정</td></tr><tr><td>사내근로복지기금</td><td>지정</td></tr></table> | 단체 | 개인·법인 | 대한적십자사 | 법정<br>(단, 수입금액<br>요건 충족 필요) | 문화예술진흥기금 | 법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법정 | 공공의료기관(대학병원, 국립암센터 등) | 법정 | 사내근로복지기금 | 지정 |
| 단체                                                                                                                                                                                                                                                                                                                   | 개인                                            | 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한적십자사                                                                                                                                                                                                                                                                                                               | 법정                                            | 지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화예술진흥기금                                                                                                                                                                                                                                                                                                             | 법정                                            | 특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법정                                            | 특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공의료기관(대학병원, 국립암센터 등)                                                                                                                                                                                                                                                                                                | 법정                                            | 특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내근로복지기금                                                                                                                                                                                                                                                                                                             | -                                             | 특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체                                                                                                                                                                                                                                                                                                                   | 개인·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한적십자사                                                                                                                                                                                                                                                                                                               | 법정<br>(단, 수입금액<br>요건 충족 필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화예술진흥기금                                                                                                                                                                                                                                                                                                             | 법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법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공의료기관(대학병원, 국립암센터 등)                                                                                                                                                                                                                                                                                                | 법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내근로복지기금                                                                                                                                                                                                                                                                                                             | 지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개정이유

- 기부금을 공익성 기준으로 구분하여 개인·법인간 통일성 있게 운용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7.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 7. 지정기부금 손비인정 한도 확대 (법 §24)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지정기부금* 기부시 소득공제·손금 산입 한도<br>* 학술·종교·복지·문화예술단체 등 일반적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금<br>○ (개인) 소득금액의 20%* 內<br>* 단, 종교단체 기부금은 10%<br>○ (법인) 소득금액의 5% 內 | <input type="checkbox"/> 한도 확대<br>○ (개인) 소득금액의 30%* 內<br>* 종교단체 기부금은 현행 유지<br>○ (법인) 소득금액의 10% 內 |

### (2) 개정이유

- 세제상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기부 활성화 도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 8. 해외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신설 (영 §36①5)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p>□ 일정요건을 갖춘 비영리 외국법인·단체와 국제기구에 대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p> <p>○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외동포 협력·지원, 한국 홍보,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외국법인(단체 포함) 또는 국제기구</li> <li>- 일반적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금 모집·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 불특정다수 공익목적, 비정치활동 등</li> </ul> </li> </ul> <p>○ 지정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절차(법인영 §36⑨) 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무관청이 매분기 말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 신청 → 매분기말일까지 지정(공고)</li> <li>* 내국인 기부금 모집·활용실적을 제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신청서 제출</li> </ul> </li> </ul> <p>○ 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일이 속한 연도의 1.1일부터 6년 동안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li> </ul> <p>○ 사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내국인 기부금 모집·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 말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li> <li>- 기부금 모집·활용실적 미제출 또는 지정요건 위반時 지정취소 및 5년간 재지정 금지</li> </ul> |

### (2) 개정이유

- 국제화·국가 품격 등을 감안하여 해외 기부시 소득공제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 9. 지정기부금단체 추가등 (규칙 §18, 별표12·13 신설)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지정기부금단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li> <li>○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한국여성정책연구원</li> <li>○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간의 한-아세아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설립된 한-아세아 센터</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 <p>□ 지정기부금단체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li> <li>○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6①2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li> <li>○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간의 한-아세안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설립된 한-아세안 센터</li> <li>○ 「독도의 용수비대 지원법」에 따른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li> <li>○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li> <li>○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표준협회</li> <li>○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추가</li> </ul> |

□ 용도지정 기부금

- 연계기업\*이 비영리 사회적 기업에 기부한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 사회적기업에 대해 재정지원·경영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된 자(사회적 기업육성법 §2.「4」)

<신 설>

-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사업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농업씨시오연합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6①\*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을 한시 유예하되, 급여지급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그 재원을 노조 재정자립에 사용

□ 용도지정 기부금 추가·삭제

- 기부대상자를 연계기업에서 일반법인으로 확대

-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신용대출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2 ①11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그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어업경영체 추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사업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농수식품CEO연합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삭 제>

## (2) 개정이유

### ☐ 근로복지공단

- 산재의료관리원이 근로복지공단에 통폐합되고 공단의 복지사업 범위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요양 및 재활, 재활 보조기구의 연구개발·검정 및 보급”으로 확대됨을 감안하여 공단을 지정기부금단체로 규정

### ☐ 한국개발연구원

- 국민경제의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여러 부문의 과제를 연구·분석하고 국제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의 경제 정책 수립과 경제발전에 기여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세계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외부적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 정립에 기여

### ☐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특례기부금 폐지('11.7)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 ☐ Micro-credit 사업 영위 법인

- 특례기부금 폐지('11.7)에 따라 특례기부금단체 중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단체 추가

☐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및 기념탑 건립·운영, 독도에 관한 학예활동 및 역사 연구 사업 등을 수행

\* 유사사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쟁기념사업회 등

☐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 6·25전쟁의 역사적인 교훈의 연구 및 기념사업 수행, 호국안보 의식 고취와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기여

\* 유사사례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 한국표준협회

-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보급 촉진으로 과학기술의 진흥과 생산능률의 향상 도모

☐ 재가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과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사실상 동일하므로

-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지정기부금 대상에 추가

☐ 사회적기업의 기부대상자 확대

- 기부자를 연계기업에서 일반 법인으로 확대하여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지원

☐ 어업경영체

- '09.4.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신설된 어업경영체\*의 육성을 지원

\* 어업경영체는 종전 『수산업법』상의 영어조합법인, '09.4.1 신설된 어업회사 법인과 어업인으로 구성

-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삭제
  - 당초 「노동조합법」에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유예하면서 노조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 전임자 급여지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되 同 재원을 노조에 재정자립재원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
  - 「노동조합법」이 개정('09년말)되어 '10.7월부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이 금지되었으므로 이를 반영
-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단체(§18①) 및 용도지정 기부금(§18②)에 대해서는 각각 별표 12, 별표 13으로 조문 정비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2.28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 특례기부금 폐지와 관련된 사항은 2011.7.1 이후부터 적용

## 10. 현물기부자산 평가 및 취득가액 보완 (영 §37, §72)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현물로 기부한 경우 자산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특례기부금 : 장부가</li> <li>○ 지정기부금 : 시가</li> <li>○ 비지정기부금 : 시가</li> </ul> <input type="checkbox"/>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당시 시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지정기부금 : 장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특수관계자에게 기부시 시가</li> </ul> </li> <li>○ 좌 동</li> <li>○ 원칙 : 기부 당시 시가</li> <li>○ 예외 : 기부자와 특수관계 없는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자산은 기부법인의 기부당시 장부가액 (증여세 전액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기부당시로 소급하여 시가 적용)</li> </ul> |

### (2) 개정이유

- 세금이 선의의 기부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지정기부금도 법정 기부금과 동일하게 장부가로 평가
  - 다만, 특수관계자를 통한 편법상속·증여소지 차단을 위해 특수관계자에 대한 기부는 현행대로 시가로 평가
- 지정기부금이 장부가로 평가되므로 이를 기부받는 공익법인 등의 자산 취득가액도 장부가로 일치시킴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3.31 이후 최초로 제공하거나 기부받는 자산부터 적용

## 11. 특례기부금 폐지 (조특법 §73 삭제)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input type="checkbox"/> 다음 기부금(특례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0%(개인·법인 공통)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 허용</p> <p>○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12.31 이전 지출분</li> <li>· 단, 대학교 시설비등 기부금은 '10.12.31 이전 지출분</li> </ul> <p>○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진흥기금(개인기부금은 100% 한도)</li> <li>- 대학병원 등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li> <li>- 대학교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명목 기부금(법인기부금은 100% 한도)</li> <li>-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한정)</li> <li>- 독립기념관, EBS, 한국국제교류재단, 국민신탁법인</li> <li>-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li> <li>- 사회복지공동모금회</li> <li>- 결식·빈곤층아동 지원</li> <li>-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 기부</li> <li>-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 등</li> </ul> | <p><input type="checkbox"/> 특례기부금 폐지</p> <p style="text-align: center;">* 대학교 시설비등 기부금은 '11년부터 법정기부금으로 지원</p> |

## (2) 개정이유

- 현행 법정·특례·지정 기부금 구분 체계를 법정·지정기부금 구분 체계로 간소화
  - 현행 특례기부금은 분류기준에 맞추어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재분류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7.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 \* 대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명목 기부금은 '10년말 일몰 폐지

### Ⅲ. 법인세법 관련 기타 제도보완

#### 1.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합병시 사업영위 요건 완화 (법 §44②1, 영 §80의2②)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합병시 과세이연 요건<br>○ 1년이상 사업영위 법인간 합병<br><br>○ 합병대가의 80%이상 합병신주 교부 및 피합병법인 지배주주등은 합병신주 50%이상 보유<br>* SPAC과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은 주식보유의무 배제<br><br>○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 | <input type="checkbox"/> SPAC 합병시 과세특례 신설<br>○ SPAC은 사업영위 요건 배제*<br>* SPAC과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은 1년이상 사업영위 필요<br><br>○ (좌 동)<br><br><br>○ (좌 동) |

##### (2) 개정이유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활성화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1) 개정내용

- 202 -

(2) 개정이유

-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과 다른 법령간 상충 문제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3.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 분할, 현물출자, 양도 또는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 3. 합병시 피합병법인 지배주주등에 대한 주식교부 요건 완화 (영 §80의2④, §82의2④)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適格 합병이 되기 위한 합병신주 배정 요건</p> <p>○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합병신주 보유의무가 있는 주주)은 다음 비율 이상으로 합병신주를 교부 받아야 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math display="block">\frac{\text{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등에 교부한 합병대가 총합계액}^*}{\text{해당 주주등의 지분비율}} \geq 1</math> </div> <p>* 합병신주 및 금전·기타 재산가액의 총 합계액</p> | <p>□ 합병신주 배정비율 완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math display="block">\frac{\text{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등에 교부한 합병신주 총합계액}^*}{\text{해당 주주등의 지분비율}} \geq 1</math> </div> <p>* 금전·기타 재산가액은 제외</p> |

#### (2) 개정이유

- 합병대가 총 합계액의 20%는 금전으로 교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등은 모두 주식으로 받아야 하는 불합리 개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합병  
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지배주주등에 대한 주식교부  
요건 계산방법

□ 관련예규 (재법인-351, 2011.4.22)

- 합병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2010.12.30 개정전의 것) 산식에서 “제4항에 따른 각 주주  
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각  
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 제외)을 피합병법인 전체 지분(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 제외)으로 나눈 비율로 하는 것입니다.

< 지배주주등에 대한 주식교부 요건 계산방법 >

|                                         |   |                                                                                                                                        |
|-----------------------------------------|---|----------------------------------------------------------------------------------------------------------------------------------------|
| 합병법인이<br>피합병법인<br>주주등에 교부한<br>합병신주 총합계액 | × | 법인영 제80조의2제4항(2010.12.30 개정전)에<br>따른 각 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br>(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 제외)<br>-----<br>피합병법인 전체 지분<br>(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 제외) |
|-----------------------------------------|---|----------------------------------------------------------------------------------------------------------------------------------------|

#### 4. 합병·분할 등 기업구조개편 관련 조문 명확화

(법 §44의2②③, §44의3①②③, §45③④⑤, §46①②, §46의2②③, §46의3②③, §46의4③④⑤, §47②③, §47의2②, §76의13④⑤, §76의14②④)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합병·분할시 합병법인·분할신설 법인등에 대한 과세</p> <p>○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고,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의 차액을 합병매수차손익(분할매수차손익)으로 하여 손금·익금에 산입</p> <p>□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어 피합병 법인이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p> <p>* 사업목적, 사업 계속성, 지분 연속성</p> <p>○ 합병법인은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양도받음</p> <p>□ 합병·분할시 감면·세액공제 승계 여부</p> <p>○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p> <p>* 시행령 §96</p> <p>- 적격 합병·분할의 경우 승계하되, 승계받은 사업소득 범위내 공제하고, 사후관리 위반시 승계하여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을 법인세에 가산하고 향후 사업연도부터 미적용</p> <p>□ 합병·분할시 피합병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공제 제한</p> | <p>□ 비적격인 경우 합병매수차손익(분할매수차손익)을 손금·익금 산입함을 명확화</p> <p>□ 완전자법인을 합병함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에도 합병 법인은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양도 받는 것임을 명확화</p> <p>* 완전자법인 합병시에는 과세특례 요건과 관계없이 양도손익 과세이연 가능</p> <p>□ 감면·세액공제의 승계 및 사후 관리 위반시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 명확화</p> <p>○ 적격 합병·분할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공제</p> <p>○ 사후관리 위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받아 공제 받은 세액공제액을 법인세에 가산하고 향후 사업연도부터 미적용</p> <p>□ 적격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공제 가능한 승계사업 소득의 개념을 명확화</p> |

|                                                                                                                                                                                                                                                                                                                                                                                                                                                                                                                                  |                                                                                                                                                                                                                                                                                                                                                                                                                                                                       |
|----------------------------------------------------------------------------------------------------------------------------------------------------------------------------------------------------------------------------------------------------------------------------------------------------------------------------------------------------------------------------------------------------------------------------------------------------------------------------------------------------------------------------------|-----------------------------------------------------------------------------------------------------------------------------------------------------------------------------------------------------------------------------------------------------------------------------------------------------------------------------------------------------------------------------------------------------------------------------------------------------------------------|
| <p>○ 피합병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p> <p>* 합병후 5년간 발생한 손실에 한정</p> <p>□ 연결납세에서 자산 처분손실 공제 제한 (합병·완전자법인 취득 후 5년간)</p> <p>○ (합병시) 승계사업 소득에서만 공제</p> <p>○ (완전자법인 취득시) 완전자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에서만 공제</p> <p>* 대상 : 완전자법인이 된 후 5년간 발생한 모든 자산의 처분손실</p> <p>□ 물적분할·현물출자에 있어 분할 신설법인·피출자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의 가액</p> <p>○ 직접적 규정 없음</p> <p>* 간접적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法 §47②, §47의2②) 사후관리 위반시 양도받은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li> <li>- (令 §84④, §84의2④)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승계받은 자산을 시가로 계상하고, '시가 - 장부가'를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li> </ul> | <p>○ 적격으로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前 금액)에서만 공제</p> <p>□ 합병에 준하여 연결납세에서 처분손실 공제제한 규정 명확화</p> <p>○ (합병시) 적격으로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前 금액)에서만 공제</p> <p>○ (완전자법인 취득시) 완전자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금액)에서만 공제</p> <p>* 대상 : 완전자법인이 된 후 5년간 발생한 완전자법인이 되기 前 취득한 자산의 처분손실</p> <p>□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장부가액으로 자산이 승계됨을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관리 위반시 차액&gt;0인 경우 익금산입됨을 명확화</li> </ul> |
|----------------------------------------------------------------------------------------------------------------------------------------------------------------------------------------------------------------------------------------------------------------------------------------------------------------------------------------------------------------------------------------------------------------------------------------------------------------------------------------------------------------------------------|-----------------------------------------------------------------------------------------------------------------------------------------------------------------------------------------------------------------------------------------------------------------------------------------------------------------------------------------------------------------------------------------------------------------------------------------------------------------------|

|                                                                                                                                       |                                                              |
|---------------------------------------------------------------------------------------------------------------------------------------|--------------------------------------------------------------|
| <input type="checkbox"/> 내국법인(출자법인)이 요건을 갖추어<br>현물출자시<br><input type="checkbox"/>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피출자법<br>인)의 주식가액 중 양도차익 상<br>당액을 손금에 산입 | <input type="checkbox"/> 피출자법인이 내국법인인 경우에만<br>과세특례가 적용됨을 명확화 |
|---------------------------------------------------------------------------------------------------------------------------------------|--------------------------------------------------------------|

## (2) 개정이유

- (법 §44의2②③, §46의2②③) 제44조의2가 비적격 합병·분할의  
경우에만 적용됨을 명확화
  - \* 합병·분할 매수차손·차익은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비적격에 한하여 적용 가능
- (법 §44의3①) 완전자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적격요건과 관계  
없이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음(§44③)을 반영
  - \* 완전자법인 합병시 피합병법인은 양도손익을 없는 것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음
- (법 §44의3②④, §46의3②④, §59③) 적격 합병·분할시 피합병  
법인등이 적용받던 감면·세액공제 등의 승계 및 공제범위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명확화
  - \* 현재는 법 §59③에서 포괄위임하여 시행령 §96에서 규정
- (법 §45①③, §46의4①③) 합병·분할시 피합병법인등의 처분  
손실 공제제한 규정이 적격인 경우에만 적용됨을 명확화
  - \* 이월결손금에 준하여(적격인 경우에만 승계되고 이에 따라 승계된  
결손금의 공제를 일정 제한) 처분손실 공제를 제한하는 것임을 감안
- (법 §45③, §46의4③, §76의13②) 합병·분할시 피합병법인등  
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공제제한 소득의 범위  
명확화
  - \* 현재 공제가능 소득의 범위가 ‘승계사업의 소득금액’으로 되어 있는 바
    - 통상 소득금액은 해당연도 처분손실이 공제되어 계산된 금액이므로 이를 기준  
으로 할 경우 피합병법인 소득에서도 공제받지 못하는 결과(처분손실 공제  
前 소득으로 함이 타당)

\*\* 연결납세에 있어 완전자법인의 자산 처분손실에 대한 공제 제한이  
'완전자법인이 되기 전 취득한 자산'임을 명확화 (완전자법인이 된 후  
취득한 자산은 내재손실을 이용한 조세회피와는 무관)

○ (법 §46①) 분할매수차손·익 규정, 이월결손금 승계 등의 규정이  
인적분할에만 적용됨을 명확화

○ (법 §47②, §47의2②) 물적분할·현물출자시 양도손익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분할신설법인·피출자법인은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양도받음을 명확화

○ (법 §47③) 물적분할에 있어 사후관리 요건 위반시 승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0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익금산입함을 명확화

\* 합병, 인적분할, 현물출자 등의 경우 차액>0인 경우에만 익금산입

\*\* 상법상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합병이 곤란한 점을 반영(분할법인이 물적  
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를 취득해야 함)

○ (법 §47의2①) 현물출자 과세특례시 출자를 받은 법인(피출자  
법인)이 내국법인이어야 함을 명확화

\* 합병, 분할 등 기업구조개편은 모두 당사법인이 내국법인일 것을 요구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해당 없음

## 5. 「노조법」에 위반하여 급여 지급시 손비 부인 (영 §50①5)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법인이 노조전임자등에 임금 지급시</p> <p>○ 인건비로 하여 손비 인정</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 <p>○ 좌 동</p> <p>- 「노동조합법」제24조②④에 위반하여 급여 지급시 손금 불산입</p> |

### (2) 개정이유

- 「노동조합법」이 개정되어 '10.7.1부터 원칙적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금지됨에 따라
  - 법률에 위반하여 지급한 노조전임자 임금은 위법·부당경비로서 업무와 무관한 지출이므로 손금산입을 불허
- 다만, 「노동조합법」에서 Time Off 제도 등 일정한 경우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임금은 손금산입 허용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발생 급여에 대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6. 퇴직급여 적립액 손비 한도 개선 (영 §60)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     |     |     |     |     |     |     |     |    |    |
|-------------------------------------------------------------------------------------------------------------------------------------------------------------------------------------------------------------------------------------------------------------------------------------------------------------|--------------------------------------------------------------------------------------------------------------------------------------------------------------------------------------------------------------------------------------------------------------------------------------------------------------------------------------------------------------------------------------------------------------------------------------------------------------------------------------------------------------------------------------------------------------|-----|-----|-----|-----|-----|-----|-----|-----|-----|-----|-----|-----|----|----|
| <div>□ 퇴직급여 적립액 손금산입 한도</div> <div>① 퇴직급여충당금(사내유보)<div>-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 추계액의 30%</div></div> <div>② 퇴직연금 보험료(사외적립)<div>&lt;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gt;<div>: ㉠ - ㉡ - ㉢<div>㉠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 추계액</div><div>㉡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액</div><div>㉢직전연도까지 지출한 보험료</div></div>&lt;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gt;<div>: 연금보험료 전액 손비 인정</div></div></div> | <div>□ 손금산입 한도 조정</div> <div>① 퇴직급여충당금(사내유보)<div>- 추계액 한도를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축소 ('16년 폐지)</div><table><tr><td>'10</td><td>'11</td><td>'12</td><td>'13</td><td>'14</td><td>'15</td><td>'16</td></tr><tr><td>30%</td><td>25%</td><td>20%</td><td>15%</td><td>10%</td><td>5%</td><td>0%</td></tr></table><div>* 단, 既 손금인정된 총당금은 총당금 한도가 축소되더라도 한도 초과분을 익금산입하지 않음</div></div> <div>② 퇴직연금 보험료(사외적립)<div>&lt;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gt;<div>: 좌 동<div>㉠일시퇴직기준 또는 보험수리기준 추계액 중 큰 금액</div><div>㉡좌 동</div><div>㉢좌 동</div></div>&lt;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gt;<div>: 좌 동</div></div></div>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30% | 25% | 20% | 15% | 10% | 5% | 0% |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     |     |     |     |     |    |    |
| 30%                                                                                                                                                                                                                                                                                                         | 25%                                                                                                                                                                                                                                                                                                                                                                                                                                                                                                                                                          | 20% | 15% | 10% | 5%  | 0%  |     |     |     |     |     |     |     |    |    |

### (2) 개정이유

- 퇴직금 사내유보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축소·폐지하여 퇴직연금(사외적립) 활성화 유도

- '11년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의무적립액이 일시퇴직기준과 보험수리기준에 따른 추계액 중 큰 금액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제도를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7.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퇴직연금등의 범위 보완 (규칙 §23)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input type="checkbox"/>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퇴직보험 등*</p> <p>* 퇴직보험 · 퇴직신탁 · 퇴직연금</p> <p>○ 보험업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퇴직보험 · 퇴직연금</p> <p>○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취급하는 퇴직 일시금신탁 · 퇴직연금</p> <p>○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가 취급하는 퇴직연금</p> <p>○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p> | <p><input type="checkbox"/>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퇴직연금 등*</p> <p>* 퇴직연금(개인퇴직계좌 포함)</p> <p>○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p> <p>－ 보험업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p> <p>－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 · 집합투자업자 ·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p> <p>－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p> <p>－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p> |

### (2) 개정이유

- 퇴직보험 · 신탁 폐지(퇴직급여보장법에서 '11.1부터 퇴직급여 제도로서 불인정)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직연금사업을 개시(퇴직급여보장법 '10.9.29 개정)함에 따라 대상기관에 추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2.28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8. 퇴직 보험 · 신탁 既 적립금에 대한 처리 (영 부칙 §19)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퇴직보험 · 신탁 보험료 등의 손금 산입</p> <p>○ 보험료등 납입액은 ‘퇴직급여 추계액 -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p> <p>- 既 납입 보험료등 적립금 운용 수익은 퇴직보험 · 신탁 보험료 등으로 하여 손금산입</p> | <p>□ 既 납입 적립금에 대한 특례</p> <p>○ ‘11.1.1이후 납입하는 퇴직보험 · 신탁 보험료 등은 손금산입 불허</p> <p>- 다만, 既 납입 보험료등 적립금 운용수익에 한하여 손금산입 허용(부칙)</p> <p>※ 既 적립금은 종전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함(부칙)</p> <p>* 퇴직금 지급시 익금산입</p> |

### (2) 개정이유

- 퇴직보험 · 신탁 폐지('11.1.1)에 따른 정비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납입 분부터 적용

## 9.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범위 명확화 (영 §86의2)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input type="checkbox"/>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소득공제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금 50억원 이상</li> <li>○ 자산관리·운용·처분 업무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li> </ul> <p>*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또는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설립한 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관리는 금융회사(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li> </ul> <p>&lt;신 설&gt;</p> | <p><input type="checkbox"/> 요건 추가</p> <p>-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는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없음</p> |

### (2) 개정이유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 투명성과 안정성 제고

※ 2010.10.7자 기획재정부 예규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대체 ⇒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자산관리회사의 출자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  
 < 법인세제과-856, 2010.10.7 >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자산관리회사와 동일인 이거나 자산관리회사의 출자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소득공제가 배제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10. 소액채권의 대손요건 완화 (영 §19의2)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소액채권의 대손 처리<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위 : 10만원이하*<br/> * 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액 기준</li> <li>○ 대손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수기일이 6개월이상 경과</li> <li>- 회수비용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을 것</li> </ul> </li> <li>* 일반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파산 등 대손 사유가 매우 엄격</li> </ul> | <input type="checkbox"/> 소액채권 범위 확대<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금액 : 20만원이하</li> <li>○ 대손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li> </ul> <p style="text-align: right;">&lt;삭 제&gt;</p> |

### (2) 개정이유

- 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11.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 즉시상각 허용 (영 §31⑥4)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즉시상각 대상 재산<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액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당 100만원 이하로서 고유 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 아닌 자산</li> </ul> </li> <li>○ 기타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필름, 어구, 공구, 가구, 가정용기구, 시계, 시험기기, 전기기구, 가스기기 등</li> </ul> </li> </ul> | <input type="checkbox"/> 즉시상각 대상 재산 추가<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기타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화기(휴대용 전화기 포함), 개인용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추가</li> </ul> </li> </ul> |

### (2) 개정이유

- 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12. 가자금금 인정이자율의 시가 기준 개선 (영 §89③)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 時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p> <p>○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 이자율 중 선택</p> <p>* 법인의 자금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이자율</p> <p>- '09년 법인세 신고시 선택하지 않은 경우 당좌이자율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p> <p>- 선택한 방식은 모든 거래에 적용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p> <p>※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선택한 경우 同 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한하여 당좌대출 이자율 적용</p> | <p>□ 시가 기준 변경</p> <p>○ 원칙 : 가중평균차입이자율*</p> <p>*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에 한하여 당좌이자율 적용 허용 (현행과 동일)</p> <p>○ 예외 : 당좌이자율 선택 허용 (단, 일단 선택하면 3년간 의무적용)</p> |

### (2) 개정이유

- '09.2월 법률 개정시 선택을 허용하였으나 한번 선택하면 이후 사업연도에 항구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점 보완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 종전에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여 적용하던 법인의 경우에도 2011.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

### 13. 연결납세 적용법인의 합병·분할시 연결사업연도 관련규정 보완 (법 §76의8⑥, 영 §120의12⑤⑥⑦)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p>□ 연결모법인 간의 적격합병·적격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시 연결납세제도가 계속 적용되도록 의제 연결사업연도 등 적용방식을 규정*</p> <p>* 신설 규정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제연결사업연도) 합병·분할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기점으로 전·후 기간을 각각 1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 적용</li> <li>- (합병 등 이전) 피합병법인 등의 완전자법인에 대해 합병등기일 등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등까지의 기간(의제연결사업연도)에 대해 피합병법인 등과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도록 함</li> <li>- (합병 등 이후) 피합병법인 등의 완전자법인에 대해 합병등기일 등의 다음날부터 당해 합병법인 등의 연결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의제연결사업연도)에 대해 합병법인 등과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도록 함</li> </ul> |

#### (2) 개정이유

- 연결모법인간 합병·분할 혹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발생시 연결납세방식이 계속 적용되도록 규정 보완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14.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 보완 (법 §84①, §85①)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기한<br>○ 해산 등으로 인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부터 3월 이내 신고               |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   |
| <input type="checkbox"/> 청산소득 중간신고 신고기한<br>○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월 이내 | ○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월 이내 |

### (2) 개정이유

- 납세자의 신고편의 도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해산등기하는 분부터 적용

## 15.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방법 개선 (법 §36)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대상<br><input type="checkbox"/> 국고보조금을 수령 후<br>자산 취득·개량한 경우<br><신 설> | <input type="checkbox"/> 손금산입 대상 추가<br><input type="checkbox"/> 좌동<br><input type="checkbox"/> 먼저 사업용 자산을 취득·개량<br>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br>받은 경우 추가 |

### (2) 개정이유

- 국고보조금을 나중에 수령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이 과세되는  
문제점 개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자산을 취득·개량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국고보조금을 사후에 수령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

| < 사 례 >                                                    |  |
|------------------------------------------------------------|--|
| xxx1년에 자산을 100에 취득하여 감가상각을 한 후 xxx2년에<br>국고보조금 100을 수령한 경우 |  |

| 시 기     | 구 분        |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
|---------|------------|------------------------|
| xxx1년 중 | 자산 취득      | 자산 100 / 현금 100        |
| xxx1년 말 | 감가상각비 계상   | 감가상각비 10 / 감가상각누계액 10  |
| xxx2년 중 | 국고보조금 수령   | 현금 100 / 국고보조금(익금) 100 |
| xxx2년 말 | 압축기장충당금 계상 | (손금산입) 압축기장충당금 90* △유보 |
|         | 감가상각비 계상   | 감가상각비 10 / 감가상각누계액 10  |
|         | 압축기장충당금 조정 | (익금산입) 압축기장충당금 10 유보   |
|         |            | (이 하 생 략)              |

\* 손금산입할 압축기장충당금은 사업용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함

## 16. 사업의 포괄적 출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승계 허용 (법 §29③)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법인이 해산한 경우<br>○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br><신 설> | <input type="checkbox"/> 환입 제외사유 신설<br>○ 좌동<br>- 다만, 사업을 포괄적으로<br>출연받은 비영리법인이 해산한<br>비영리법인의 준비금을 승계<br>하는 경우는 제외 |

### (2) 개정이유

- 비영리법인이 사업을 포괄적 출연하면서 해산하는 때에는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므로 출연받는 법인이 준비금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개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해산등기하는 분부터 적용

## 17. 투자회사 등의 집합투자재산 중 비유동자산 평가방식 개선 (영 §75③, §86의2①)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input type="checkbox"/> 유동화전문회사 등 도관회사에 대한 법인세 과세</p> <p>○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 배당 시 배당금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p> <p>○ 배당가능이익의 계산</p> <p>－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br/>± 이월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p> <p>－ 상법상 이익준비금</p> <p>(i) 유가증권 평가손익은 제외</p> <p>(ii)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모두 포함</p> <p>*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p> <p>** 집합투자기구의 재산</p> <p><input type="checkbox"/> 유가증권 등의 평가</p> <p>○ 원칙 : 원가법(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선택)</p> | <p><input type="checkbox"/> 폐쇄형 투자회사등이 보유한 시장성 없는 자산에 대해 원가법 적용</p> <p>(i) 좌 동</p> <p>(ii)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손익은 포함</p> <p>· 폐쇄형 투자회사*의 경우 자산 중 시장성없는 자산**의 평가손익은 해당 투자회사가 원가법을 선택한 경우 제외(선택하면 이후 계속 적용)</p> <p>* 설정기간 종료일까지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p> <p>** 부동산, 특별자산, 상장증권·채무증권·파생결합증권 등에 해당하지 않는 증권</p>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외</li> <li>- 보험회사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br/>: 시가법·원가법 중 선택<br/>(선택한 방법은 이후 계속 적용)</li> <li>-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br/>: 시가법</li> <li>*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모두 포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br/>: 시가법</li> <li>· 다만, 폐쇄형 투자회사등의 비유동자산은 시가법·원가법 중 선택 허용(선택하면 이후 계속 적용)</li> </ul> |
|------------------------------------------------------------------------------------------------------------------------------------------------------------------------------------------------|----------------------------------------------------------------------------------------------------------------------------------------------|

## (2) 개정이유

- 폐쇄형(중도환매 불가능) 투자회사의 운영상 문제점 해소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3.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18. 채권등 중도매도시 원천징수 대상소득 범위 조정 (법 §73⑧, §98의3①)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보유기간 중도에 매도할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 소득</p> <p>○ 「소득세법」§46①에 따른 채권 등의 이자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지자체·내국법인·외국법인(국내지점·국내영업소 포함)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li> <li>-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li> </ul> <p>* 설정·환매의 방법으로 거래되지 않고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 방법으로 거래되는 것에 한하고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는 제외</p> <p>※ 지급시 원천징수해야 하는 소득 (법인세법 §73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자소득금액</li> <li>-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中 투자신탁의 이익</li> </ul> | <p>□ 중도매도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범위 조정</p> <p>○ 「소득세법」§46①에 따른 채권 등의 이자·할인액 및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익*</p> <p>* 설정·환매의 방법으로 거래되지 않고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 방법으로 거래되는 것에 한하고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는 제외</p> |

### (2) 개정이유

- 보유기간 중도매도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소득세법」§46①을 인용하고 있는 바,
- 소득세법 조문체계 정비 과정에서 同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현행대로 유지되도록 함

\* (현행) 채권의 이자·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개정) 채권의 이자·할인액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별도 규정)

○ 아울러, 법인세법 원천징수 규정간 불일치를 해소

\* (법인세법 §73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이자소득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으로 규정

(법인세법 §73⑧) 중도매도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소득세법」§46①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등으로 하여 이자소득 및 투자신탁의 이익 뿐만 아니라 모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포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4.1 이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

## 19. 중도매도시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Repo) 범위 명확화 (영 §114의2)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채권 중도매도시 원천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도법인이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을 원천징수</li> <li>○ 단,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은 제외</li> </ul> <p>*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o) 및 채권대차거래</p>                             |                                                                                                                                                                                  |
| <input type="checkbox"/> 환매조건부채권매매등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회사 등이 매매거래 일방 당사자일 것</li> <li>○ 同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예탁결제원 계좌 또는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 거래원장을 통해 확인될 것</li> </ul> <p>* 예탁결제원, 증권금융기관, 증권회사</p> | <input type="checkbox"/> 장내 Repo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同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예탁결제원 계좌, 거래소 거래원장(전자적 형태 포함) 또는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 거래원장을 통해 확인될 것</li> </ul> |

### (2) 개정이유

- 채권 중도매도시 원천징수가 제외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 (Repo)에 한국거래소를 통한 장내 Repo도 포함됨을 명확화

\* 재소득46073-48, 2002.02.22

【질의】 Repo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한 Repo거래의 경우 완전경쟁 매매로 이루어지는 익명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Repo거래기간 및 거래사실의 입증은 한국증권거래소의 전산처리 체계에 따라 산출되는 자료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환매조건부채권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기관의 거래자료를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해당 없음

## 20. 비영리법인의 비과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보완 (영 §2①4)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비영리법인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비과세</p> <p>&lt;신 설&gt;</p> | <p>□ 다음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은 비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자시설, 결핵·한센인시설</li> <l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중앙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li> <li>○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li> <li>○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노인전문병원 제외)</li> <li>○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li> <li>○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li> <li>○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li> <li>○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원시설, 상담소</li> <li>○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귀시설</li> <li>○ 성폭력범죄의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시설, 상담소</li> <li>○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입양기관</li> <li>○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시설, 상담소</li> <li>○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li> <li>○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 추가</li> </ul> |

## (2) 개정이유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명확화
  - \* 유권해석으로 과세되는 다음 사업을 열거대상에서 제외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전문병원(재법인-188, '09.3.6)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기관 및 약국(제도46012-10910, '01.5.2)
-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을 추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해당없음
- 2011.1.1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1. 종교단체의 소속 단체도 종교단체로서 비수익사업 영위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화 (영 §2①7)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제외 범위</p> <p>○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p> | <p>○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의 소속 단체를 포함</p> |

(2) 개정이유

- 현재 개별교회(1개 교회·사찰·성당 등)에 대한 등록제도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실정에 맞게 명확화
- \* 예규에 의해 집행되던 것을 법령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해당 없음

## 2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폐기물처리사업 등에 대한 비과세 (영 §2⑭)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수익사업 제외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업·조경수 식재 및 관리 서비스업 외의 농업</li> <li>○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li> <li>○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 사업</li> <li>○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와 국기원의 승단·승급·승품 심사사업 등</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 <p>□ 수익사업 제외 범위 추가</p> <p>○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p> |

### (2) 개정이유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업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실상 국가(지자체)업무를 대행하며, 폐기물 처리가 공공성이 큰 점을 감안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2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 대상 확대 (영 §56⑥10 신설)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익사업 소득의 5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하여 손금산입 허용</li> <li>○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내 고유목적사업에 미사용시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li> <li>* 기타 해산, 고유목적사업 폐지 등의 경우에도 익금산입 (단, 이자는 가산하지 않음)</li> <li>○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대상 고유목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법령·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에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 외의 사업으로 한정</li> <li>- (예외) 다음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 비용 및 인건비등 필요경비</li> </ul> </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외사유 추가</li> </ul>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보험 · 연금 · 공제사업을 하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법령에 따라 기금 ·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li> <li>· 의료법인이 병원건물 및 부속 토지, 의료기기 취득 위해 지출한 금액</li> <li>·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의 상호 금융예금자보호기금 출연금</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JDC의 사업 중 다음 사업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수립 · 집행하는 금액</li> <li>(ii) 외국교육 · 의료기관을 유치 하고, 설립 · 운영을 지원 하는 금액(관련 토지의 취득 · 비축을 포함)</li> <li>(iii) 투자유치를 위한 금액</li> </ul> </li> <li>* 제주특별법 §265①1호, 2호라목 · 마목(관련 토지의 취득 · 비축을 포함), 3호의 사업</li> </ul> |
|-----------------------------------------------------------------------------------------------------------------------------------------------------------------------------------------------------------------------------------------------------------|-------------------------------------------------------------------------------------------------------------------------------------------------------------------------------------------------------------------------------------------------------------------------------------------------------------------------|

## (2) 개정이유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공익사업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3.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4. 농수산물 중도매인·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 제도 보완 (대통령령 제15970호(1998.12.31) 부칙 §14, 제18706호(2005.2.19) 부칙 §14)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iv><div><input type="checkbox"/> 총매출액 중 계산서 교부 금액의 비율이 과세기간 별로 다음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해 계산서보고 불성실가산세 부과</div><div><div>○ 중도매인</div><table><tr><td>년 도</td><td>'08</td><td>'09</td><td>'10</td></tr><tr><td>비율(%)</td><td>30(50)</td><td>35(55)</td><td>40(60)</td></tr></table><div>* ( )안은 서울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div></div><div><div>○ 시장도매인</div><table><tr><td>년 도</td><td>'08</td><td>'09</td><td>'10</td></tr><tr><td>비율(%)</td><td>50</td><td>55</td><td>60</td></tr></table></div></div> | 년 도    | '08    | '09    | '10 | 비율(%) | 30(50) | 35(55) | 40(60) | 년 도 | '08 | '09 | '10 | 비율(%) | 50 | 55 | 60 | <div><div><input type="checkbox"/> 의무교부비율 상향 조정</div><div><div>○ 중도매인</div><table><tr><td>년 도</td><td>'11</td><td>'12</td><td>'13</td></tr><tr><td>비율(%)</td><td>45(65)</td><td>50(70)</td><td>55(75)</td></tr></table><div>* ( )안은 서울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div></div><div><div>○ 시장도매인</div><table><tr><td>년 도</td><td>'11</td><td>'12</td><td>'13</td></tr><tr><td>비율(%)</td><td>65</td><td>70</td><td>75</td></tr></table></div></div> | 년 도 | '11 | '12 | '13 | 비율(%) | 45(65) | 50(70) | 55(75) | 년 도 | '11 | '12 | '13 | 비율(%) | 65 | 70 | 75 |
| 년 도                                                                                                                                                                                                                                                                                                                                                                                                                                                                                        | '08    | '09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율(%)                                                                                                                                                                                                                                                                                                                                                                                                                                                                                      | 30(50) | 35(55) | 40(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도                                                                                                                                                                                                                                                                                                                                                                                                                                                                                        | '08    | '09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율(%)                                                                                                                                                                                                                                                                                                                                                                                                                                                                                      | 50     | 55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도                                                                                                                                                                                                                                                                                                                                                                                                                                                                                        | '11    | '12    | '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율(%)                                                                                                                                                                                                                                                                                                                                                                                                                                                                                      | 45(65) | 50(70) | 55(7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도                                                                                                                                                                                                                                                                                                                                                                                                                                                                                        | '11    | '12    | '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율(%)                                                                                                                                                                                                                                                                                                                                                                                                                                                                                      | 65     | 70     | 7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개정이유

- 중도매인·시장도매인의 완전한 계산서 교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의무교부비율 제도를 연장하여 적용하되
  - 계산서 제도의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의무교부비율을 상향 조정
- \* 소득세법 시행령(§147, 대통령령 제15969호 부칙 §19)에서 중도매인 계산서보고 불성실가산세 제도 보완에 따른 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해당 없음

## 25.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영 §89②)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       |       |       |       |                                                  |
|-----------------------------------------------------------------------------------------------------------------------------------------------------------------------------------------------------------------------------------------------------------------------------------------------------------------------------------------------------------------------------------------------------------------------------------------------------------------------------------|-------|-------|----|-------|-------|-------|-------|-------|-------|--------------------------------------------------|
| <div><div><input type="checkbox"/> 상속·증여시 최대주주 주식<br/>할증평가*</div><div>*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div><table><tr><td>보유주식</td><td>일반</td><td>중소</td></tr><tr><td>50%이하</td><td>20%할증</td><td>10%할증</td></tr><tr><td>50%초과</td><td>30%할증</td><td>15%할증</td></tr></table><div><div>○ 2012.12.31 이전 상속·증여받은<br/>중소기업 주식은 할증평가<br/>배제( 조특법§101 )</div></div><div><div><input type="checkbox"/>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시<br/>중소기업 할증평가 적용</div><div>※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시<br/>할증평가 배제 (소득영§167)</div></div></div> | 보유주식  | 일반    | 중소 | 50%이하 | 20%할증 | 10%할증 | 50%초과 | 30%할증 | 15%할증 | <div><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할증평가 배제</div> |
| 보유주식                                                                                                                                                                                                                                                                                                                                                                                                                                                                              | 일반    | 중소    |    |       |       |       |       |       |       |                                                  |
| 50%이하                                                                                                                                                                                                                                                                                                                                                                                                                                                                             | 20%할증 | 10%할증 |    |       |       |       |       |       |       |                                                  |
| 50%초과                                                                                                                                                                                                                                                                                                                                                                                                                                                                             | 30%할증 | 15%할증 |    |       |       |       |       |       |       |                                                  |

### (2) 개정이유

- 중소기업주식에 대해 다른 세목은 조특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할증평가를 배제하고 있는 것과 평가방법을 일치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6. 의제 감가상각의 법적 근거 명확화 (법 §23①단서 신설)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감가상각비 손비 처리</p> <p>○ 원칙 : 임의상각(法)</p> <p>- 감가상각한도 내에서 법인이 회계상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비 처리</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상각범위액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p> <p>○ 예외 : 의제상각(令)</p> <p>-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경우 상각범위액 상당액을 감가상각비로 손금으로 계상해야 함</p> <p>- 미계상·과소계상時 해당액을 감가상각한 것으로 의제하고 다음사업연도 기초자산가액에서 공제</p> | <p>□ 의제상각 법적근거 명확화</p> <p>○ 감가상각(法)</p> <p>- (원칙) 감가상각한도 내에서 법인이 회계상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비 처리</p> <p>- (예외) 법인세를 면제·감면* 받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해야 함</p> <p>* 특정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면제·감면</p> <p>○ 강제상각의 방법(令)</p> <p>- 좌 동</p> <p>- 좌 동</p> |

### (2) 개정이유

- 의제상각 제도의 법적 근거 명확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해당 없음

## 27. 성실납세제도 폐지 (법 §76의2~76의7 삭제)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성실납세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의 세무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br/>세무신고 방법을 표준화·간소화</li> <li>○ 적용대상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금액 1.5~6억원 이하</li> <li>- ERP, POS 등 도입 및 복식부기기장</li> </ul> </li> </ul> | <폐 지> |

### (2) 개정이유

- 실효성이 낮은 과세제도 정비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다만, 현재 성실납세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는 '13.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적용 허용

## 28. 기타 조문 정비 (영 §86①, §89②2)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① 자산 교환시 과세이연 특례(§86 ①)</p> <p>○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국법인이 2년이상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다른 내국법인이 2년이상 사용한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과 교환</li> </ul> <p>○ 적용제외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특법시행령 §9①(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li> <li>- 조특법시행령 §60의2①1~3 (부동산 임대·중개·매매업,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li> </ul> <p>② 합병·증자·감자 등 자본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의 산정방법</p> <p>○ 상증법§38~§39의2(합병, 증자, 감자 증여의제) 준용(§89②2)</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특법시행령 §29③(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li> <li>- 좌 동</li> </ul> <p>○ 상증법§39의3(현물출자 증여의제) 준용</p> |

### (2) 개정이유

- 소비성서비스업에 관한 규정이 조특법시행령 §9① → §29③으로 이관('10.2.18)됨에 따른 조문 정비

- 상증법 규정 신설\*('03년말 상증법§39의3 신설)에 따른 제도 보완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시가의 범위에 포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해당 없음
-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Ⅳ.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기타 제도보완

### 1.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 익금산입 유예 (조특법 §104의23)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p><input type="checkbox"/> 대상법인 : '11.12.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일반 기업회계기준 또는 K-IFRS 적용 법인</p> <p><input type="checkbox"/> 유예대상 환입액 :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p> <p>①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회계기준 변경 직전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잔액</p> <p>② 회계기준 변경 첫째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액</p> <p><input type="checkbox"/> 익금유예 및 환입 방법</p> <p>○ 익금 유예 방법</p> <p>- 회계기준 변경 첫째에 유예대상 환입액을 익금불산입</p> <p>○ 유예된 환입액 익금산입 방법</p> <p>- 익금 유예된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대손충당금 증가분과 상계</p> <p>- 잔액은 '13.1.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p> |

#### (2) 개정이유

- 회계기준 변경시 대손충당금 규모 감소로 일시 환입액이 발생함에 따른 일시적 세부담 증가 완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27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목적 기금에 대한 출연시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8의3)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p><input type="checkbox"/>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에 출연시 출연금의 7% 세액공제</p> <p>&lt;적용대상 기금&gt;</p> <p>① (상생보증펀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법」상 수탁기업 등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신·기보에 조성된 기금</p> <p>* 협력중소기업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업과 직접 납품관계를 가지는 수탁기업</li> <li>- 수탁기업과 직·간접 납품관계를 가지는 중소기업</li> <li>- 기타 대기업이 협력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중소기업</li> </ul> <p>② (동반성장기금)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R&amp;D, 생산성 향상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을 위하여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조성된 기금</p> <p>* 구체적인 지출용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amp;D) 연구·시험용시설 투자 지원 등</li> <li>- (인력) 직원 교육·훈련 위탁 지원</li> <li>- (생산성향상)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지원</li> <li>- (해외시장 진출) 해외시장 조사 및 판촉 지원</li> </ul> <p><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p> <p>○ 목적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할 경우 세액공제 금액을 추징 (추징대상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협력재단)</p> |

### (2) 개정이유

-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 3. 취약종목 세제지원 제도 신설 (조특법 §104의22)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p>□ 취약종목 운동팀 창단시 인건비·운영비 지원</p> <p>&lt;지원대상&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목) 육상, 탁구, 유도, 사이클, 럭비, 스키, 승마, 아이스하키, 펜싱, 태권도, 조정, 카누, 근대5종, 레슬링, 양궁, 사격, 테니스, 핸드볼, 역도, 복싱, 빙상, 체조, 수영, 하키, 배드민턴, 세팍타크로, 볼스·스켈, 컬링, 트라이애슬론, 바이애슬론, 스쿼시, 축구(여성팀), 정구, 요트, 볼링, 우슈, 공수도, 루지, 카바디, 크리켓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맹경기단체 종목</li> <li>○ (선수단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선수단을 구성하는 선수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을 것</li> <li>② 종목별 선수의 수는 해당 경기종목별 정원이상일 것</li> <li>③ 종목별로 해당 경기종목을 지도하는 자가 1인 이상일 것</li> </ul> </li> </ul> <p>&lt;지원방식&gt; 10% 세액공제</p> <p>&lt;지원기간&gt; 창단후 3년간</p> <p>&lt;인건비·운영비의 범위&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창단준비비) 선수의 선발심사 등 창단 준비과정에 소요되는 비용</li> <li>② (훈련비) 경기장 사용료, 전지훈련비</li> <li>③ (훈련시설 개선비) 자체보유 훈련시설 보수비</li> <li>④ (장비구입비) 경기용품, 훈련장비, 유니폼, 약품의 구입 및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li> <li>⑤ (대회참가비) 대회 참가시 이동비용, 현지 숙박비로 소요되는 비용</li> <li>⑥ (임차료) 숙소 및 차량의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li> </ul> <p>&lt;사후관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단 후 3년내 해단하거나, 운동팀이 선구단 요건을 충족치 못할 경우 지원액 추징</li> </ul> |

(2) 개정이유

- 취약종목 운동팀 지원을 통한 국민스포츠 저변 확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최초 설치하는 분부터 적용

#### 4. 지방 시·군 소재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 확대 (조특법 §74④)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p>□ 지방 소재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br/>설정한도를 확대(50%→80%)</p> <p>○ (대상지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br/>으로서 인구 등을 고려하여 선정</p> <p>- 대상지역 기준</p> <p>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는 제외</p> <p>② 인구 30만명 이하 시·군</p> <p>③ 대학병원 부재</p> <p>* 대상지역 : 121개 시·군</p> <p>동두천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광주시, 양주시,<br/>포천시,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br/>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br/>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br/>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양양군, 제천시, 단양군, 공주시,<br/>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br/>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연기군,<br/>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군산시,<br/>고창군, 부안군,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br/>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br/>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br/>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경주시, 울진군, 울릉군, 예천군,<br/>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거제시,<br/>울진군, 울릉군, 진해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거제시, 함양군,<br/>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br/>합천군, 서귀포시</p> |

##### (2) 개정이유

- 지방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한 지원확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5.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포기 요건 정비 (조특영 §100의16)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포기시 제출서류<br>○ 동업기업 적용·포기신청서<br><신 설> | ○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 |

### (2) 개정이유

- 동업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가 적용 또는 포기되는 문제점 보완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적용 또는 포기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6.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동업기업의 동업자에 대한 세무신고 내용 통보 의무화 (조특법 §100의23)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input type="checkbox"/> 동업기업과세특례* 신고</p> <p>* 동업기업을 도관으로 보아 동업기업 단계에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 단계에서만 과세</p> <p>○ 동업기업은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신고의무</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 <p><input type="checkbox"/> 동업기업과세특례 절차 개선</p> <p>○ 좌 동</p> <p>○ 동업기업에 대해 동업자들에 대한 동업기업 신고내용 통보 의무 부여</p> |

### (2) 개정이유

- 동업기업과세특례 제도의 절차적 개선을 통한 동업자의 세무 신고 편의 제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7. 자산의 포괄적 양도시 이월 세액감면·세액공제 승계 허용 (조특법 §37)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자산의 포괄적 양도시 이월세액 감면·세액공제 승계</p> <p>○ 피인수법인의 이월세액공제는 승계 불허</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 <p>□ 자산의 포괄적 양도시 이월세액 감면·세액공제 승계 허용</p> <p>○ 適格 요건을 갖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 허용</p> <p>* 「법인세법」§45(합병시) 준용</p> <p>-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잔여 세액감면·세액공제는 인수법인에 승계됨 (단, 포괄적 양도에서 제외된 자산과 관련된 감면·세액공제는 제외되며, 이후 피인수법인은 감면·공제받을 수 없음)</p> <p>- 승계된 감면·세액공제는 법인영 §96 ①~④에 따라 공제(잔여기간동안 승계사업 소득의 범위에서 공제)</p> <p>□ 사후관리 위반시 승계한 세액 감면·세액공제의 처리</p> <p>○ 「법인세법」§44의2③ 준용*</p> <p>* 既 공제받은 세액을 위반 사업연도 법인세에 가산하고, 이후 사업연도부터 미적용</p> |

### (2) 개정이유

- 자산의 포괄적 양도 특례 취지\*를 감안, 합병과 동일하게 이월 세액공제 승계 허용 및 공제 제한

\* 합병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점을 감안하여 과세이연 특례 신설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8. 자산의 포괄적 양도시 이월결손금 및 내재손실 공제 제한 (조특법 §37)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자산의 포괄적 양도시 이월결손금 공제</p> <p>○ 이월결손금 승계</p> <p>– 적격 양도시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의 피인수법인 이월결손금은 인수법인에 승계*</p> <p>* 이후 피인수법인 사업연도에는 이월결손금이 없는 것으로 봄</p> <p>○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p> <p>– (피인수법인 이월결손금) 피인수법인 승계사업 소득에서만 공제</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 <p>□ 합병과 동일하게 이월결손금 및 내재손실 공제 제한</p> <p>○ 좌 동</p> <p>– (피인수법인 이월결손금) 좌동</p> <p>– (인수법인 이월결손금) 인수법인 소득에서만 공제</p> <p>○ 내재손실 공제 제한</p> <p>– (피인수법인 내재손실) 양도후 5년내 발생하는 승계한 피인수법인 자산의 처분손실은 피인수법인 승계사업 소득에서만 공제</p> |

### (2) 개정이유

- 합병과 동일하게 이월결손금 및 내재손실 공제 제한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9. 기업구조개편 관련 조문 명확화 (조특법 §37, §38)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자산의 포괄적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과세특례</p> <p>○ 다음 요건 충족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목적, 사업의 계속성, 지분의 연속성*</li> </ul> <p>* 대가의 상당부분(포괄적 양도 95%이상, 포괄적 교환·이전 80%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을 대상법인 지배주주등이 계속 보유해야 하며(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법인 지배주주등은 지분비율 이상을 주식으로 받을 것(令)</li> </ul> <p>○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內* 사후관리 위반시 과세이연 중단</p> <p>*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년(令)</p> | <p>□ 주식배정요건의 법적 근거 명확화 및 사후관리기간의 위임 범위 명확화 (합병에 준하여 조문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될 것</li> </ul> <p>○ 3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內* 사후관리 위반시 과세이연 중단</p> <p>*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년</p> |

### (2) 개정이유

- 합병, 분할 등 여타 기업구조개편 지원제도와 동일하게 정비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해당 없음

## 10.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통한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조세 특례 정비(조특법 §38의2, 대통령령 제22812호 부칙 제8조)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통해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해당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세·법인세 과세이연</p> <p>○ 과세이연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내국법인의 주주(현물출자는 내국인 주주에 한정)가 주식의 현물출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통해 지주회사 설립·지주회사로 전환시</li> <li>- ㉡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시</li> </ul> <p>* 현물출자, 적격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한 법인</p> <p>○ 과세이연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별도 없음</li> <li>-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에 한정</li> <li>· 전환지주회사가 된 날부터 2년내 현물출자 등을 할 것</li> <li>· 자기주식교환은 지분비율미달회사의 모든 주주가 교환에 참여할 기회를 줄 것</li> </ul> </li> </ul> | <p>□ 지주회사 설립·전환 관련 과세특례 정비</p> <p>○ 과세이연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특례 삭제<br/>(현물출자는 존치)</li> <li>- ㉡ 좌 동</li> </ul> <p>○ 일반적 요건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계속성 및 지분 연속성<br/>(합병, 분할 등 일반적 기업구조개편 세제에 준하여 규정)</li> </ul> <p>* 다만, '10.12.31 현재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계속성 요건 등을 갖춘 것으로 봄</p> |

|                                                                                                                                                                                                                                                                                                                          |                                                                                                                                                                                                                                                                                                                                                                                                                                                                                                           |
|--------------------------------------------------------------------------------------------------------------------------------------------------------------------------------------------------------------------------------------------------------------------------------------------------------------------------|-----------------------------------------------------------------------------------------------------------------------------------------------------------------------------------------------------------------------------------------------------------------------------------------------------------------------------------------------------------------------------------------------------------------------------------------------------------------------------------------------------------|
| <p>○ 사후관리</p> <p>- 다음 사유 발생시 과세이연 중단<br/>(과세를 이연받은 자회사 주주에게 과세*)</p> <p>* 이연받은 양도세·법인세 상당액에 대해 과세</p> <p>※ ㉔, ㉕은 이자상당액 가산</p> <p>㉑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p> <p>㉒ 지주회사 주식 등을 증여·상속시</p> <p>㉓ 지주회사 전환후 2년내 자회사 지분비율 미충족시</p> <p>㉔ 자기주식교환일 현재 전환 지주회사의 최대주주가 자회사 임원으로 취임시</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 <p>○ 사후관리</p> <p>- 다음 사유 발생시 과세이연 중단<br/>(자회사 주식을 취득한 지주회사에 과세*)</p> <p>* 장부가액으로 계상했던 자회사 주식을 시가로 조정하고 차액을 익금산입</p> <p>※ ㉔은 이자상당액 가산</p> <p>㉒ 삭 제 (처분에 포함)</p> <p>㉔ 삭 제</p> <p>㉕ 현물출자·자기주식교환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 후 3년내 다음 사유 발생시</p> <p>·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 주주(지배주주 등) 및 지주회사가 현물출자·자기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단, 1/2이상 처분시 한정할 예정)</p> <p>* 다만, '10.12.31 현재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이연을 계속함</p> <p>· 자회사가 사업을 폐지</p> <p>* 단, 「법인세법 시행령」 §80의2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파산, 사망, 적격 기업구조개편 등)는 과세이연을 계속함</p> |
|--------------------------------------------------------------------------------------------------------------------------------------------------------------------------------------------------------------------------------------------------------------------------------------------------------------------------|-----------------------------------------------------------------------------------------------------------------------------------------------------------------------------------------------------------------------------------------------------------------------------------------------------------------------------------------------------------------------------------------------------------------------------------------------------------------------------------------------------------|

(2) 개정이유

- 합병, 분할 등 여타 기업구조개편 지원세제와 동일하게 정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현물출자하거나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

## 11. 기업구조조정 지원특례 일몰 연장 (조특법 §34,39,40,45,46)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input type="checkbox"/>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시급하고 일시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특례제도를 2년간 한시로 도입</p> <p>① 기업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세제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무상환 목적으로 기업자산 매각 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조특법 제34조)</li> <li>○ 기업채무 상환을 위해 주주가 기업에 자산 증여시 세제지원(조특법 제40조)</li> <li>○ 부실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감자시 세제지원(조특법 제45조)</li> </ul> <p>② 사업양수도 및 주식교환에 대한 세제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실기업 양도·청산을 전제로 주주가 채무 인수시 법인세 감면 (조특법 제39조)</li> <li>○ 주식교환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조특법 제46조)</li> </ul> | <p><input type="checkbox"/> 일몰기한 2년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12.31 → '12.12.31</li> </ul> |

### (2) 개정이유

- 민간부문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자산양도·감자분·합병분·채무인수·변제, 주식양도·양수하는 분부터 적용

## 12.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시 과세특례 일몰연장 (조특법 §47의4)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내국법인 합병시 합병법인이 중복<br>자산을 양도하고, 새로운 사업용<br>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br><br>○ 당해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하여<br>3년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허용<br>* 금년말 일몰 종료 | <input type="checkbox"/> 일몰기한 2년 연장<br><br><br>○ '10.12.31 → '12.12.31 |

### (2) 개정이유

-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 13.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조특법 §104의7②)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input type="checkbox"/> '03.7.1이후 설립된 정비사업조합* (법인)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으로 의제</p> <p>* 근거 : 도시및환경정비법 §18</p> <p>○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 대신 토지·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p> | <p><input type="checkbox"/> 일몰기한 3년 연장</p> <p>○ '10.12.31 → '13.12.31</p> |

#### (2) 개정이유

- 정비사업조합이 의무적으로 법인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조합원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여 공익사업인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14.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대체취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일몰연장 (조특법 §104의16①)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학교법인이 기존재산을 양도하고<br>고수익용 재산을 대체취득시<br><br><input type="checkbox"/>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br>(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br><br>* 2007년말 신설, 금년말 일몰도래 | <input type="checkbox"/> 일몰기한 3년 연장<br><br><input type="checkbox"/> '10.12.31 → '13.12.31 |

##### (2) 개정이유

- 대학의 재정확충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5. 학교법인이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에서 학교법인에  
출연시 손금인정 특례제도 일몰연장 (조특법 §104의16④)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학교법인이 전액 출연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동 법인이 이익금을 출연하는 경우<br><br>○ 손금산입 허용<br><br>* 2007년말 신설, 금년말 일몰도래 | <input type="checkbox"/> 학교법인 출자비율 완화<br>○ 100% ⇒ 50%이상<br><br><input type="checkbox"/> 일몰기한 3년 연장<br>○ '10.12.31 → '13.12.31 |

(2) 개정이유

- 대학의 재정확충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16.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일몰연장  
(조특법 §8의2)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대기업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출자하여<br><input type="checkbox"/> 상생협력 중소기업에게서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전액 법인세 면제 | <input type="checkbox"/> 일몰기한 3년 연장<br><input type="checkbox"/> '10.12.31 → '13.12.31 |

(2) 개정이유

-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동 특례의 일몰을 연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출자하여 받는 수입배당금부터 적용

## 17.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조특법 §33)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FTA 무역조정지원법」에 따른 무역<br>조정지원기업이 사업전환시 과세특례<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환전 사업의 직접 사용자산을<br/>양도하고, 전환후 사업을 위한 신<br/>자산으로 대체취득시</li> <li>- 구자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3년거치<br/>3년 분할 익금산입</li> <li>* 금년말 일몰종료</li> </ul> | <input type="checkbox"/> 일몰기한 3년 연장<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12.31 → '13.12.31</li> </ul> |

### (2) 개정이유

- 현재까지는 FTA 무역피해가 미미한 상황이나,  
  - '11년 이후 한·미 FTA, 한·EU FTA가 체결되면 국내산업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무역피해기업의 원활한 사업전환 유도를  
위해 일몰연장 필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사업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개정 한 주요내용】

### I. 일자리 창출 지원

1.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2. 지역특구 세제지원시 지원한도 신설
3. 청소업 등을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추가
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 추가
5.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6.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신설
7. 사회적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하 및 세액감면제도 일몰연장
8. 고용유지중소기업 · 근로자 세제지원 일몰 연장

### II. 중소기업지원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목적 기금에 대한 출연시 세액공제 신설
2.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당기분 일반R&D 세액공제율 단계적 인하
3.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최저한세율 단계적 인상
4.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

### III. 지속성장 지원

1.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정비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합리화
3.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
4.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5.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적용요건 변경

6.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
7. 투자세액공제 대상 리스 의 요건 규정
8.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9.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 지방미분양주택의 범위 규정
10. 중소기업 범위 산정시 파트타임 근로자 인원수 계산방법 변경

#### IV. 지역발전지원 및 기타 지원제도

1. 금융중심지內 창업·사업장신설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2. 지방이전 세제지원제도 보완

####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 법 률 : 2010.12.27.(제10406호)
- 대통령령 : 2010.12.30.(제22583호)  
2011.6.3.(제22953호)
- 기획재정부령 : 2010.12.31.(제182호)  
2011.4.7.(제204호)

## I. 일자리 창출 지원

### 1.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 ①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1년 연장 및 공제율 조정(법 부칙§14)

| 종 전                                                                                                                                                                                                                             | 개 정                                                                                                                                                                                                                                                                                                                                                                                                                                      |     |     |     |      |          |    |      |       |    |                      |    |
|---------------------------------------------------------------------------------------------------------------------------------------------------------------------------------------------------------------------------------|------------------------------------------------------------------------------------------------------------------------------------------------------------------------------------------------------------------------------------------------------------------------------------------------------------------------------------------------------------------------------------------------------------------------------------------|-----|-----|-----|------|----------|----|------|-------|----|----------------------|----|
| <div><div><input type="checkbox"/> 임시투자세액공제</div><div><div>○ 공제대상</div><div><div>- 업종 : 제조업 등 32개</div><div>-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br/>밖에 투자하는 사업용자산</div></div><div>○ 공제율 : 투자금액의 7%</div><div>○ 일몰기한 : 2010.12.31</div></div></div> | <div><div><input type="checkbox"/>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및<br/>공제율 차등화</div><div><div>○ 공제대상</div><div><div>- 업종 : (좌 동)</div><div>- 대상 : (좌 동)</div></div><div>○ 공제율</div><table><tr><th>구 분</th><th>지 역</th><th>공제율</th></tr><tr><td>중소기업</td><td>과밀억제권역 外</td><td>5%</td></tr><tr><td rowspan="2">일반기업</td><td>수도권 外</td><td>5%</td></tr><tr><td>수도권성장관리·<br/>자연보전권역 內</td><td>4%</td></tr></table><div>○ 일몰기한 : 2011.12.31</div></div></div> | 구 분 | 지 역 | 공제율 | 중소기업 | 과밀억제권역 外 | 5% | 일반기업 | 수도권 外 | 5% | 수도권성장관리·<br>자연보전권역 內 | 4% |
| 구 분                                                                                                                                                                                                                             | 지 역                                                                                                                                                                                                                                                                                                                                                                                                                                      | 공제율 |     |     |      |          |    |      |       |    |                      |    |
| 중소기업                                                                                                                                                                                                                            | 과밀억제권역 外                                                                                                                                                                                                                                                                                                                                                                                                                                 | 5%  |     |     |      |          |    |      |       |    |                      |    |
| 일반기업                                                                                                                                                                                                                            | 수도권 外                                                                                                                                                                                                                                                                                                                                                                                                                                    | 5%  |     |     |      |          |    |      |       |    |                      |    |
|                                                                                                                                                                                                                                 | 수도권성장관리·<br>자연보전권역 內                                                                                                                                                                                                                                                                                                                                                                                                                     | 4%  |     |     |      |          |    |      |       |    |                      |    |

#### (2) 개정이유

- 투자유인효과에 비해 과도한 세제지원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업규모별·지역별로 공제율 차등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②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신설(법§26, 영§23)

| 종 전     | 개 정                                                                                                                                                                                                                                                                                                                                                                                                                                                                                                                                                                                                                                                                        |
|---------|----------------------------------------------------------------------------------------------------------------------------------------------------------------------------------------------------------------------------------------------------------------------------------------------------------------------------------------------------------------------------------------------------------------------------------------------------------------------------------------------------------------------------------------------------------------------------------------------------------------------------------------------------------------------------|
| < 신 설 > | <p><input type="checkbox"/>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대상 : 기존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 등(32개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하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투자금액</li> </ul> </li> <li>○ 공제율 : 투자금액의 1%</li> <li>○ 공제한도 : 직전 과세연도 대비 고용증가 인원 × 1천만원(단, 만15~29세 근로자는 1,5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한도 초과금액은 5년간 이월공제 가능</li> <li>* 이월공제 한도 :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고용증가인원 × 1천만원(단, 만15~29세 근로자는 1,500만원)</li> </ul> </li> <li>○ 사후관리 : 세액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내에 상시근로자수 감소시 「감소인원×1천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로 납부</li> <li>○ 일몰기한 : 2011.12.31</li> <li>※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간 중복적용 허용(조특법 부칙 §14②)</li> </ul> |

(2) 개정이유

- 기업의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2. 지역특구 세제지원시 지원한도 신설(법§12의2 · 121의8~9 · 121의17 · 121의20 · 121의21, 영§11의3, 규칙§8의3)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지역특구* 세제지원제도</p> <p>* 기업도시, 신발전지역, 대덕특구,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제주특별자치도(첨단과학기술단지, 투자진흥지구, 자유무역지역)</p> <p>○ 적용대상 : 지역특구內 입주하거나 창업·사업장신설기업</p> <p>○ 감면내용 :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p> | <p>□ 지원한도 신설</p> <p>○ 한도 금액</p> <p>- 지역특구內 기업에 대한 총세제지원 한도 설정(①+②)</p> <p>① 투자누계액의 50%</p> <p>② Min(㉠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1천만원, ㉡ 투자누계액의 20%)</p> <p>○ 투자누계액 산정시 대상 사업용 자산의 범위</p> <p>- 해당 사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유형자산<br/>(토지, 건축물, 차량, 운반구 등 포함)</p> <p>- 건설중인자산</p> <p>- 무형고정자산(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등)</p> |

### (2) 개정이유

- 지역특구 세제지원시 지원한도를 신설하여 투자금액 및 고용에 비하여 과다하게 조세감면을 받는 사례를 방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입주하거나 창업·사업장신설 기업 등부터 적용

### 3. 청소업 등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추가(법§6·7)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br>○ (대상업종) 제조업, 출판업, R&D업 등 22개 업종<br>○ (감면율) 4년간 50% 감면<br><br><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br>○ (대상업종) 제조업, 도소매업, 출판업, R&D업 등 34개 업종<br>○ (감면율) 매년 5~30% 감면 | <input type="checkbox"/>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br>○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br>○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br>○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br>○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br>○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된 사업인 경우에 한함) |

#### (2) 개정이유

- 고용창출효과가 큰 일부 업종을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에 추가하여 일자리창출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창업중소기업 감면 : 2011.1.1. 이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지정 또는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 추가(법§7)

##### (1) 개정내용

| 종 전                                                                                                                |              | 개 정                                                                                                                      |     |
|--------------------------------------------------------------------------------------------------------------------|--------------|--------------------------------------------------------------------------------------------------------------------------|-----|
|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br>○ (대상업종)<br>- 제조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등 34개 업종<br>○ (감면율) 매년 5~30% 감면 |              | <input type="checkbox"/> (좌 동)<br>○ (업종 추가)<br>-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br>*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방문간호·복지용구서비스기관 |     |
| 구 분                                                                                                                | 업 종          | 기업구분(%)                                                                                                                  |     |
|                                                                                                                    |              | 소기업                                                                                                                      | 중기업 |
| 수도권                                                                                                                | ▪ 도·소매업, 의료업 | 10                                                                                                                       | -   |
|                                                                                                                    | ▪ 제조업 등 기타업종 | 20                                                                                                                       | -   |
|                                                                                                                    | - 지식기반산업     | 20                                                                                                                       | 10  |
| 지 방                                                                                                                | ▪ 도·소매업, 의료업 | 10                                                                                                                       | 5   |
|                                                                                                                    | ▪ 제조업 등 기타업종 | 30                                                                                                                       | 15  |

##### (2) 개정이유

- 고령화사회로의 진행에 따라 노인복지서비스 확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과의 형평성 제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5.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법§104의24, 영§104의21)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신설> | <input type="checkbox"/> 국내 복귀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 : 5년간 100%, 2년간 50% 세액감면</li> <li>○ 지원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을 이전하여 수도권 밖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li> <li>② 국외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수도권 밖에 신설 등</li> </ul> </li> <li>○ 일몰기한 : '12.12.31</li> </ul> <input type="checkbox"/>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지원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밖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 부터 2년이내 국외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할 것</li> <li>○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것</li> </ul> |

### (2) 개정이유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해외창출 고용이 국내고용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하되 동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이전시 국외사업장을 양도·폐쇄하는 것을 지원요건 및 추정사유로 규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국내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

## 6.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신설(법§85의6②)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4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br><br>*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 |

### (2) 개정이유

- 고용여건이 취약한 장애인 일자리창출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2011.1.1. 전에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11.1.1. 동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4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적용

## 7. 사회적 기업 세액감면 일몰연장 및 최저한세율 우대적용 (법§85의6, §132)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사회적기업 세액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율 : 4년간 법인세·소득세액의 50%</li> <li>○ 일몰기한 : 2010.12.31</li> </ul> <input type="checkbox"/> 최저한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 7%</li> <li>○ 일반기업</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th>최저한세율</th></tr> </thead> <tbody> <tr> <td>100억원 이하</td><td>10%</td></tr> <tr> <td>100~1,000억원</td><td>11%</td></tr> <tr> <td>1,000억원 초과</td><td>14%</td></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lt; 신 설 &gt;</p> |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 100억원 이하 | 10% | 100~1,000억원 | 11% | 1,000억원 초과 | 14% | <input type="checkbox"/> 사회적기업 세액감면 일몰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율 : (좌 동)</li> <li>○ 일몰기한 : 2013.12.31</li> </ul>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 (좌 동)</li> <li>○ 일반기업 : (좌 동)</li> <li>○ 사회적 기업 : 7%</li> </ul> <p>※ 일반기업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수준의 최저한세율 적용</p> |
|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       |          |     |             |     |            |     |                                                                                                                                                                                                                                                                                                                                                      |
| 100억원 이하                                                                                                                                                                                                                                                                                                                                                                                                                                                                                                                                    | 10%   |       |          |     |             |     |            |     |                                                                                                                                                                                                                                                                                                                                                      |
| 100~1,000억원                                                                                                                                                                                                                                                                                                                                                                                                                                                                                                                                 | 11%   |       |          |     |             |     |            |     |                                                                                                                                                                                                                                                                                                                                                      |
| 1,000억원 초과                                                                                                                                                                                                                                                                                                                                                                                                                                                                                                                                  | 14%   |       |          |     |             |     |            |     |                                                                                                                                                                                                                                                                                                                                                      |

### (2) 개정이유

- 저소득층·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일몰연장 : 2011.1.1 이후 최초로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부터 적용
- 최저한세율 우대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8.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세제지원 일몰 연장(법§30의3)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세제지원<br><br>○ 지원내용<br>- 중소기업 : (전년대비 1인당 평균 임금감소분 × 상시근로자수)의 50% 소득공제<br>- 근로자 : 전년대비 임금총액 감소분의 50% 소득공제 (한도 1천만원)<br><br>○ 일몰기한 : 2010.12.31 | <input type="checkbox"/>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세제지원 일몰연장<br><br>○ 지원내용<br>- 중소기업 : (좌 동)<br>- 근로자 : (좌 동)<br><br>○ 일몰 연장 : 2011.12.31 |

### (2) 개정이유

-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근로자를 지원하여 일자리 나누기 문화 확산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II. 중소기업 지원

###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목적 기금에 대한 출연시 세액공제 신설 (법§8의3, 영 §7의2)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p><input type="checkbox"/>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에 출연시 출연금의 7% 세액공제</p> <p>&lt;적용대상 기금&gt;</p> <p>① (상생보증펀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수탁기업 등(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조성된 기금</p> <p>* 협력중소기업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업과 직접 납품관계를 가지는 수탁기업</li> <li>- 수탁기업과 직·간접 납품관계를 가지는 중소기업</li> <li>- 기타 대기업이 협력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중소기업</li> </ul> <p>② (동반성장기금)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R&amp;D, 생산성 향상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을 위하여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조성된 기금</p> <p>* 구체적인 지출용도(시행령 별표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지원, 인력개발지원, 생산성향상지원, 해외 시장진출지원.</li> </ul> <p><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할 경우 세액공제 금액을 추징(추징대상 : 신·기보, 협력재단)</li> </ul> |

#### (2) 개정이유

-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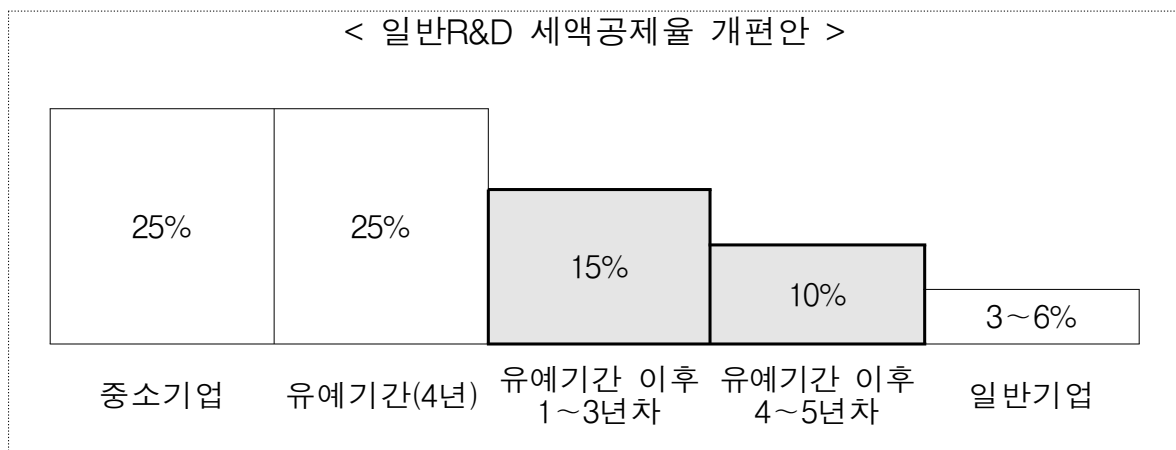
## 2.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R&D 세액공제율 단계적 인하 (법§10①3호, 영§9③)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일반 R&D 세액공제율<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 25%<br/> *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4년 포함</li> <li>○ 일반기업 : 3~6%</li> </ul> ※ 증가분 방식(중소기업 50%, 일반기업 40%)과 선택 가능 |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일반 R&D세액공제율 단계적 축소<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 (좌 동)</li> <li>○ 일반기업 : (좌 동)<br/> - 중소기업 졸업유예 이후 3년간 15%, 그 이후 2년간 10%</li> </ul> |

### (2) 개정이유

- 중소기업 졸업시의 R&D 세액공제율 축소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여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졸업유예기간 포함)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부터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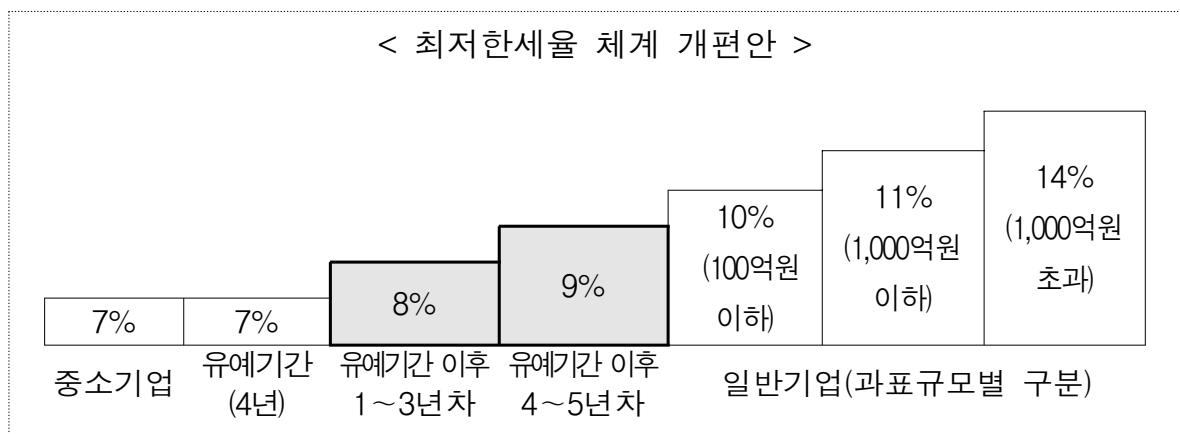
### 3.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최저한세율 단계적 인상 (법§132, 영§126②)

#### (1) 개정내용

| 종 전              |                |      | 개 정                           |                |      |
|------------------|----------------|------|-------------------------------|----------------|------|
| □ 최저한세율          |                |      | □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br>최저한세율 단계적 인상 |                |      |
| 구 분              |                | 세율   | 구 분                           |                | 세율   |
| 중소기업(유예기간 4년 포함) |                | 7 %  | 중소기업(유예기간 4년 포함)              |                | (좌동) |
| 일반<br>기업         | < 신 설 >        |      | 일반<br>기업                      |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 8%   |
|                  | < 신 설 >        |      |                               |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 9%   |
|                  | 과표 100억원 이하    | 10 % |                               | 과표 100억원 이하    | (좌동) |
|                  | 과표 100~1,000억원 | 11 % |                               | 과표 100~1,000억원 | (좌동) |
|                  | 과표 1천억원 초과     | 14 % |                               | 과표 1천억원 초과     | (좌동) |

#### (2) 개정이유

- 중소기업 졸업시의 최저한세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여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4.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법§7의2)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input type="checkbox"/>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 공제제도</p> <p>○ 적용내용: 내국인*이 중소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 중 지급기한이 60일 이내인 환어음 등으로 결제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법인세에서 공제</p> <p>* 대기업의 경우 네트워크론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대금을 지급</p> <p>** 지급기한 30일 이내 : 0.5%(대기업0.4%)<br/>지급기한 30일~60일 : 0.15%</p> <p>○ 한도: 소득세·법인세의 10%</p> <p>○ 일몰기한: '10.12.31</p> | <p><input type="checkbox"/> 일몰연장</p> <p>○ 일몰연장: '13.12.31</p> |

##### (2) 개정이유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
  - 납품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매대금을 현금성 결제로 하는 경우 세제지원함으로써 어음발행을 축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유도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Ⅲ. 지속성장 지원

#### 1.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정비(법§24)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br><br>○ 공제율 : 3%(중소기업 7%)<br><br>○ 적용대상<br>- 공정개선·자동화 시설, 첨단 기술설비, 공급망관리시스템 설비, 물류관리설비 등<br>-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br>- 전자상거래설비 | <input type="checkbox"/>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정비<br><br>○ 공제율 : (좌 동)<br><br>○ 적용대상<br>- (좌 동)<br><br><div style="text-align: right;">&lt; 삭 제 &gt;</div> <div style="text-align: right;">&lt; 삭 제 &gt;</div> |

##### (2) 개정이유

- ERP 설비 등은 금융·유통·제조업 등의 범용시설로서 세제 지원목적이 달성된 점 고려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합리화(법§25의2)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br><br>○ 공제율 : 투자금액의 20%<br><br>○ 공제한도 : 산출세액의 30%<br><br>* 단, 중소기업은 공제한도 없음 | <input type="checkbox"/>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합리화<br><br>○ 공제율 : 투자금액의 10%<br><br>< 삭 제 > |

### (2) 개정이유

- 여타 투자세액공제와의 형평성 고려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3.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법§25의3)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br><br>○ 공 제 율 : 투자금액의 10%<br><br>○ 적용대상 : 대기·수질오염방지 시설, 오수·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 시설, 소음방지지설 등<br><br>○ 일몰기한: '10.12.31 | <input type="checkbox"/>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br><br>○ 공 제 율 : (좌 동)<br><br>○ 적용대상 : (좌 동)<br><br>○ 일몰연장: '13.12.31 |

#### (2) 개정이유

- 저탄소·녹색성장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4.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법§25의4)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br>○ 공 제 율 : 투자금액의 7%<br>○ 적용대상 : 의약품·생물학적 제제 등 제조,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br>○ 일몰기한 : '10.12.31 | <input type="checkbox"/>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br>○ 공 제 율 : (좌 동)<br>○ 적용대상 : (좌 동)<br>○ 일몰연장 : '13.12.31 |

##### (2) 개정이유

- 의약품 품질 향상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5.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 및 일몰연장 (법§104의15, 영§104의15)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p> <p>○ 공제대상 : 광업권·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투자</p> <p>○ 투자방법</p> <p>① 해외 직접투자</p> <p>②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p> <p>* 요건 : 광업권·조광권 소유, 해당 광구의 개발·운영을 목적으로 설립</p> <p>&lt; 신 설 &gt;</p> <p>③ 외국자회사(100% 출자)에 대한 투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p> <p>㉠ 외국자회사의 증자에 참여</p> <p>㉡ 상환기간 1년 이상의 금전대여 (내국인과 공동으로 금전대여 하는 경우 포함)</p> <p>○ 일몰기한 : 2010.12.31</p> | <p>□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br/>적용대상 조정 및 일몰연장</p> <p>○ 공제대상 : (좌 동)</p> <p>○ 투자방법</p> <p>① (좌 동)</p> <p>②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요건 추가</p> <p>-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이 10% 이상이거나, 외국법인에 임원을 파견할 것</p> <p>③ 외국자회사(100% 출자)에 대한 투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p> <p>㉠ (좌 동)</p> <p>㉡ 상환기간 5년 이상의 금전대여</p> <p>㉢ ㉠·㉡에 따른 내국인과 공동으로 상환기간 5년 이상의 금전대여</p> <p>○ 일몰연장 : 2013.12.31</p> |

### (2) 개정이유

-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투자·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6.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법§104의14)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br><br>○ 공제율 : 전년대비 제3자 물류<br>비용 증가액의 3%<br><br>○ 공제한도 : 법인세·소득세의 10%<br><br>○ 일몰기한 : ‘10.12.31 | <input type="checkbox"/>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br>일몰연장<br><br>○ 공제율 : (좌 동)<br><br>○ 공제한도 : (좌 동)<br><br>○ 일몰연장 : ‘12.12.31 |

### (2) 개정이유

- 물류전문기업 육성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7. 투자세액공제대상 리스의 요건 규정(법§5, §11, §24, §25, §25의2, §25의3, §25의4, §26, §3, 조특규칙§3의2)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신설> | <input type="checkbox"/>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리스의 요건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약정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li> <li>○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이용자가 리스 시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 이하로 구매하거나 리스계약 갱신권리를 보유한 경우</li> <li>○ 리스기간이 기준내용연수의 75% 이상인 경우</li> <li>○ 리스료의 현재가치평가금액이 리스자산 장부가액의 90% 이상인 경우</li> <li>○ 리스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용도로 한정되어 있는 등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li> </ul> |

(2) 개정이유

-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효익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융리스\*의 경우 투자세액공제 허용

\* 종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금융리스의 범위와 동일  
(기업회계기준과 K-IFRS간의 리스분류기준의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해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금융리스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동 규정을 조특법 시행규칙에서 직접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8.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법§94)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 공제(7%)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주택 종업원 임대국민주택</li> <li>○ 종업원용 기숙사</li> <li>○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 시설</li>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시설</li> </ul> | <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율 및 공제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7%→10%)</li> <li>○ 종업원 휴게실, 체력단련실 추가</li> <li>○ 무주택종업원용 국민주택 또는 종업원용 기숙사 용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미분양주택을 취득시 10% 세액공제</li> </ul> |

### (2) 개정이유

-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고용안정 및 복지 증진
  - 직장보육시설 확대를 유도하여 직장여성의 고용안정 지원
  -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 9.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 지방미분양주택의 범위 규정(영§94)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p><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대상 미분양주택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일자) 2011.1.1일 현재</li> <li>○ (적용대상) ※ 조특영§98의4 제1항 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주택법」§38에 따른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li> <li>ii) 「주택법」상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li> <li>iii)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아 공급하는 주택</li> <li>iv)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법인영§92의2)이 취득하여 공급하는 주택</li> <li>v)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신탁업자가 취득하여 공급하는 주택</li> </ul> </li> <li>○ (제외대상) ※ 조특영§98의4 제2항 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의 경우 : 도시 85㎡, 읍·면 100㎡</li> </ul> </li> <li>ii)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사실이 있는 주택</li> <li>iii) 사업주체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해제 후 매매계약자 또는 배우자(직계 준비속 및 형제자매 포함)가 재계약한 주택</li> <li>iv) 사업주체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당초 주택을 대체하여 취득하는 다른 주택</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증빙서류 보관·제출의무(※ 영§98의4 제5항 및 제8항 준용)</p>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체 등의 의무) 사업주체 등은 미분양주택 매매계약 체결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주택 확인날인을 받아 1부를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미분양주택 확인대장에 작성·보관</li> <li>○ (세액공제신청자의 의무) 세액공제신청자는 세액공제신청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주택 확인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li> </ul> |
|--|-------------------------------------------------------------------------------------------------------------------------------------------------------------------------------------------------------------------------------------------------------------------------|

## (2) 개정이유

- 법에서 위임한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규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10. 중소기업 범위 산정시 파트타임 근로자 인원수 계산방법 변경 (규칙 §2②)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시 인원기준*을 적용하는 경우</p> <p>* (제조업) 300명, (도·소매업) 200명 등</p> <p>○ 파트타임 근로자*도 1인으로 계산</p> <p>*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p> | <p>○ 파트타임 근로자 1인을 0.5인으로 계산*</p> <p>* 파트타임 근로자중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p> |

### (2) 개정이유

- 파트타임 근로자는 중소기업 범위 산정시 통상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1인”으로 계산하여 파트타임 고용 저해요인으로 작용
- 유연근무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파트타임 근로자를 중소기업 범위 산정시 “0.5인”으로 계산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4.7.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IV. 지역발전 지원 및 기타 지원제도

### 1. 금융중심지內 창업·사업장신설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법 §121의21, 영§116의26, 규칙§51의8)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p><input type="checkbox"/> 금융중심지*(수도권과밀권역 제외)內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p> <p>* 금융위가 ‘금융중심지’로 고시한 2개 지역(서울 여의도, 부산 문현동) 중 수도권과밀권역外 지역인 ‘부산 문현동’이 해당됨</p> <p>○ 당해 구역안의 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p> <p>* 취득세·재산세는 지자체가 15년 범위에서 조례로 감면 가능</p> <p>- 지원요건 : 투자금액 20억원 +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p> <p>- 일몰기한 : ‘12.12.31</p> <p><input type="checkbox"/> 감면한도 ( ① + ② )</p> <p>① 투자누계액의 50%</p> <p>② Min(㉠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 투자누계액의 20%)</p> <p><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p> <p>○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 감면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p> <p>○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감면세액 납부</p> |

(2) 개정이유

- 금융산업 육성을 지원하되, 투자금액·고용 기준을 설정하여 동 제도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5.14. 이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

## 2. 지방이전 세제지원제도 보완 (법 §63의2, 영 §60의2)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법인 본사의 지방이전시 세액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br/>(낙후지역 7년 100%, 3년 50%)</li> <li>○ 감면세액 : ① × Min(②, ③)</li> </ul> <p>① 감면대상소득</p> <p>= 과세표준 - 토지·건물의 양도차익</p> <p>②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후 급여 / 법인 전체인원의 급여</p> <p>③ 이전본사의 근무인원 / 법인 전체의 근무인원</p> | <p>□ 감면대상소득 계산시 제외되는 소득 추가</p> <p>① 감면대상소득</p> <p>= 과세표준 -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및 고정자산처분익·유가증권처분익·수입이자·수입배당금·자산수증익*</p> <p>*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지급이자 있는 경우 차감한 금액</p> <p>② (좌 동)</p> <p>③ (좌 동)</p> |

### (2) 개정이유

- 법인의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처분익·유가증권처분익·자산수증익 등 영업외 소득은 감면대상소득 계산시 제외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기업부터 적용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 [농어촌특별세법 · 시행령]

### 【개정된 주요내용】

1.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조문정리
2. 기타 조문정리
3. 조특법 · 관세법 등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등
4.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법인설립등기의 등록면허세 면제분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신설

### 【법 · 시행령 개정일자】

- 법        료 : 2010.12.30.(제10422호)
- 대통령령 : 2010.12.30.(제22576호)

## 1.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조문정리(법§2~§8)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① 농특세 과세표준 및 세율(법§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세감면세액 :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li> </ul> </li> <li>○ 취득세액 : 10%</li> <li>○ 개별소비세액 10%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골프장 입장은 30%</li> </ul> </li> </ul> <p>② 취득세 및 등록세 근거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근거 : 지방세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li> </ul> </li> <li>○ 취득세* 과세표준의 2%에 해당하는 금액(기존 취득세) :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전 취득세 + 등록세(취득무관·정액분 제외)</li> </ul> </li> <li>○ (좌 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li> </ul> |

### (2) 개정이유

- (농특세 과세표준) ‘11.1.1일부터 지방세법상 세목이 통합(16개 → 11개)됨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세로 변경
- (취득세·등록세 근거규정) ‘11.1.1일부터 현행 지방세법이 3개 법률\*로 분리·시행됨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감면‘에 대한 근거법률을 지방세법 →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
  - \* ① 지방세기본법, ② 지방세법,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부터 시행

## 2. 기타 조문정리(법§4·§5)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① 농특세 과세표준 및 세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금액 : 2%</li> <li>○ 증권거래소 거래 주권양도가액 : 0.15%</li> <li>○ 개별소비세액 10% 등<br/>* 골프장 입장은 30%</li> </ul> <p>② 농특세 비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특법 제36조, 제37조, 제40조에 따른 법인세·양도소득세 감면</li> <li>○ 조특법 제88조의6</li> <li>○ 국가·지자체에 대한 감면, 농어민에 대한 감면 등</li> </ul> | <p>&lt;삭 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가증권시장 거래 주권양도가액 : 0.15%</li> <li>○ (좌 동)</li> </ul> <p>&lt;삭 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특법 제36조 및 제37조 따른 감면 삭제</li> <li>○ (좌 동)</li> </ul> |

### (2) 개정이유

- 농특세 과세표준
  - (법인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금액) 동 과세표준은 '96년말까지 유효한 한시규정으로 현재는 효력 없음
  - (증권거래소 거래 주권 양도가액) 증권거래소가 한국거래소로 변경되었고 한국거래소에서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주식이 함께 거래되므로 농특세 과세대상을 유가증권시장 주식으로 명확화

- 농특세 비과세

- (조특법 제36조, 제37조, 제88조의6) 일몰종료되어 既삭제되었으므로 농특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부터 시행

### 3. 조특법·관세법 등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등(영§4)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① 조특법·관세법 등에 규정된 감면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p> <p>○ 대상 : 국가·지자체, 농어민에 대한 감면 등</p> <p>② 적격합병시 양수재산의 등록세 면제분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p> <p>○ 대상 : 법인세법 §44①각호에 따른 합병(적격합병)시 양수재산의 등록면허세 면제분</p> <p>③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p> <p>○ 대상 : 지자체 조례에 따른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 중 행안부장관이 재정부장관과 협의 하여 고시한 것</p> | <p>○ 조특법·관세법 등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조정</p> <p>○ 인용조문 변경<br/>: 법인세법 §44①각호<br/>→ §44②각호* 또는 ③**</p> <p>* 법인세법 §44②<br/>(1) 1년이상 사업영위 법인간 합병<br/>(2) 주식비율 80%이상 및 일정주주는 합병 신주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보유<br/>(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p> <p>** 법인세법 §44③ : 100%의 지분을 소유 하고 있는 자법인을 합병</p> <p>○ 농특세 비과세 대상중 일부항목의 근거법령이 ‘조례 →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정리</p> <p>④ 그밖에 농특세법 조문정리에 따른 인용문구 조정 등</p> |

## (2) 개정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 법률의 개정에 따라 농특세법 시행령이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이에 맞추어 조정
  - (조특법) ‘11.1.1일부터 현행 지방세법이 3개 법률로 분리\*되고 세목이 통합\*\*(16개→11개)됨에 따라 조특법상 지방세 감면 관련 조문 개정
    - \* 지방세법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리
    - \*\* 취득세, 등록세 →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변경 등
  - (관세법)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적용함에 따라 조문정리
- 법인세법에서 적격합병의 요건을 완화하고 조문을 변경함에 따라 농특세법 시행령의 인용조문을 이에 맞추어 조정
-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 중 농특세를 비과세하는 일부 항목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이에 맞추어 조정
- 농특세법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적용 등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리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부터 시행

#### 4.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법인설립등기의 등록면허세 면제분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신설(영§4⑥5호)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농어촌특별세 비과세<br>○ 대상 : 국가·지자체, 농어민에 대한 감면 등 | ○ 대상 추가<br>- 휴면예금관리재단(미소금융중앙재단) 및 복지사업자*의 법인설립등기(출자·재산총액 증가를 위한 등기 포함)에 대한 등록면허세(출자액의 0.2%) 면제분<br>* (복지사업자)「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법상 저소득층 복지사업만을 목적으로 '08.8.1일 이후에 금융위허가를 얻어 설립된 법인 |

##### (2) 개정이유

- 휴면예금관리재단, 지역법인 및 기업·금융권 재단의 설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창업·취업,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분부터 적용



**국제조세분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령, 소득세법령,**  
**법인세법령, 조세특례제한법령)**



## [ 국제조세분야 ]

### 【개정안 주요내용】

#### I. 비거주자·외국법인·외투기업 관련 제도 개선

1. 외국 Hybrid사업체를 통한 국외 투자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추가
2.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방법 명확화
3. 외국손회사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4.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제외대상 추가
5. 비거주자·외국법인 자산 경매·공매시 원천징수 관련 특례 신설
6.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취득한 유가증권 취득가액 계산방법 명확화
7. 지점세 과세의 상호주의 예외 신설
8. 지점세 과세대상금액 계산시 음수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 조정
9. 외투기업 세제지원시 지원한도 및 고용인센티브 신설
10. 증자시 외투비율 적용 명확화

#### II. 이전가격세제 제도 개선

1. 국제거래 범위 명확화
2. 정상가격 과세조정시 감액경정 규정 명확화
3.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순서 폐지
4.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시 소급적용 기간 명확화
5.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과태료 현실화
6.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기준 법령화
7. 정보교환 협정 관련 규정 개선
8. 거래이익법 보완규정 개선
9.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기준 추가
10. 특수관계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과의 적합성요소 구체화

11. 비교가능성 분석을 위한 일반사항 규정
12. 비교가능성 분석 절차 신설
13.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구체화
14.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에 대한 규정 보완
15. 거래 통합분석 및 다년도 자료분석 사용 신설
16. 거래의 통합분석 적용례 구체화
17. 다년도 자료분석 적용례 구체화
18. 임시유보 처분통지후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미반환시 처분업무 절차 개선

### Ⅲ.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설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2.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3. 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
4.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 Ⅳ. 기 타

1.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규정 명확화
2. 유보소득 합산과세 익금불산입 기간 폐지
3.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 비적용 요건으로서 ‘같은지역 등’ 대상 확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일자】**

- 법 률 : 2010. 12. 27.(제10410호)
- 대통령령 : 2010. 12. 30.(제22574호)
- 기획재정부령 : 2018. 3. 18.(제189호)

**【소득세법 · 시행령 개정일자】**

- 법 률 : 2010. 12. 27.(제10408호)
- 대통령령 : 2010. 12. 30.(제22580호)

**【법인세법 · 시행령 개정일자】**

- 법 률 : 2010. 12. 30.(제10423호)
- 대통령령 : 2010. 12. 30.(제22577호)
- 대통령령 : 2010. 3. 31.(제22812호)

**【조세특례제한법 · 시행령 개정일자】**

- 법 률 : 2010. 12. 27.(제10406호)
- 대통령령 : 2010. 12. 30.(제22583호)

## I. 비거주자·외국법인·외투기업 관련 제도 개선

### 1. 외국 Hybrid사업체를 통한 국외 투자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추가 (소득법§57④, 법인법§57⑥ 등)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p>□ 거주자·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외국 Hybrid사업체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된 경우 그 사업체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거주자 등이 부담한 외국납부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추가</p> <p>○ 외국 Hybrid사업체의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법상 외국법인</li> <li>- 외국세법상 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자자인 거주자 등이 직접 납세의무 부담</li> </ul> </li> </ul> <p>○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 계산방법</p> <p>거주자 등이 부담한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p> $\left[ \frac{\text{수입배당금액}}{\text{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times \text{거주자 등의 해당 사업연도 손익배분비율} - \text{거주자 등이 부담한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right]$ |

#### (2) 개정이유

- 외국 Hybrid사업체를 통한 국외 투자시 이중과세 조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방법 명확화(법인령§94⑧)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될<br/>외국납부세액 계산방법</p> <p>○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br/>소득금액에</p> <p>①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br/>이익의 배당이 미포함</p> <p>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br/>×<br/>수입배당금액</p> <hr/> <p>외국자회사의                  외국자회사의<br/>당해사업연도      -      당해사업연도<br/>소득금액                  법인세액</p> <p>②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br/>이익의 배당이 포함</p> <p>[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br/>+<br/>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br/>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 50% ]</p> <p>×<br/>수입배당금액</p> <hr/> <p>외국자회사의                  외국자회사의<br/>당해사업연도      -      당해사업연도<br/>소득금액                  법인세액</p> <p>(후단 신설)</p> | <p>(좌 동)</p> <p>○ 외국자회사에서 외국손회사로<br/>부터 받은 배당이</p> <p>- 익금불산입 또는 면제되는 경우<br/>⇒ 그 금액을 자회사의 소득금액에<br/>가산</p> <p>- 외국손회사의 납부세액이 자<br/>회사의 소득금액에 Gross-up 된<br/>경우<br/>⇒ 그 금액을 자회사의 법인세액에<br/>가산</p> |

## (2) 개정이유

- 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 자회사에서 익금불산입 또는 면제되는 경우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이 '0'이 되어 간접외국 납부세액공제 계산이 왜곡됨을 감안하여
  - 그 금액을 자회사의 소득금액에 가산
- Gross-up 방식으로 외국자회사 단계에서 이중과세 조정되는 경우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에 외국손회사에서 납부한 세액이 포함된 경우 그 금액을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에 가산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3.3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분부터 적용

### 3. 외국손회사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법인령§94⑪)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외국손회사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범위</p> <p>*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는 외국납부세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100%)</li> <li>•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50%)</li> </ul> <p>○ 외국자회사·손회사 간에 다음 이중과세 조정제도가 적용되는 경우로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자회사·손회사가 동일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br/>: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li> <li>- 외국자회사·손회사가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br/>: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자회사·손회사가 동일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br/>: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자회사 납부세액 공제</li> <li>- 외국자회사·손회사가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br/>: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및 국외소득 면제</li> </ul> |

#### (2) 개정이유

- 이중과세 조정방식의 차이에 따른 과세불형평 해소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4.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제외대상 추가 (소득법§128)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 가능*</p> <p>* 원칙적으로 월별로 납부</p> <p>○ 반기별 납부 제외대상</p> <p>- 법인세법§67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p> | <p>○ 반기별 납부 제외대상 추가</p> <p>- 국조법§9(이전가격세제)·§14(과소자본세제)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p> <p>- 비거주 연예인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p> |

##### (2) 개정이유

- 이전가격과세제도 적용 등으로 인한 소득은 일률적 또는 일회적으로 발생하고 연중 상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점 감안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5. 비거주자·외국법인 자산 경매·공매시 원천징수 관련 특례 신설 (소득법§156, 법인법§98)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p><input type="checkbox"/>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자산을 경매·공매를 통해 양도시 원천징수 관련 특례</p> <p>○ 원천징수의무자: 경매·공매대금을 배당·배분하는 자<br/> * 경매: 법원<br/> 공매: 세무서장(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가능)</p> <p>○ 원천징수 한도: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p> |

### (2) 개정이유

-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내자산을 경매·공매를 통해 양도시 원천징수특례를 신설하여 과세일실 방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취득한 유가증권 취득가액 계산방법 명확화 (법인령§129③, 소득령§183①)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p><input type="checkbox"/> 합병 등 자본거래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그로 인한 이익분여에 대해 과세된 경우</p> <p>○ 해당 자본거래로 취득한 유가증권 취득가액은 그 취득에 실지 소요된 금액에 해당 분여이익 상당액을 가산하여 계산함을 명확화</p> |

(2) 개정이유

- 합병 등 자본거래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이익분여에 대해 과세되는 경우 이중과세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7. 지점세 과세의 상호주의 예외 신설(법인법§96①단서)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해 조세조약에서 정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지점세*를 추가하여 납부</p> <p>* 과세대상 소득금액: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법인세 + 지방소득세 소득분 + 재투자인정금액 등)</p> <p>** 세율: min (20%, 조세조약상 세율)</p> <p style="text-align: center;">&lt;예외 신설&gt;</p> | <p>○ 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본점·주사무소가 있는 국가)에서 내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해 지점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점세 과세 제외</p> |

### (2) 개정이유

- 조약에서 지점세를 허용하더라도 상대국에서 실제 과세되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도 비과세하여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하려는 지점세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30.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8. 지점세 과세대상금액 계산시 음수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 조정 (법인령 §134)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br/>= 국내사업장 각사업연도 소득금액</p> <p>① 차감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소득분</li> <li>○ 배당으로 간주된 손금불산입액</li> <li>○ 자본금 증가액(재투자인정금액)</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② 가산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금 감소액<br/>[한도 : Min(㉠자본금 감소액,<br/>㉡미과세누적유보소득*)]</li> </ul> <p>* 미과세누적유보소득(=㉠-㉡)</p> <p>㉠ 직전사업연도까지의 각사업연도<br/>소득금액 합계액</p> <p>㉡ 직전사업연도까지의 결손금합계액+<br/>법인세등 합계액+지점세 과세<br/>대상소득금액 합계액</p> | <p>□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br/>방법 보완<br/>= 국내사업장 각사업연도 소득금액</p> <p>① 차감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좌 동</li> <li>○ 좌 동</li> <li>○ 음수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br/>(한도 : 과세대상 소득금액)</li> </ul> <p>② 가산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금 감소액<br/>[한도 : Min(㉠자본금 감소액,<br/>㉡미과세누적유보소득*(음수가<br/>아닌 경우에 한함))]</li> </ul> |

## (2) 개정이유

-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은 자회사가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배당가능이익에 상응하는 금액이어야 하므로
  - 양(+)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가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차감하는 것이 지점세의 과세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3.31.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외투기업 세제지원시 지원한도 및 고용인센티브 신설(조특법 §121의2, 121의4, 조특령 §116의2)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외투기업 세제지원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 단지형 외투지역·경자구역 등의 중규모 외투기업, 개별형 외투지역·경자구역 등의 대규모 외투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외투기업 등</li> <li>○ 감면내용 :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형 등 중규모 외투기업) 3년간 100%, 2년간 50%</li> <li>- (개별형 등 대규모 외투기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 5년간 100%, 2년간 50%</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 <p>□ 지원한도 및 고용인센티브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한도 신설 : 외투기업에 대한 총 세제지원 한도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형 등 중규모 외투기업) 외국인투자누계액의 50%</li> <li>- (개별형 등 대규모 외투기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누계액의 70%</li> </ul> </li> <li>○ 고용인센티브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중대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세제지원 : 외국인투자누계액의 2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인원 1인당 1,000만원씩 추가지원</li> </ul> </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외국인투자누계액의 범위&gt;</p> <p>□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 투자로서 조세감면 결정을 받아 해당 과세연도종료일까지 외투기업에 납입된 자본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다음의 경우를 제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존주식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li> <li>② 내국인의 직·간접 우회투자</li> <li>③ 장기차관에 의한 외국인투자</li> <li>④ 감면기간이 종료한 외국인투자</li> </ol> </li> </ul> |

|                    |                                                                                                                                                                                                                                                                                                                                                                                                      |
|--------------------|------------------------------------------------------------------------------------------------------------------------------------------------------------------------------------------------------------------------------------------------------------------------------------------------------------------------------------------------------------------------------------------------------|
| <p>&lt;신 설&gt;</p> | <p>&lt;상시근로자 범위 등&gt;</p> <p><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 범위)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p> <p>* 상시근로자수<br/>계산방법 <math>= \frac{\text{해당 기간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text{해당 기간의 개월 수}}</math></p> <p><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고용기준에 따른 감면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고용 규모가 감소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p> <p style="text-align: center;">고용기준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합계</p> <p>* 추징세액 =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1,000만원</p> |
|--------------------|------------------------------------------------------------------------------------------------------------------------------------------------------------------------------------------------------------------------------------------------------------------------------------------------------------------------------------------------------------------------------------------------------|

## (2) 개정이유

- 지원한도를 신설하여 투자금액에 비하여 과다하게 조세감면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고용인센티브를 신설하여 외투기업의 고용증대를 유도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10. 증자시 외투비율 적용 명확화(조특령§116의6)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증자의 경우 증자한 사업장이 기존사업장과 구분경리되는 경우</p> <p>○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에 따라 외국인투자 비율 산정시 증자한 사업장의 외투금액비율로 계산 가능*</p> <p>*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 내용</p> | <p>○ 시행령에 시행규칙 서식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p> |

### (2) 개정이유

- 시행규칙 서식에 있는 내용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
- 증자의 경우에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증자분 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 계산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Ⅱ. 이전가격세제 제도 개선

### 1. 국제거래 범위 명확화(국조법§2, §4)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국제거래’의 개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조법 제2조 정의 규정에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간의 거래를 국제거래에 포함</li> <li>○ 국조법 제4조 이전가격 세제에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간의 거래를 국제거래에서 제외(이전가격 세제 미적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간의 거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화</li> </ul> |

#### (2) 개정이유

- 현행 규정상 불분명하게 되어있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간 거래를 국조법 제2조 국제거래 범위에서 제외
  - \* 이 경우 현행 제4조에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간 거래에 이전가격 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별도 규정은 불필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27.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 정상가격 과세조정시 감액경정 규정 명확화(국조법§4)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음 (국조법§4①)</p> <p>※ 감액경정도 가능하나 실무상 감액 경정 사례 거의 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lt; 단서 신설 &gt;</p> <p>※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한 후 특정 연도에 대해서만 증액한 경우 여타 연도에 대해서도 감액경정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재국조-54, 2008.9.24)</p> | <p>○ 다만, 2과세년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모든 거래가격에 대해서 당해 정상가격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p> |

### (2) 개정내용

- 동일한 정상가격에 따라 증액 및 감액하는 명시적 규정 도입으로 불필요한 쟁송을 방지할 필요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법령에 반영하는 사항(확인적 규정)  
\* 재국조-54, 2008.9.24.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27.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3.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순서 폐지(국조법§5)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순서는 전통적 거래방법을 우선 적용하고 전통적 거래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거래이익법 적용(국조법 §5)</p> <p>○ 전통적 거래 방법 : 비교가능제 3자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국조법 §5)</p> <p>○ 거래이익법 :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기타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국조령 §4)</p> <p>○ 거래이익법은 전통적 거래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음(국조령 §6)</p> | <p>□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시 우선 순위 없이, 전통적 거래방법과 거래이익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함</p> <p>○ 보완규정 : 삭제</p> |

#### (2) 개정이유

- 전통적 방법의 우선적용 규정 폐지 및 합리적 적용방안 마련으로 납세자 대응능력 제고 및 분쟁발생 소지 감소
- 국제거래가 복잡화·다양화됨에 따라 거래이익법이 보다 적합한 국제거래에는 거래이익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27.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4.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시 소급적용 기간 명확화(국조법§6)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시 적용 대상기간 이전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p> <p>○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의 경우 :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p> <p>○ 일방적 사전승인의 경우 : 경정 청구 기한(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p> | <p>○ 승인신청 대상기간 직전의 5년 이내</p> <p>○ 승인신청 대상기간 직전의 3년 이내</p> |

##### (2) 개정이유

- 소급적용 기간을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의 경우와 일방적 사전승인의 경우 각각에 대해서 승인신청 대상기간 직전 5년 또는 3년 이내임을 명확화
- \* 기간이 일의적이지 않고(사기 등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 기산점이 부과제척·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사전승인 소급적용은 사업연도 종료일로 차이가 나는 문제 등을 해소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27. 이후 최초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승인하는 분부터 적용

## 5.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과태료 현실화(국조법§12)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위반할 경우<br>○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br>(국조법 §12 ①) | ○ 과태료를 최대 1억원까지 부과 |

### (2) 개정이유

- 자료제출 협조 유도 등 이전가격 세제 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 금액 상향 조정
  - \* 현행 과태료 3천만원은 '95년 국조법 제정시 책정된 것으로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27. 이후 최초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분부터 적용

## 6.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기준 법령화(국조령§51 ①, ④)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신 설 > | <p>□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법령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 제19조 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제9호, 제13호 및 제14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5천만원</li> <li>○ 영 제19조 제1항 제6호, 제10호 및 제11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3천만원</li> <li>○ 영 제19조 제1항 제12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7천만원</li> </ul> <p>※ 영 제19조 제1항 제15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함</p> |

### (2) 개정이유

-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은 국조법 제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
- 과태료는 국민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기존 국세청 고시로 운영되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반영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30. 이후 최초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분부터 적용

## 7. 정보교환 협정 관련 규정 개선(국조법§31)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교환의 주체(국조법§31①,②,⑥)<br><input type="checkbox"/> ‘국세청장’                                                                            | <input type="checkbox"/> ‘권한 있는 당국’                                                                                                                                                             |
| <input type="checkbox"/> 조세정보 교환(국조법§31①)<br><input type="checkbox"/> 조세정보를 계약상대국과 교환할 수 있음<br><br><div style="text-align: center;">&lt; 신 설 &gt;<br/>(국조법 §31③)</div> | <input type="checkbox"/> 조세정보를 획득하여 교환할 수 있음<br><br><input type="checkbox"/> 납세자의 정보교환 방해나 지연의 제한<br><input type="checkbox"/>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 대상정보와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조세정보교환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지연할 수 없음 |

### (2) 개정이유

-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국가간 협정과 현행 국조법상의 규정을 일치시킴으로써 행정효율 증진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27. 이후 최초로 교환하는 조세·금융정보부터 적용

## 8. 거래이익법 보완규정 개선(국조령§4)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거래이익법 고려요소</p> <p>○ 이익분할방법의 배부기준</p> <p>가. 자산의 매입·제조·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p> <p>나. 자산의 개발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사용된 자산총액 또는 부담한 위험정도</p> <p>다. 각 거래단계에서 수행된 기능의 중요도</p> <p>라. 기타 측정가능한 합리적인 배부기준</p> <p>○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기준</p> <p>-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와 유사한,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기준으로 비교</p> <p>- 다만,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음</p> | <p>□ 고려요소 개선</p> <p>○ 이익분할방법의 배부기준</p> <p>가.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의 상대적 가치</p> <p>나. 영업자산, 고정자산, 유·무형 자산 또는 사용된 자본</p> <p>다. 연구개발, 설계, 마케팅 등 핵심 분야에 지출·투자된 비용</p> <p>라. 그 밖에 판매증가량, 핵심분야 고용인원 또는 노동투입시간, 정보관리 범위, 매장규모 등 거래순이익 실현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측정가능한 배부 기준</p> <p>○ 적용 기준 추가</p> <p>- 좌동</p> <p>- (추가) 국외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음</p> |

### (2) 개정이유

- 2010년 개정된 OECD 이전가격 지침 내용을 반영하여 거래이익법 적용시 고려요소와 관련한 규정을 개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30.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9.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 기준 추가(국조령§5 ①, ③)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input type="checkbox"/>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시 기준<br/>(국조령 §5 ①)</p> <p>*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br/>* 자료의 확보·이용가능성이 높을 것<br/>* 경제여건·경영환경에 대한 가정의<br/>현실 부합성이 높을 것<br/>* 자료 또는 가정의 결함이 미치는<br/>영향이 적을 것</p> <p style="text-align: center;">&lt; 신 설 &gt;</p> <p style="text-align: center;">&lt; 신 설 &gt;</p> | <p><input type="checkbox"/>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시 기준<br/>(국조령 §5 ①)</p> <p>○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에 거래와<br/>정상가격 산출방법과의 적합성이<br/>높을 것</p> <p><input type="checkbox"/> 적합성 평가 기준 제시<br/>(국조령 §5 ③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br/>산출의 용이성 여부</li> <li>- 정상가격 산정에 핵심적인 사항이<br/>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의 특성<br/>인지 수행되는 기능인지 여부</li> <li>- 합리적 조정 가능성 등 거래<br/>상황의 특수성</li> <li>- 매출·자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br/>거래순이익률과 영업활동과의<br/>관련성 등</li> </ul> |

### (2) 개정이유

-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정상  
가격 측정방식과 분석대상(특수관계거래의 재화와 용역의 특성  
및 수행하는 기능)과의 적합성을 추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30.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0. 특수관계 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과의 적합성 요소 구체화 (국조칙§2②,③)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신 설 > | <p>□ 국조령 §5③ 신설에 따른 시행규칙 위임사항(적합성 평가시 고려사항) 구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재화나 용역의 동질성 여부</li> <li>○ 재판매가격방법은 분석대상 당사자가 중요한 가공, 제조기능 없이 판매 등을 수행하는지 여부</li> <li>○ 원가가산방법은 특수관계자 사이에 반제품 등 중간재가 거래되거나 용역이 제공되는지 여부</li> <li>○ 이익분할방법은 특수관계거래가 없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도 각자의 기여에 비례하여 이익을 분할하는 것이 기대되는지 여부</li> <li>○ 거래순이익률 방법은 거래순이익률 지표와 영업활동간의 상관관계가 높은지 여부</li> </ul> <p>거래순이익률 지표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독립된 제3자 사이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측정하고,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지표선택에 있어 다음 사항을 고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은 특수관계자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독립된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사용</li> <li>-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은 거래순이익이 제조, 자산 집약적 활동, 자본 집약적 재무 활동 등을 통해 창출되어 자산과의 관련성이 큰 경우에 사용</li> <li>-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은 거래순이익과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과의 관련성이 높은 경우에 사용</li> <li>-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은 분석대상 당사자가 단순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사용</li> </ul> |

## (2) 개정이유

-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구체적인 상황간의 부합하는 정도가 높은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시행규칙에 반영
  - OECD 논의 동향 및 실무관행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적합성 판단요소를 시행규칙에 반영
  -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시 고려요소’ 측면에서 국세청 통칙에 일부 반영되어 있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완하여 시행규칙으로 규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3.18.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1. 비교가능성 분석을 위한 일반사항 규정(국조령§5②, 국조칙§2①)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비교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함<br/>(국조령 §5 ②)</p> <p>○ ①사업활동의 기능, ②계약조건, ③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④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⑤시장여건의 변화, ⑥경제여건 등</p> <p>※ 각 분석요소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이 국세청 통칙으로 규정되어 있음(통칙 5-5...1)</p> <p style="text-align: center;">&lt; 신 설 &gt;</p> | <p>○ ⑤시장여건의 변화와 ⑥경제여건은 ‘경제여건’으로 통합하고, 비교가능성 분석요소로서 ‘사용되는 자산’, ‘사업전략’ 추가</p> <p>○ 국조령 §5②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위임사항 구체화</p> <p>-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조건, 경제여건, 사업전략</p> |

### (2) 개정이유

- OECD 등의 국제적 논의 동향과 실무관행을 반영하여 비교가능성 분석요소를 합리화·구체화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30.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2. 비교가능성 분석 절차 신설(국조령§6 ①)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정상가격 산출 과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분석절차, 고려요소 등에 대한 규정이 없음</p> <p>※ 이전가격 과세 실무에서 통상 적용되는 절차규정</p> <p style="text-align: center;">&lt; 신 설 &gt;</p> | <p>□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비교가능성 분석절차를 규정 (국조령 §6 ① 신설)</p> <p>○ 분석 절차를 시행령에 예시</p> <p style="padding-left: 20px;">① 납세자의 사업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 ② 내부 및 외부 비교가능거래에 대한 자료수집 → ③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선택 및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 ④ 비교가능거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 ⑤ 정상가격 범위 결정</p> <p>○ 분석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p> |

### (2) 개정이유

-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 분석절차를 신설(시행령)하고, 분석단계별 구체적 분석사항 규정(시행규칙)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30.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3.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구체화(국조칙§2조의2①)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신설 > | <input type="checkbox"/> 국조령 §6① 신설에 따른 시행규칙 위임사항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석대상 연도의 선정</li> <li>○ 산업, 경쟁, 규제 요소 등 사업환경 분석</li> <li>○ 국내·외 분석대상 당사자 선정,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 핵심적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식별</li> <li>○ 내부 비교가능거래 자료 수집과 검토</li> <li>○ 외부 비교가능거래 자료 수집과 검토</li> <li>○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적절한 재무지표의 선정</li> <li>○ 비교가능성 분석요소를 기반으로 비교가능거래의 선정</li> <li>○ 특수관계거래와 독립된 제3자 거래간의 가격·이윤 등에 실질적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에 대한 합리적 조정</li> <li>○ 수집된 자료의 해석 및 정상가격 결정</li> </ul> |

#### (2) 개정이유

- OECD 논의 동향 및 실무관행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분석절차를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분석절차 단계별로 분석하여야할 실질적인 내용을 규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3.18.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4.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에 대한 규정 보완(국조령§6 ⑦)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input type="checkbox"/>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에 적용되는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을 적용(국조령 §6)</p> <p>○ 사실상의 자금거래의 경우 현행 규정 없음</p> | <p><input type="checkbox"/> 자금거래의 범위 추가</p> <p>○ (단서 신설)정상적인 지급기간을 넘어서는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p> |

### (2) 개정이유

-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지연을 통한 사실상의 자금거래에 관한 규정 추가
- 가격·이윤에 영향을 주는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조항 마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30.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5. 거래 통합분석 및 다년도 자료분석 사용 신설(국조령§6 ⑧, ⑨)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input type="checkbox"/> 밀접한 개별거래의 통합 분석에 관한 현행규정 없음</p> <p>※ 현행 실무상 적용하고 있는 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lt; 신 설 &gt;</p>     | <p><input type="checkbox"/> 개별 거래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나 연속되어 있어 개별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영§6 ⑧)</p> <p>○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p>               |
| <p><input type="checkbox"/> 다년도 혹은 개별연도 자료 사용 등에 관한 현행규정 없음</p> <p>※ 현행 실무상 적용하고 있는 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lt; 신 설 &gt;</p> | <p><input type="checkbox"/> 과거 사업연도의 영향이 여러 연도에 걸쳐 발생함으로써 특수 관계거래 및 비교대상거래와 관련된 해당사업연도의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실질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영§6 ⑨)</p> <p>○ 여러 사업연도 자료를 사용하여 차이를 조정할 수 있음</p> |

### (2) 개정이유

- 국제거래 다양화·복잡화에 따라 관련 거래를 통합하거나 다년도 자료 사용의 필요성이 증대하여 이를 허용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30.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6. 거래의 통합분석 적용례 구체화(국조칙§2조의2②)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신설 > | <input type="checkbox"/> 국조령 §6⑧ 신설에 따른 통합분석 적용례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한 제품라인과 연계되어 거래되는 제품군</li> <li>○ 제조 노하우 제공과 핵심 부품 공급의 결합</li> <li>○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우회거래</li> <li>○ 한 제품의 판매가 다른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li> </ul> |

### (2) 개정이유

- 밀접하게 연관된 전체거래를 개별거래로 무리하게 구분할 경우 거래의 특성이 사라지는 등 왜곡된 분석을 할 가능성이 있어 거래의 통합분석 적용례를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제시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3.18.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7. 다년도 자료분석 적용례 구체화(국조칙§2조의2③)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신설 > | <input type="checkbox"/> 국조령 §6⑨ 신설에 따른 다년도 자료분석 적용례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침투전략, 제품수명주기 등 고려한 사업전략의 가격에 대한 영향</li> <li>○ 경기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li> <li>○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li> </ul> |

### (2) 개정이유

- 특정 연도 자료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 하에서 다년도 자료의 사용을 허용하고 다년도 자료분석 적용례를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제시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3.18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8. 임시유보 처분통지 후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미반환시 처분 업무 절차 개선(국조령 §15, 국조칙§4②)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이전가격 과세에 따른 소득 조정<br/>금액은 임시유보처분 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0일간 반환확인을 기다린 후<br/>반환되지 않을 경우 본 처분</li> <li>○ 결정·경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br/>부과제척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br/>임시유보 처분없이 배당 등으<br/>로 처분 및 조정</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 신 설 &gt;</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이전소득<br/>미반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br/>에도 임시유보 처분없이 배당<br/>등 본 처분</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이전소득금액처분요청서 서식 신설</p> |

### (2) 개정이유

- 처음부터 반환의사가 없는 납세자인 경우에도 90일동안 관련  
업무를 별도 관리해야 하는 불편 해소
-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유보처분 없이 바로 본처분을 함으로써  
관련업무 조기 확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30. 이후 최초로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는 분  
부터 적용

### Ⅲ.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설

####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국조법§34, §35, §36 신설)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신 설 > | <p>□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도입</p> <p>○ 일정금액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내국 법인은 다음해 6월에 신고('10년도분부터 '11.6월 최초 신고, 법§34)</p> <p>-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액의 10%('11년 : 5%)이하 과태료(법§35)</p> <p>- 금융정보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법§36)</p> |

##### (2) 개정이유

- 역외탈세 방지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역외금융정보 수집 방안의 일환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 미국, 호주 등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구체적인 신고대상, 신고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분부터 적용

## 2.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국조령 §49 신설)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신 설 > | <p><input type="checkbox"/>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 초과시 신고<br/>(국조령 §49 ① 신설)</p> <p><input type="checkbox"/>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기관은 금융실명법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국조령 §49 ② 신설)</p> <p><input type="checkbox"/>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는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현금계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거래 계좌(국조령 §49 ③ 신설)</p> <p><input type="checkbox"/>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자 등) 중 상대 관련자가 본인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과세당국이 해외금융계좌 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고 의무 면제(국조령 §49 ④ 신설)</p> <p><input type="checkbox"/> 국조법상 금융실명법상 금융기관은 별도의 관리·감독이 가능하므로 신고의무 면제</p> <p>○ 단, 금융지주회사 등의 경우 금융실명법상 금융기관은 아니나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신고의무 면제 필요(국조령 §49 ⑤ 신설)</p> |

### (2) 개정이유

- 법률 위임 사항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구체화
  - \* 신고대상 금액, 신고대상 해외금융기관 및 계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 등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분부터 적용

### 3. 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국조령§50, 국조칙§18 신설)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신 설 > | <p><input type="checkbox"/>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 한정(국조령§50① 신설)</p> <p><input type="checkbox"/> 해외금융계좌 보유계좌잔액 산출방법 : 각 계좌 별로 잔액을 일별 환율로 환산 후(당일 종료시각 현재 잔액 및 환율) 합산(국조령§50② 신설)</p> <p>○ 합산하는 대상은 연도 전체 기간 중 보유한 계좌의 현금 및 상장 주식</p> <p><input type="checkbox"/>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신고서를 다음해 6월 중 제출(국조령 §50 ③ 신설)</p> <p>○ 해외금융계좌신고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함</p> <p><input type="checkbox"/> 실질적 소유자 개념 정의 :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 하는 자(국조령 §50 ④ 신설)</p> <p>○ 다만,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경우는 제외</p> <p><input type="checkbox"/>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자 등)는 해당 계좌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함(국조령 §50 ⑤ 신설)</p> <p><input type="checkbox"/>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상대 관련자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국조령 §50 ⑥ 신설)</p> |

#### (2) 개정이유

- 법률 위임 사항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 구체화
  - \* 신고의무자 판정시점, 합산대상 계좌의 자산 유형, 신고서 서식 시행규칙 위임, 실질적 소유자 개념 등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분부터 적용

#### 4.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국조령§51②,③,⑤ 신설)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신 설 > | <p>□ 신고의무 위반 금액을 기준으로 단순착오·기한후 신고·수정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서 정한 금액 이내에서 과태료 부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신고·과소신고 금액 20억원 이하 : 3%</li> <li>미신고·과소신고 금액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6%</li> <li>미신고·과소신고 금액 50억원 초과 : 9%</li> <li>○ 미신고 계좌 추가 확인시 : 전체 금액 기준 과태료에서 기부과 과태료를 차감한 금액</li> <li>○ 신고의무 위반 회수, 타법령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는 양정기준 신설</li> </ul> |

##### (2) 개정이유

- 과태료는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누진적으로 차등 부과되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부과
  - \* 미신고 금액이 클수록 역외탈세 우려가 크기 때문에 미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누진적으로 부과
- 과태료 금액은 신고의무 위반 회수, 타법령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 및 증액 가능
  - \* 2010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분에 대해서는 50% 경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분부터 적용

## IV. 기 타

### 1.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규정 명확화(국조령§25, §27)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시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손금불산입(국조법 제16조제2항)</p> <p>○ 시행령은 평균이자율 적용 (국조령 제25조, 제27조)</p> <p>※ 과세당국은 평균이자율 적용</p> | <p>○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손금불산입 하도록 시행령 개정</p> |

#### (2) 개정이유

- 국조법 제16조제2항에서 서로 다른 이자율이 있는 경우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손금불산입 하도록 개정('02.12월 국조법 제16조제2항 신설)
- 국조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에서는 손금불산입 대상 이자를 평균적으로 계산하도록 규정(관련 시행령 미개정)
- 따라서 시행령을 본법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함이 타당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30. 이후 최초로 손금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 2. 유보소득 합산과세 익금불산입 기간 폐지(국조법§20)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유보소득합산과세 후 실제배당시 익금불산입과 관련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배당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10년간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을 합친 금액을 한도로 익금불산입(국조법§20조①)</li> <li>○ 주식 등 양도시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간 주식 등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을 한도로 익금불산입(국조법§20조②1)</li> <li>○ 이월된 익금 등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명서류는 배당으로 간주된 과세연도의 법정신고기한 이 지난 날부터 10년간 보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도 삭제</li> <li>○ 한도 삭제</li> <li>○ 장부 및 증명서류는 실제 배당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정신고기한까지 보존</li> </ul> |

### (2) 개정이유

- 배당으로 간주된 부분 중 10년 초과분이 이중과세되는 문제점 해소
  - 장부 및 증명서류 보존 기간을 간주 배당일로부터 10년간에서 실제 배당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법정신고기한 까지로 연장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2.27. 이후 최초로 배당하거나 주식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3.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 비적용 요건으로서 ‘같은 지역 등’ 대상 확대(국조칙§10조의3)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비적용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같은 지역 또는 국가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국조령§36조의2)</li> <li>○ 같은 지역이란 유럽연합(EU)을 말함(국조칙§10조의3)</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같은 지역의 범위 확대<br/>(‘중국과 홍콩’ 추가)</li> </ul> |

#### (2) 개정이유

- 홍콩을 통한 중국 진출 등 투자현실을 반영하여 같은 지역 범위를 추가 지정 및 국내기업 지원 필요
  - \* 국내기업이 중국진출시 과실송금 회수 등 사업전략 등의 이유로 홍콩을 경유하여 지주회사·자회사 형태로 진출을 추진
- 중국과 홍콩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체결하여 경제통합을 가속화하는 현실 반영 필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3.18.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 관련**  
**(소득세법령 · 법인세법령 · 조세특례제한법령)**



## [양도소득 관련]

### 【개정 한 주요내용】

#### I. 농어민 세제지원

1.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세감면 일몰연장
2. 자경기간 계산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방법 개선

#### II. 부동산거래 활성화

1. 양도세 중과완화의 일몰연장
2.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 III. 과세정상화

1.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세 비과세·감면 제한
2.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이중공제 배제 명확화
3. 증권예탁증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의 명확화

#### IV. 납세자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1.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방법 보완
2. 양도세 이월과세제도 보완
3. 1세대1주택 판정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보완
4. 일시적 2주택(1주택·1조합원입주권)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 완화

#### V. 기타 제도개선

1. 협의분할되지 않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단기준 보완

2. 주식의 기타자산 판정시 부동산가액 계산방법 보완
3. 양도세 중과세율(50%) 대상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범위 완화
4. 공익사업 ‘사업시행자’의 범위 명확화
5.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적용시 취득시기 보완
6.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시 5년간 감면한도 설정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일자】**

- 소득세법 : 2010.12.27(제10408호)
- 법인세법 : 2010.12.30(제10423호)
- 조세특례제한법 : 2010.5.14(제10285호), 2010.12.27(제10406호)
- 소득세법시행령 : 2010.9.20(제22395호), 2010.12.30(제22580호)
- 법인세법시행령 : 2010.6.8(제22184호), 2010.9.20(제22395호),  
2010.12.30(제22577호)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2010.6.8(제22181호), 2010.12.30(제2258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 2011.3.28(제195호)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 2010.6.8(제157호), 2010.12.31(제182호)

## I. 농어민 세제지원

### 1.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세감면 일몰연장 (조특법 §69)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 자경한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 양도시 양도세 100% 감면<br><br>* 고령(65~70세)인 은퇴 농업인에 대해 75세까지 지급<br><br>○ 일몰기한 : '10.12.31 | <input type="checkbox"/> '12년말까지 일몰연장 |

#### (2) 개정이유

-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영농규모화 촉진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2. 농지 자경기간 계산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방법 개선 (조특령 §66⑪⑫)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상속인이 “경작”한 경우<br><br>○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br><br><input type="checkbox"/>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시<br><br>○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 | <input type="checkbox"/>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br><br>○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br><br><input type="checkbox"/>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시<br><br>○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 |

### (2) 개정이유

- 경작기간 통산방법 합리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Ⅱ. 부동산거래 활성화

### 1. 양도세 중과완화의 일몰연장

(소득법 §104④⑥ 및 법률 제9270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14)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다주택<br>○ 기본세율(6 ~ 35%) 적용<br>-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br>- 3주택 이상 보유자의 투기지역에 있는 주택에 한정하여 10% 추가과세 적용<br>※ 일몰시한: '10년말까지 취득·양도분 | <input type="checkbox"/> '12년말까지 일몰연장<br>○ (좌 동) |
| <input type="checkbox"/> 비사업용 토지<br>○ 기본세율(6 ~ 35%) 적용<br>-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br>- 투기지역에 있는 비사업용토지에 한정하여 10% 추가과세 적용<br>※ 일몰시한: '10년말까지 취득·양도분     | <input type="checkbox"/> '12년말까지 일몰연장<br>○ (좌 동) |

#### (2) 개정이유

- 양도세제의 정상화 필요성, 부동산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양도세 중과완화의 일몰시한을 2년간 연장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취득·양도분부터 적용

## 2.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소득령 §167의3, 법인령 §92의2, 중부령 §3)

### (1) 개정내용

| 종 전                                                                              |                       |            | 개 정                                                                                                                                                                                           |                 |                       |            |
|----------------------------------------------------------------------------------|-----------------------|------------|-----------------------------------------------------------------------------------------------------------------------------------------------------------------------------------------------|-----------------|-----------------------|------------|
| <input type="checkbox"/> 세제지원* 대상 매입임대주택 요건<br>* 양도세 중과완화,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 및 중부세 비과세 |                       |            | <input type="checkbox"/> 수도권 내(서울제외)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호수 : 5호 이상 → 3호 이상</li> <li>○ 의무임대기간 : 10년 → 7년</li> <li>○ 취득시 기준시가 : 3억원 이하 → 6억원 이하</li> </ul> |                 |                       |            |
| 구분                                                                               | 수도권<br>(서울포함)<br>매입임대 | 지방<br>매입임대 | 구분                                                                                                                                                                                            | 서울<br>매입임대      | 수도권<br>(서울제외)<br>매입임대 | 지방<br>매입임대 |
| 임대호수                                                                             | 5호이상                  | 1호이상       | 임대호수                                                                                                                                                                                          | 5호이상            | 3호이상                  | 1호이상       |
| 주택규모<br>(전용면적)                                                                   | 국민주택<br>(85㎡이하)       | 149㎡이하     | 주택규모<br>(전용면적)                                                                                                                                                                                | 국민주택<br>(85㎡이하) | 좌 동                   | 149㎡이하     |
| 의무임대기간                                                                           | 10년이상                 | 7년이상       | 의무임대기간                                                                                                                                                                                        | 10년이상           | 7년이상                  | 7년이상       |
| 주택가액<br>(기준시가)                                                                   | 3억원이하                 | 좌 동        | 주택가액<br>(기준시가)                                                                                                                                                                                | 3억원이하           | 6억원이하                 | 3억원이하      |

### (2) 개정이유

- 주택거래의 활성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수도권 (서울 제외)내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소득세·법인세) '10.9.20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 (중부세) '10.9.20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Ⅲ. 과세정상화

#### 1.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세 비과세·감면 제한 (소득법§91, 조특법§129)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양도세 비과세·감면 적용 배제<br><br><input type="checkbox"/> 미등기양도자산<br><br><div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div> | <input type="checkbox"/> 비과세·감면 적용 배제(제한) 대상 거래유형 추가<br><br><input type="checkbox"/> (좌 동)<br><br><input type="checkbox"/>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br>* 토지 등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며,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로 한정 |

##### (2) 개정이유

-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실거래가 과세제도 정착

| 법률에서 규정된 내용                                                                                                                                                             |
|-------------------------------------------------------------------------------------------------------------------------------------------------------------------------|
| <input type="checkbox"/> 허위계약서 유형<br>·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up·Down) 적은 경우<br><input type="checkbox"/> 비과세·감면 제한 방법<br>· ‘계약서상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액’을 비과세·감면대상 세액에서 차감 |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7.1 이후 양도·취득분부터 적용

## 2.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이중공제 배제 명확화(소득법§97②)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input type="checkbox"/>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p> <p>○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차감</p> <p>○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 차감하지 않음</p> | <p><input type="checkbox"/>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이중공제 배제</p> <p>○ (좌 동)</p> <p>○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 차감</p> |

### (2) 개정이유

- 사업소득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된 감가상각비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이중공제되지 못하도록 명확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3. 증권예탁증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의 명확화 (소득법§118의2, §94①)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해외주식 등의 범위<br><br>○ 주식 또는 출자지분<br>-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증권 시장 상장주식 등은 제외)<br>-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 <input type="checkbox"/> 증권예탁증권(DR : Depositary Receipts)를 과세대상에 추가<br><br>○ 주식, 출자지분 및 증권예탁증권<br><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margin: 10px 0;">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height: 100px; margin-right: 10px;"></div> <div>(좌 동)</div> </div><br>※ 국내에서 장외거래되는 외국법인 발행 DR도 과세대상에 포함 |

#### (2) 개정이유

- 해외에서 발행한 증권예탁증권(주식예탁증서)는 일반주권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양도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Ⅳ. 납세자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 1.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방법 보완(소득법§97②)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p> <p>○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 경우</p> <p>- 필요경비 = 실지거래가액 +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p> <p>○ 취득가액이 환산가액*인 경우</p> <p>*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math>\times</math> <math>\frac{\text{취득당시 기준시가}}{\text{양도당시 기준시가}}</math></p> <p>- 필요경비 = 환산가액 + 개산 공제금액*</p> <p>* 토지 및 건물 : 3%<br/>지상권, 전세권 : 7%<br/>그 외 자산 : 1%</p> | <p>○ (좌 동)</p> <p>○ 납세자가 선택하는 경우</p> <p>- 필요경비를 [환산가액+개산공제금액] 대신 [자본적지출액+양도비]로 계산</p> |

#### (2) 개정이유

- 납세자가 선택한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필요경비만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2. 양도세 이월과세제도 보완(소득법§97④)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이월과세 적용요건 및 방법</p> <p>○ 적용요건 : 배우자* · 직계존비속 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등을 5년 이내 양도</p> <p>* 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p> <p>○ 적용방법: 증여자의 취득가액 적용 하여 양도세 과세, 증여세는 필요 경비에 산입</p> | <p>○ 다음은 이월과세 적용 배제</p> <p>- 증여받은* 후 수용 등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p> <p>*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 한정</p> <p>- 양도당시 사망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된 경우</p> <p>○ (좌 동)</p> |

### (2) 개정이유

- 조세회피 목적의 양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제도 합리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3. 1세대1주택 판정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보완(소득령§154⑧)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상속·증여받은 주택의 보유 기간<br>계산<br>○ 상속받은 주택 : 상속개시일 부터<br>계산<br>○ 증여받은 주택 : 증여등기접수일<br>부터 계산 | <input type="checkbox"/>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br>택의 보유기간 합산방법 명확화<br>○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br>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br>○ (좌 동) |

#### (2) 개정이유

- 법령해석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명확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4. 일시적 2주택(1주택·1조합원입주권)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 완화(소득령§155⑰)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p> <p>*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보유·거주기간)을 충족</p> <p>○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p> <p>○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p> | <p>□ 일시적 2주택(1주택+1조합원 입주권)의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중복보유기간 예외사유 신설</p> <p>○ (좌 동)</p> <p>○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2년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예외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신청</li> <li>- 법원경매 신청</li> <li>- 자산관리공사 매각의뢰</li> </ul> |

##### (2) 개정이유

-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동일하게 비과세를 인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V. 기타 제도개선

### 1. 협의분할되지 않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단기준 보완 (소득령§155⑱)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까지 상속주택이 협의분할하여 등기되지 않은 경우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단</li> <li>- 법정상속분(민법§1009 및 §1010)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li> <li>* 다만, 일반주택 양도후 국세 부과제척기간내에 협의 분할되어 법정상속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협의분할내용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과세조정</li> </ul> |

#### (2) 개정이유

- 법령해석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명확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2. 주식의 기타자산 판정시 부동산가액 계산방법 보완 (소득령 §158③)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기타자산*으로 보는 부동산과다 보유<br/>법인 주식의 부동산소유비율 계산<br/>방법</p> <p>* ① 자산중 부동산 비중 50% 이상<br/>② 과점주주(50%이상) 소유주식<br/>③ 50%이상 타인에게 양도하는 주식</p> <p>○ 부동산소유비율 : 자산총액 중 부동산<br/>가액이 50% 이상</p> <p>○ 자산가액의 계산기준</p> <p>- 장부가액 원칙</p> <p>- 토지는 기준시가</p> | <p>○ (좌 동)</p> <p>○ 자산가액 중 부동산가액의 계산<br/>기준 보완</p> <p>- (좌 동)</p> <p>-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의 경우<br/>'장부가액&lt;기준시가'인 경우에만<br/>기준시가 적용</p> |

### (2) 개정이유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부동산 소유비율 판정시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여 부동산 소유비율에 대한 왜곡 방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3. 양도세 중과세율(50%) 대상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범위 완화(소득령§167의6②)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주택수 포함 기준<br>○ 수도권 : 모든 주택<br>○ 그 밖의 지역 :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br>* 수도권 밖 광역시 소재 3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 계산시 제외(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대책, '08.10.7.) | (좌 동)                                                                     |
| <input type="checkbox"/> 1세대 1주택·1조합원입주권 중과 대상 주택수 포함기준<br>○ 수도권·수도권 밖 광역시 : 모든 주택<br>○ 그 밖의 지역 :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 ○ 수도권 : 모든 주택<br>※ 수도권밖 광역시 소재 3억원 이하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br>○ (좌 동) |

#### (2) 개정이유

- 중과대상 주택수 계산기준을 '2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형평 유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4. 공익사업 ‘사업시행자’의 범위 명확화(조특법 §77)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input type="checkbox"/>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p> <p>○ 적용요건 :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해 양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p> <p>○ 감면방법 : 사업시행자가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적용</p> | <p><input type="checkbox"/> 양도세 감면대상 공익사업용 토지의 범위 확대</p> <p>○ 공익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양도한 토지 중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때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양도한 토지 등을 포함</p> <p>○ 감면방법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적용</p> |

##### (2) 개정이유

- 원활한 공익사업의 시행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5.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적용시 취득시기 보완 (조특법 §77)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시 양도세 감면 (20% ~ 50%)</p> <p>○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 여부 판단기준</p> <p>-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 <p>□ (좌 동)</p> <p>○ 취득시기 판단기준 보완</p> <p>- (좌 동)</p> <p>-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증여받은 토지는 증여자가 해당토지를 취득한 날</p> |

\* 양도세 이월과세 :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시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하고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

### (2) 개정이유

-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취득시기의 합리적 조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6.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시 5년간 감면한도 설정(조특법 §133)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한도<br><br>○ 만기보유 채권 보상<br>: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br><br>○ 현금, 일반채권 보상<br>: 1년간 1억원 | <input type="checkbox"/> 양도세 감면한도 보완<br><br>○ (좌 동)<br><br>○ 현금, 일반채권 보상<br>: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 |

### (2) 개정이유

- 과세형평 제고 및 현금보상 유인 축소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 도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시행규칙]

### 【개정한 주요내용】

#### I. 중산·서민층, 중소기업 등 세제지원

1.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 II. 납세자 권리 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1. 기한 후 신고시 연부연납신청 허용
2. 장애인 인적공제 산정 및 종신통기금 평가방법 개선
3.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 확대
4. 유사매매사례가액 제도 개선
5. 봉안시설에 자연장 비용 추가

#### III. 기타 제도개선

1. 성실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미적용 범위 확대
2. 부득이한 사유로 공익목적에 사용 못하는 재산의 사용기한 설정
3.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4.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자료 제출 근거조항 마련
5. 공익법인 외부감사제도의 개선
6. 외국납부세액 순손익가치 차감항목 추가
7.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대상 확대

#### 【법·시행령 개정일자】

- 상속세및증여세법 : 2010.12.27(제10411호)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 2010.12.30(제22579호)

## I. 중산·서민층, 중소기업 등 세제지원

### 1.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법 §18, 영 §15)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p> <p>○ 가업상속공제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업상속시 상속재산의 40%를 사업기간에 따라 60억~100억원 한도내에서 공제</li> </ul> <p>○ 대상 및 적용요건</p> <p>① 가업상속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li> <li>* 매출액 1천억원 초과시 중소기업 졸업<br/>&lt;추 가&gt;</li> </ul> <p>② 최대주주* 지분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장기업 : 40% 이상</li> <li>- 비상장기업 : 50% 이상</li> <li>* 상증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li> </ul> <p>③ 피상속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대주주</li> </ul> | <p>○ (좌 동)</p> <p>○ 대상 확대 및 적용요건 보완</p> <p>① 가업상속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고용요건을 충족한 매출액 1천5백억원 이하 기업</li> <li>· 고용요건 : 상속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이 상속직전연도 정규직 근로자수의 1.2배 이상</li> <li>⇒ 10년 이내에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당초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부과</li> </ul> <p>② 최대주주 지분율 제한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장기업 : 30% 이상</li> <li>- (좌 동)</li> </ul> <p>③ 피상속인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대주주 중 1인</li> </ul> |

(2) 개정이유

-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연간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 적용
- 다만, 해당 기업의 고용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용증대 요건을 추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 Ⅱ. 납세자 권리 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 1. 기한 후 신고시 연부연납신청 허용 (영 §67)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연부연납 신청기한<br>○ 법정신고기한내 신고<br>○ 무신고로 납부고지서를 받는<br>경우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br><추 가> | ○ 기한후 신고 |

#### (2) 개정이유

- 무납부·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에도 연부연납신청을 허용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2. 장애인 인적공제 산정 및 종신평기금 평가방법 개선 (법 §20, 영 §62)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인적공제 금액<br>○ 500만원 × 75세까지의 연수<br><br><input type="checkbox"/> 종신평기금 평가방법<br>○ 정기금을 75세까지 수령<br>* 종신평기금 평가액<br>$= \sum_{k=1}^n \frac{75\text{세까지 매년 받을 금액}}{(1 + \text{고시이자율})^k}$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인적공제금액 산정방식 변경<br>○ 500만원 × 상속인의 기대여명*<br>* 기대여명표는 통계청에서 매년 12월 발표<br><br><input type="checkbox"/> 종신평기금 평가기간 변경<br>○ 정기금을 기대여명까지 수령<br>* 종신평기금 평가액<br>$= \sum_{k=1}^n \frac{\text{기대여명까지 매년 받을 금액}}{(1 + \text{고시이자율})^k}$ |

### (2) 개정이유

- 개별 상속·수증인의 기대여명 반영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 3.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 확대 (법 §23의2, 영 §20의2)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input type="checkbox"/>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 요건</p> <p>* 주택가액의 40%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5억원 한도)</p> <p>○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주택에 계속 10년간 동거</p> <p>○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일 것</p> <p>○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p> | <p><input type="checkbox"/> 요건 합리화</p> <p>○ 1주택에 계속 10년간 동거 (이사가능)</p> <p>○ 주택의 범위 확대</p> <p>- 일시적2주택, 이농·귀농주택, 문화재주택, 혼인합가중 일부*</p> <p>*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p> <p>○ (좌 동)</p> |

#### (2) 개정이유

-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 합리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 4. 유사매매사례가액 제도 개선 (영 §49)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상증법상 재산평가 방법</p> <p>○ (원칙) 상속·증여개시일 현재의 시가*</p> <p>*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 :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p> <p>○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등도 시가로 인정</p> <p>-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상속·증여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 : 3개월)이내의 가액으로 규정</p> <p>○ (예외)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 등도 평가위원회 자문을 거치는 경우 시가 인정</p> | <p>○ (좌 동)</p> <p>○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평가의 보충적 방법으로만 사용</p> <p>- (1순위)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등*</p> <p>* 매매·수용·경매·공매가격</p> <p>** 다만, 감정가액이 법제61조부터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유사매매사례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불인정</p> <p>- (2순위) 유사매매사례가액</p> <p>다만, 상속·증여개시일“전” 6개월(증여 : 3개월)부터 상속·증여세 신고시까지 가액만 인정</p> |

##### (2) 개정이유

- 상속·증여 재산평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 5. 봉안시설비에 자연장 비용 추가 (영 §9)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장례비용 공제<br>○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br>(1,000만원 한도)<br>○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br>금액(500만원 한도)<br><추 가> | ○ (좌 동)<br>- 자연장에 소요된 비용도 포함 |

## (2) 개정 이유

- 자연장 지원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도모
  - \*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 Ⅲ. 기타 제도개선

#### 1. 성실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미적용 범위 확대 (법 §16)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br/>(성실공익법인은 10%)</li> </ul> <input type="checkbox"/> 주식보유한도 미적용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관계 없는 일반기업 주식을<br/>성실공익법인에 출연</li> <li>○ 국가·지자체가 설립한 공익법<br/>인에 출연</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실공익법인에 출연하고, 10%<br/>초과분은 3년이내에 특수관계<br/>없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li> </ul> <p>*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설립한<br/>공익법인은 제외</p> |

##### (2) 개정이유

-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 활성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주식 등을 출연하는 분  
부터 적용

## 2. 부득이한 사유로 공익목적에 사용 못하는 재산의 사용기한 설정 (법 §48)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input type="checkbox"/>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증여세 비과세)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 목적사업 미사용시 증여세 과세</p> <p>○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p> <p><input type="checkbox"/>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 종료 후, 공익목적 사용시한을 정하지 않고 있음</p> <p>* 이에따라 해당 재산의 과세시기가 확정되지 않는 문제 발생</p> | <p><input type="checkbox"/> 주무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면서 공익목적 사용시한 (사유 종료시부터 1년)을 설정</p> <p>* 사용기한까지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과세가액에 산입</p> |

### (2) 개정이유

- 공익목적 사용시한을 설정함으로써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산입시기 명확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이후 출연받는 분부터 적용

### 3.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법 §78)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상증법상 지급명세서 등* 미제출 · 누락에 대한 가산세<br>* 전환사채 발행내역, 생명보험 · 퇴직금 지급액 명세 등<br>○ 가산세율 : 미제출 · 누락금액의 2% | ○ 가산세율 : 미제출 · 누락금액의 0.2% |

#### (2) 개정이유

- 상속 · 증여세법상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등 납세자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 4.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자료 제출 근거조항 마련 (법 §80)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가족관계등록부 수집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망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li> <li>○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 등을 접수한 법원행정처장</li> <li>○ 국세청장이 관련 자료 요구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이 자료 제공</li> </ul> |

##### (2) 개정이유

- 상속·증여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제출 근거 마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부터 적용

## 5. 공익법인 외부감사제도의 개선 (영 §43)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공익법인의 경우 일정한 공익법인*을 제외하고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br><br>*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br><br>* 종교법인, 학교, 유치원 등                                 | <input type="checkbox"/> (좌 동)              |
| <input type="checkbox"/> 회계감사 실시 및 제출기한<br><br><input type="checkbox"/> (회계감사 실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회계감사 실시<br><br><input type="checkbox"/> (감사보고서 제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 <삭 제><br><br><input type="checkbox"/> (좌 동) |

### (2) 개정이유

- 대부분의 외부감사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후에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기간 삭제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6. 외국납부세액 순손익가치 차감항목 추가(영 §56)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 또는 차감하는 항목</p> <p>○ 가산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금 이자</li> <li>- 수입배당금중 익금불산입금액 등</li> </ul> <p>○ 차감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li> <li>- 손금용인되지 않은 공과금</li> <li>-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li> <li>- 접대비 한도 초과액</li> <li>- 법인세 총 결정세액 등</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0 auto; width: 50%;"> <p>○ (좌 동)</p> </div> <p>-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세액</p> |

### (2) 개정이유

-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납부한 외국납부 법인세액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순자산에 감소시킨 비용이며,
  - 국내에서 납부한 법인세액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 7.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대상 확대 (법§50의3)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결산서류 공시대상 공익법인 등<br>○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법인 등<br>- 단, 종교법인은 제외<br><br><추 가> | <br><br><br><br><br><br><br>○ 수입금액 또는 기부받은 금액이<br>일정금액 이상인 공익법인 등 |

### (2) 개정이유

-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대상을 확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종합부동산세법 · 시행령



## [종합부동산세법 · 시행령]

### 【개정 한 주요내용】

1. 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요건 완화
2. 세 부담 상한 적용기준 보완
3.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요건 미충족시 적용기준 보완

### 【시행령 개정일자】

- 대통령령 : 2010.2.18(제22045호), 2010.6.8(제22183호), 2010.9.20(제22392호), 2010.12.30(제22586호)

## 1. 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요건 완화(영 §3)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호 이상 임대할 것</li> <li>○ 전용면적 149㎡(45평) 이하일 것</li> <li>○ 공시가격 6억 이하일 것</li> <li>○ 5년 이상 임대할 것</li> </ul> <p>*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5년간 계속 임대로 간주</p>      |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font-size: 4em; margin-right: 10px;">]</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div> </div><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건설임대주택도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임대 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로 간주</li> </ul> |
| <input type="checkbox"/>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시 종부세 추정배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주택법상 임대 의무기간을 1/2 경과 후 분양전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건설임대주택</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 추 가 &gt;</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건설임대주택</li> </ul>                                                                                                                                                                                                                               |

### (2) 개정이유

- 임대주택 활성화와 서민주거생활 안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신고·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 2. 세 부담 상한 적용기준 보완 (영 §5)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주택분 종부세 세 부담 상한</p> <p>○ 당해연도 (재산세+종부세)가 직전 연도 (재산세+종부세)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p> <p>-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간주</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p>○ 직전연도 종부세 계산시</p> <p>- 전년도 기준 보유기간·연령을 적용하여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 세액공제* 적용</p> <p>*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 (5~9년 보유) 20%, (10년 이상 보유) 40%</p> <p>* 고령자 세액공제 : (60~64세) 10%, (65~69세) 20%, (70세 이상) 30%</p> |

### (2) 개정이유

-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 규정 적용방식을 명확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3.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요건 미충족시 적용기준 보완(영 §3)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input type="checkbox"/> 합산배제 임대주택 중 불기피한 사유*로 임대기간 미충족시에도 이를 임대기간으로 인정</p> <p>* 공취법 등에 의한 수용,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에 의한 분양전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p> <p><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주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임대주택(5년)</li> <li>○ 매입임대주택(10년)</li> <li>○ 2005.1.5이전 임대한 주택(5년)</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매입임대 주택(10년)</li> <li>○ 미분양주택('09.6.30까지 분양계약 체결)을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 (5년)</li> <li>○ 수도권 밖에 위치한 매입임대주택 (7년)</li> </ul> |

#### (2) 개정이유

- 조문정리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분야**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농림특례규정, 외국인특례규정)



## [부가가치세 분야]

### 【개정 한 주요내용】

#### I.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 목재펠릿에 대해 한시적 부가가치세 면제
2.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추가
3. 사립학교 민자사업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
4.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5.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현금지급 의무화

[농림특례규정]

6.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 추가
7. 사후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 추가
8. 사후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 추가

#### II. 중소기업인 지원

[부가가치세법]

1.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 일몰 연장 등
2. 신용카드 매출세액 우대공제 일몰연장
3.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시 천원미만 절사
4. 사업폐업시 부가세 신고·납부 편의지원

[조세특례제한법]

5. 면세금지금제도 일몰연장

#### III. 산업 활성화 지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 신용정보사 채권추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
2.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3.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

## 【개정 한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4.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대한 세제지원
5.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에 대한 세제지원
6.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

### IV. 과세기반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과세
2. 수의사 동물진료 용역에 대해 과세
3. 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해 과세

### V. 세원 투명성 제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 간이과세 제도의 합리화
  - 가. 간이과세 적용기준 합리화
  - 나. 복식부기의무자는 간이과세 배제
2. 전자세금계산서의 성공적 정착 지원
  - 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나.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제도 보완
  - 다. 공인인증서 발급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 라. IPTV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등
3. 전부자료상에 대한 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
4. 위장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가산세 부과

### VI. 납세편의 제고 및 기타 제도 보완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

1. 신용카드 등 당첨금 제도 폐지
2. 사업자 미등록가산세 부과기준 개선

## 【개정 한 주요내용】

3. 재고매입세액 공제 및 납부대상 자산에 ‘건설중인 자산’ 추가
4. ‘건설중인 자산’의 재고매입세액 계산
5. 사업양수인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대상 명확화
6.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제한제도 폐지
7.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8. 공동사용건물의 매입세액 안분계산제도 개선
9. 채수입에 대한 부가세·관세 면제범위 일치
10. 면세소금의 범위 조정
11. 월합계세금계산서 기재사항 개선
12. 영세율 적용대상 외교관 등의 정의 개선
13. 계약해지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명확화
14. 매입세액 불공제 소형승용차 범위 명확화
15. 공급가액·부가세액 구분표시 사업자 범위 명확화
16. 국제경쟁입찰방식 차관자금사업 VAT 영세율 폐지
17. 한국은행에 부가세 납부시 신고서 제출규정 삭제
18. 장기할부판매요건 명확화
19. 영수증 발급대상에 자동차 제조업 등 추가
20.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조정
21. 사업장의 범위 조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2.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시 공급중단제도 개선
23. 외교관에 대한 VAT 사후환급절차 개선

### [농림특례규정]

24. 조세지원대상 농민의 범위 조정

## 【개정 한 주요내용】

- 25. 면세유 지원대상 납시어선의 범위 조정
- 26.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장치 부착대상 농업기계의 범위 조정
- 27. 면세유 사후관리 대행기관 추가

### [외국인특례규정]

- 28.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 요건 신설
- 29. VAT 사후환급 가능한 거래가액 명확화
- 30. 일부품목에 대한 반출확인 절차 보완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일자】

### ○ 법 률

- 부가가치세법 : 2010.12.27(제10409호)
- 조세특례제한법 : 2010.12.27(제10406호)

### ○ 대통령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2010.12.30(제22578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2010.12.30(제22583호)
- 농림특례규정 : 2010.12.30(제22575호)
- 외국인특례규정 : 2010.12.30(제22581호)

### ○ 기획재정부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2011.3.24(제194호)

## I.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

### 1. 목재펠릿에 대해 한시적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106)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목재펠릿 공급에 대하여<br>2년간('11.1 ~ '12.12) 한시적<br>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

#### (2) 개정이유

- 저탄소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의 사업초기 시장 형성 및 보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VAT 면세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추가(조특령 §105)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br><br>○ 의수족, 휠체어 등<br><br><신 설> | ○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

## (2) 개정 이유

- 장애인용 보장구 구입부담 경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3. 사립학교 민자사업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조특법 §106)

#### (1) 개정 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BTO 방식*의 민자로 건설하는 사립학교 시설(기숙사 등)과 관련하여</p> <p>* BTO(Build-Transfer-Operate)<br/>: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학교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p> <p>○ 학교의 사업자에 대한 시설 관리운영권 공급: 면세</p> <p>○ 사업자가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면세 (실비 여부 불문)</p> <p>※ 일몰<br/>: ‘10년말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까지 적용</p> | <p>○ 일몰연장<br/>: ‘12.12.31</p> |

#### (2) 개정이유

- 학생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 감안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4.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106)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p>□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p> <p>○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자가 공급하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li> <li>- 공동주택의 일반 관리비에 준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li> </ul> <p>○ 경비업자·청소업자가 공급하거나 노인복지주택 관리·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급하는 경비·청소용역</p> |

##### (2) 개정이유

- 노인복지주택 관리비 부담 경감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5.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현금지급 의무화 (조특법 §106조의7)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 경감</p> <p>○ 법정용도<br/>: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br/>처우개선 및 복지향상</p> <p>○ 법정용도 사용기한<br/>: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br/>6개월까지</p> | <p>○ 지급방법<br/>: 운수종사자에게 전액 현금지급*</p> <p>* 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동 금액이<br/>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고지하여야 함</p> <p>○ 현금 지급기한<br/>: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br/>부터 1개월까지</p> |

### (2) 개정이유

- 택시 운수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도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7.1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분부터 적용

## 6.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 추가(농림특례규정 별표2)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br>○ 농업용 난방기 외 37개<br>〈신 설〉<br>〈신 설〉 | <input type="checkbox"/> 대상 추가<br>○ 농업용 로우더 (자체중량<br>2톤미만)<br>○ 동력제초기 |

### (2) 개정이유

- 농민의 영농비용(면세유 구입비용) 경감 지원을 위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7. 사후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 추가(농림특례규정 §7·별표5)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br>농업용 기자재<br>○ 농업용 배지<br>(양액·버섯재배용에 한함)<br>등 31개 품목<br><신 설> | ○ 양송이 재배용 복토 |

### (2) 개정이유

- 농민의 생산비 부담 경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8. 사후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 추가(농림특례규정 §7·별표6)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br>어업용 기자재<br><br>○ 양어장용 필름 등 22개 품목<br>〈신 설〉 | ○ 어선용 유류절감장치 및<br>고효율축매기기 |

### (2) 개정이유

- 어민의 생산비 부담 경감 및 면세유 사용량 축소 유도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Ⅱ. 중소기업인 지원

### 1.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 일몰연장(영 §62 ①, §74의5 ②)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의제매입세액공제율<br>○ 근거 법령 : 시행규칙<br>○ 공제율<br>- 기준공제율 : 2/102<br>(음식업 3/103)<br>- 음식업 우대공제율 ('10년 일몰)<br>· 4/104(유흥주점), 8/108(개인),<br>6/106(법인) | ○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br><br>(현행 유지)<br>- 음식업 우대공제제도 일몰 2년<br>연장 ('10.12.31→'12.12.31) |

#### (2) 개정이유

- 공제율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법률 취지에 맞춰 시행령에서 공제율을 직접 규정
- 음식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 2.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 일몰연장(법 §32의2)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등 발급에 따른 VAT 세액공제율<br>○ 음식·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 :<br>2% ('10년말까지 2.6%)<br>○ 기타 개인사업자 : 1% ('10년말까지 1.3%)<br>○ 공제한도 : 500만원('10년말까지 700만원) | <input type="checkbox"/> 일몰연장<br>: '12.12.31 |

### (2) 개정내용

- 음식·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 등 중소기업인의 세부담 경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3.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시 천원미만 절사(법 §18 ②)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시 10원<br>미만은 절사하고 납세고지 |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시 1,000원<br>미만은 절사 |

#### (2) 개정내용

- 동전 준비, 금액 입력 등 부가가치세 납세협력 부담의 경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납세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 4. 사업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편의 지원(법 §19)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사업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br>○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 |

##### (2) 개정내용

- 사업을 폐업한 경우 일수계산 잘못 등으로 가산세를 부과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
- 폐업시에는 일수계산을 하지 않고 폐업일의 다음달 25일 이내 신고·납부토록 하여 폐업자의 부가세 신고납부 편의 도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폐업하는 분부터 적용

## 5. 면세금지금제도 일몰연장(법 §106의4)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금도매업자·세공업자 등의 추천<br>금지금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br>○ 일몰: '10.12.31 | ○ 일몰연장: '11.12.31 |

### (2) 개정이용

- 금거래소를 통한 금거래가 개시('12.1월)될 때까지는 현행 면세  
금지금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공급·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 2.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영 §26)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받는<br>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하여 한시적으로<br>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br>○2년 적용 ('11.1.1 ~ '12.12.31) |

### (2) 개정이유

-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 「의료법」의 개정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업무가 '09.5월부터 허용됨

### (3) 개정내용

- 201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3.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영 §37)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 용역에<br>대해 부가가치세 면제<br><br>○ 일몰기한 : '10.12.31 | <br><br><br><br><br><br><br>○ 일몰 3년 연장<br>( '10.12.31 → '13.12.31) |

#### (2) 개정이유

- 산학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4.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대한 세제지원 (조특법 §106, 116, 118)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 등이 경기 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관세 면제 |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

##### (2) 개정이유

-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부가가치세·관세: '10.3.12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인지세: '10.3.2 이후 최초로 과세문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 5.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에 대한 세제지원(조특법 §106, 116, 118)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조직위 등이 보전총회와 관련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관세 면제 |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조직위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

### (2) 개정이유

-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부가가치세·관세: '11.1.1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인지세: '11.1.1 이후 최초로 과세문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 6.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조특령 §106)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31개의 정부업무대행단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br><br><신 설> | <input type="checkbox"/>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li> <li>○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li> <li>○ 한국환경공단의 국가·지자체 대행·수탁 사업(시험·검사 업무 등 일부 사업 제외)</li> <li>○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시험 관리, 적성검사업무 등</li> <li>○ 금융결제원의 지방세 세입금 통합수납처리시스템 운영사업</li> <li>○ 한국원자력기술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li> </ul> |

### (2) 개정이유

-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등 정부업무대행단체 사업 지원
-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사업 범위의 합리적 조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금융결제원- '11.3.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한국환경공단- '11.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IV. 과세기반 확대

### 1.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영 §29)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VAT 면제되는 의료보건<br>용역<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치과의사·한의사<br/>등이 제공하는 용역</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중 일부<br/>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VAT 과세</li> <li>*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br/>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li> </ul> |

#### (2) 개정이유

- VAT 과세기준의 국제화\* 및 과세품목 간 형평을 감안하여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을 과세로 전환
- \* 인간의 질병치료 의료용역에 한해 VAT 면세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7.1 이후 용역 제공 개시분부터 적용

## 2. 수의사 동물진료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영 §29)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VAT면제 의료보건용역<br>○ 수의사 진료용역 | ○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진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br>- 단, 「축산물위생관리법」상의 가축 및 「기르는 어업 육성법」상의 수산 동물 진료용역은 면세 유지 |

### (2) 개정이유

- 인간의 질병치료에 한해 면세하는 국제기준에 맞추어 과세로 전환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7.1 이후 용역 제공 개시분부터 적용

### 3. 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영 §30)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VAT 면제되는 교육용역<br>○ 인·허가, 등록 및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수련시설 등 | <input type="checkbox"/> 일부 과세전환<br>○ 「체육시설 설치·이용법」상 무도학원<br>○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운전학원 |

#### (2) 개정이유

- VAT 과세기준의 국제화\* 및 과세품목 간 형평 도모

\* 영리교육은 과세, 비영리교육은 면세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7.1(자동차운전학원 '12.7.1) 이후 용역 제공 개시분부터 적용

## V. 세원 투명성 제고

### 1. 간이과세 제도의 합리화

#### 가. 간이과세 적용기준의 합리화(영 §74 ②)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적용<br><br><input type="checkbox"/> 부동산임대업 : 각 사업장 임대료의 합계액으로 판정<br><br><input type="checkbox"/> 기타 : 각 사업장 매출액만으로 판정 |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각 사업장 매출액의 합계액으로 판정(「사업자 기준」으로 단일화)         </div> |

##### (2) 개정이유

- 업종간 과세유형 판정기준의 형평도모 및 합리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7.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나. 복식부기의무자는 간이과세 배제(영 §74 ②)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lt;신 설&gt;</p> <p>*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p> | <p><input type="checkbox"/>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 배제</p> <p>* 매출액이 농·어업은 3억원 이상, 제조업은 1억 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은 7천 5백만원 이상인 사업자</p> |

### (2) 개정이유

- 복식부기의무자는 납세협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
  - \* 간이과세 제도 : 세법지식·기장능력 등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부담 경감 목적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7.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2. 전자세금계산서의 성공적 정착 지원

### 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영 §83①)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br>○ 공제금액 : 1건 발급·전송에 대해 100원<br>○ 공제한도 : 연간 100만원 | <input type="checkbox"/> 공제금액 인상<br>○ 공제금액 : 건당 200원<br>○ (현행 유지) |

#### (2) 개정이유

- 2011.1.1 법인사업자부터 의무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나.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제도 보완(법 §22 ⑩)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lt;신 설&gt;</p> <p>※ 종이세금계산서 지연발급(1%)과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1%) 위반이 중복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만 부과</p> | <p><input type="checkbox"/>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추가</p> <p>○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1%)과 발급명세 전송의무* 위반이 중복된 경우 지연발급가산세만 부과</p> <p>* 1%(지연전송은 0.5%),<br/>단, 법인은 '11년은 0.3%(지연전송은 0.1%), 개인은 '12년은 0.3%(지연전송은 0.1%)</p> |

### (2) 개정이유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의무 위반이 중복된 경우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1. 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 다. 공인인증서 발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영 §57①)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br>○ 소매업, 목욕·이발업 등<br><신 설> | <input type="checkbox"/> 면제되는 경우 추가<br><br>○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 발급업 (법인에게 용도 제한용으로 발급하거나 개인에게 발급하는 것에 한함)<br>※ 법인 범용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 (2) 개정이유

- 공인인증서 발급업무는 소액 대량거래\*로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시 납세협력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점을 감안
  - 다만, 법인 범용 인증서는 건당 발급비용이 10만원(VAT 1만원 별도)인 점 감안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라. IPTV(Internet Protocol TV)요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등  
(영 §53④, §79의2 ②)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사업자에겐 계산서, 비사업자<br>에겐 영수증 발급 업종<br><input type="checkbox"/>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br><input type="checkbox"/> 방송법에 따른 방송용역 제공<br><br><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 <input type="checkbox"/> 업종 추가<br><br><input type="checkbox"/>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br>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br>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2) 개정내용

- 전기통신역무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용역과의 형평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 3. 전부자료상에 대한 세금계산서가산세 부과(법 §22 ⑥)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가산세(2%) 대상<br>○ 사업자가 재화·용역 거래없이<br>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br>받는 경우<br>※ 100%자료상은 사업자 아님 | <input type="checkbox"/> 가산세 대상 추가<br>○ 100%자료상*이 세금계산서를<br>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br>* 재화·용역거래 없이 세금계산서<br>수수만을 업(業)으로 하는 자 |

#### (2) 개정이유

-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자료상과의 형평 감안 및 자료상 행위 방지

#### (3) 개정내용

- 2011. 1. 1이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

#### 4. 위장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가산세 부과(법 §22 ③)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br>○ 실제 공급자가 아닌 타인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과<br>* 공급가액의 2% | <input type="checkbox"/> 가산세 부과사유 추가<br>○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타인을 공급 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부과 |

##### (2) 개정이유

- 공급받는 자를 허위로 기재한 위장세금계산서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VI. 납세편의 제고 및 기타 제도 보완

### 1. 신용카드 등의 당첨금 제도 폐지(법 §32의4)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등 사용 당첨금 제도<br>○ 대상 결제수단 : 현금영수증<br>※ 신용·직불·선불카드는 법령에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현금영수증만 추첨 | <폐 지> |

#### (2) 개정이유

- 세원 양성화 유인이라는 당첨금제도의 도입목적 달성
- ※ 민간소비 중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 비중 : 71.1%('09년)
- ※ '10.1월부터 TV방송 폐지 및 등위 단일화, 매월 5천명에게 5만원 지급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분부터 적용

## 2. 사업자 미등록가산세 부과기준 개선(법 §22 ①)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미등록가산세 부과기준<br>○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 부과 | <input type="checkbox"/> 부과기준 개선<br>○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일 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 1% 부과 |

### (2) 개정이유

- 사업자 등록이후 적법하게 판매한 부분까지 미등록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분부터 적용

### 3. 재고매입세액 공제 및 납부대상 자산에 ‘건설 중인 자산’ 추가 (법 §17의3, §26의2)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시<br>재고매입세액 공제대상<br>○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 ○ “건설 중인 자산” 추가 |
| <input type="checkbox"/>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시<br>재고납부세액 납부대상<br>○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 ○ “건설 중인 자산” 추가 |

#### (2) 개정이유

-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부담의 적정 도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1. 1 이후 유형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 4. ‘건설중인 자산’의 재고매입세액 계산(영 §63의3, §74의4)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 건설중인 자산의 재고매입세액 계산 :<br>건설중인 자산의 건설·신축 또는 제작과 관련한<br>공제대상 매입세액 × (1- 업종별 부가가치율) |

##### (2) 개정이유

-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재고매입세액 공제 및 납부대상에 건설중인 자산을 포함시킴에 따라 공제 및 납부할 재고매입세액 계산방법을 규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과세유형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 5. 사업양수인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대상 명확화(법 §6 ④)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의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아니함 | <input type="checkbox"/>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재화는 사업 양수인에게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 |

### (2) 개정이유

-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사업양수인이 양수 받아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재화를 사업양수인(즉 폐업인)의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 된다는 국세청 해석사항을 명문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부터 적용

## 6.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제한제도 폐지(영 §11의2 ①·③)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단위과세는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되는 과세기간까지는 포기 불가 |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청일이 속한 과세기간까지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장 단위 과세로 전환 |

### (2) 개정이유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포기제한제도를 폐지하여 조세마찰 방지 및 납세협력 부담 완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포기신고분부터 적용

## 7.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허용(영 §59 ②)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허용<br>○ 요건 : 과세유형 전환전에 공급한 재화 등에 대하여 환입·공급가액 증감 등 세금계산서 수정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br>○ 발급방법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를 수정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로 하여 발급 |

### (2) 개정내용

- 일정한 경우 간이과세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여 사업자의 납세편리 지원 도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생기는 분부터 적용

## 8. 공동사용건물의 매입세액 안분계산제도 개선(영 §61⑥)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과·면세 공동사용 건물분 공동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경우</p> <p>○ 추후 과·면세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p> <p>① 과·면세공급가액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지,</p> <p>② 과·면세사용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지 불분명</p> | <p>□ 공동매입세액 안분계산 개선</p> <p>○ 토지를 제외한 건물에 대하여 과·면세예정사용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p> <p>- 과·면세 공급가액이 모두 발생한 경우에도 과·면세예정사용면적기준으로 계속 안분계산하고,</p> <p>- 과·면세 사용면적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확정사용면적기준으로 정산함을 명확히 함</p> |

### (2) 개정내용

- 과·면세 공동사용건물에 대한 공동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

## 9. 재수입에 대한 부가세·관세 면세범위 일치(영 §44)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재수입 면세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 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아래와 같음</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수출(보세가공수출 포함)한 물품을 수출신고일부터 2년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li> <li>②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것</li> <li>③ 해외에서 시험 및 연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것</li> <li>④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li> <li>⑤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한 후 당해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것</li> </ol> | <p>□ 재수입재화의 범위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과세사업자가 수입하는 아래의 것을 말함</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li> <li>2.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 감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li> </ol> |

### (2) 개정이유

- 재수입 VAT 면제 범위를 재수입 관세 면제범위에 일치시켜 납세협력부담 경감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0. 면세소금의 범위 조정(영 §28 ①)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면세 소금의 범위<br>○ 「염관리법」 §25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조된 염으로서 「식품위생법」 §7 ①에 따라 식품으로 정하여 진 것 | <input type="checkbox"/> 범위 조정<br>○ 「식품위생법」 §7 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의 규격 및 기준에 의한 천일염 및 재제소금일 것 |

### (2) 개정이유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면세 소금 범위 불분명에 따른 납세마찰 방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공급·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 11. 월합계세금계산서 기재사항 개선(영 §54 ①)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br>○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input type="checkbox"/> 발급방법 명확화<br>○ 발행일자 → 작성연월일 |

### (2) 개정이유

- 월합계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는 작성연월일임을 명확화
  - ※ 세금계산서 양식에는 발행일자를 적는 란이 없어 현재 작성연월일에 발생일자를 적고 있음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부터 적용

## 12. 영세율 적용대상 외교관 등의 정의 개선(영 §26 ①)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영세율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외교관 등의 정의<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과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당해 국가의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li> </ul> | <input type="checkbox"/> 정의 규정 수정<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 제외),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대한민국이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 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또는 그 밖의 대외 합의에 의해 특권·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해당국가로부터 공무원신분을 부여받은 자, 혹은 해당기구 및 기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을 부여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li> </ul> |

### (2) 개정내용

- 국제법 및 국제 조약에서 통용되는 용어 사용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부터 적용

### 13. 계약해지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명확화(영§59)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의 해제로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계약 해제일을 부기(2호)</li> <li>○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음 (3호)</li> </ul> | <p>(현행 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가액 증감사유에 “계약해지”가 포함됨을 명확화</li> </ul> |

#### (2) 개정이유

- 계약해지\*를 계약해제\*\*로 오해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받는 조세마찰 사례 방지

\* 계약해지(영 §59 제3호) : 해지효력이 장래에만 미침

\*\* 계약해제(영 §59 제2호) : 계약이 원천적으로 취소(소급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부터 적용

## 14. 매입세액 불공제 소형승용차 범위 명확화(영 §60 ④)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구입·임차 및 유지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범위<br><input type="checkbox"/>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input type="checkbox"/> 대상 명확화<br><input type="checkbox"/>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상의 승용자동차임을 명확화 |

### (2) 개정이유

- 구입비용 등에 대하여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를 명확히 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부터 적용

## 15. 공급가액·부가세액 구분표시 사업자 범위 명확화(영 §79의2⑦)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영수증 발급사업자(일반·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 기재하여야 함 | <input type="checkbox"/> 간이과세자를 구분기재 대상사업자 범위에서 제외 |

### (2) 개정이유

-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구분기재 대상 영수증발급 사업자 범위에서 간이과세자는 제외됨을 명확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이후 부터 적용

## 16. 국제경쟁입찰방식 차관자금사업 VAT 영세율 폐지(영 §26 ①)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대상<br>○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하여 받는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삭 제> |

### (2) 개정이유

- 동 제도는 우리나라가 차관도입국일 당시인 '77. 9월에 신설된 제도로 '98년 이후에는 차관도입 실적 없어 동 제도를 유지할 실익 없음

※ 현재는 도입된 차관자금의 상환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차관자금이라 하더라도 민간과 경쟁관계있는 재화 또는 용역은 과세함이 타당

- 의료·보건, 공익단체 용역 등 기초생활품은 현행 법률에 따라 면세 적용

※ 현행 제도는 차관 자금과 비차관 자금간, 경쟁입찰과 수의계약간 형평문제가 있고,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차관자금 해당분(영세율)과 비차관자금 해당분(10%세율)으로 구분하여야 하는 문제 발생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011.1.1이전 국제경쟁입찰 체결에 의한 공급분은 '12.12.31까지 종전 규정 적용

17. 한국은행에 부가세 납부시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규정 삭제  
(영 §64⑦, §65③)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한국은행 등에 부가세 납부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함께 제출 | <삭 제> |

(2) 개정이유

- 현재 한국은행 등에 부가가치세 납부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이를 반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 18. 장기할부판매 요건 명확화(영 §21⑤)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장기할부판매 요건<br>○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등<br>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br>각 호에 해당하는 것<br>①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받는 것<br>② 재화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br>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br>이 1년 이상인 것 | ○ ①과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br>경우로 명확화 |

### (2) 개정이유

- 장기할부판매의 요건을 명확화하여 납세편의 지원

※ 현재는 2회 이상 분할요건(①)과 1년이상 기간요건(②)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장기할부판매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부터 적용

## 19. 영수증 발급대상에 자동차 제조업 등 추가(칙 §25의2)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중 영수증 교부 가능 업종<br>○ 운수업 및 주차장 운영업 등<br>○ 개인서비스업<br><신 설> | ○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판매업 |

### (2) 개정이유

- 자동차 제조업·판매업은 사실상 최종소비자 상대업종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실익이 적고 교부시 오히려 매입세액 부당공제 소지만 발생
- 특히, '11년부터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급받는 자의 주민번호·E-mail 등을 수집하여야 하는 바, 개인정보 수집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
- ⇒ 사업자가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만 교부토록 함으로써 자동차 제조업자 등의 납세협력비용 경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4.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20.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조정(칙 §15)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간주임대료 이자율 : 4.3%<br>* 3.4% → 4.3% ('10.3.31개정) | <input type="checkbox"/> 이자율 조정 (4.3% → 3.7%) |

### (2) 개정이유

- 간주임대료 이자율 산정의 근거가 되는 은행권 1년만기 정기 예금이자율이 '10. 3월 당시 보다 인하(4.3%→3.7%) 된 점을 감안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신고분(4.25 예정신고분) 부터 적용

## 21. 사업장의 범위 조정(칙 §1의2)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사업에 관한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지방공사의 범위<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li> <li>○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 등 11개 지방공사</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스에이치공사(SH공사)<br/>(현행 유지)</li> <li>○ 울산광역시도시공사</li> </ul> |

### (2)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는 SH공사('04.3.17)로 사명 변경
- 현재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다른 도시개발공사 등과의 형평 감안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7.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22.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시 공급중단제도 개선 (조특법 §106의2)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중단 기간<br>○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면세유 부정유통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단서 신설> | ○ 2년간<br>- 부정유통에 따라 추징하여야 할 감면세액을 2년이 경과한 날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날까지 |

### (2) 개정이유

- 2년이 경과 하더라도 추징세액을 미납하는 경우 면세유류 공급을 중단하여 추징세액 미납부 방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분 부터 적용

## 24. 외교관에 대한 VAT 사후환급절차 개선(조특령 §108③~⑤)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외교관에 대한 VAT 사후환급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면세장에서 면세카드 제시</li> <li>○ 외교관 신분확인 후 물품 구입</li> <li>○ 판매자는 판매확인서 2매 교부</li> <li>○ 외교관은 수령한 판매확인서를 외교부에 제출하여 확인필(이 때 외교부는 대상, 한도 등 확인)</li> <li>○ 외교관은 확인필한 판매확인서를 해당사업장에 제출</li> <li>○ 판매자는 확인금액을 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장은 환급분을 영세율 신고</li> </ul> </li> </ul> | <p>□ 환급절차 간소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관은 환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지정면세장에서 발급한 구매영수증*을 첨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수증 기재세액이 환급대상액</li> </ul> </li> <li>○ 외교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의 신분, 자격요건, 금액 등을 확인하고 국세청장에게 해당금액 지급 요청</li> <li>○ 국세청장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금액을 외교통상부장관에 지급하도록 지시</li> <li>○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금액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송금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은 각 외교관에게 해당 환급액을 송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장은 일반과세 신고</li> </ul> </li> </ul> |

### (2) 개정이유

- 국제관행 준수를 통한 대외인식 제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4.1 이후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

## 24. 조세지원대상 농민의 범위 조정(농림특례규정 §2①, §14①)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영세율 및 면세율 적용대상 농민 등의 범위<br><input type="checkbox"/> 개인 <단서 신설><br><br><input type="checkbox"/> 영농조합법인 등 | <input type="checkbox"/> 농민 개인범위 조정<br><br><input type="checkbox"/>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자만 해당)<br>(현행 유지) |

### (2) 개정이유

- 일시적 농업 종사자 까지 지원되는 부작용 방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25. 면세유 지원대상 낚시어선의 범위 조정 (농림특례규정 §15①)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면세유 지원대상 낚시어선의 범위</p> <p>○ 「낚시어선법」에 의하여 신고한 낚시어선업용 선박 &lt;단서 신설&gt;</p> | <p>○ 「낚시어선법」에 의하여 신고한 낚시어선업용 선박(「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업인이 등록한 선박만 해당)</p> |

### (2) 개정이유

- 어업인이 아닌 자 소유의 낚시어선 지원 제외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26.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장치 부착대상 농업기계의 범위 조정 (농림특례규정 §17①)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장치 부착<br>농업기계의 범위<br><input type="checkbox"/>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콤바인,<br>농업용 난방기 및 농선(10톤<br>이상인 것에 한함)<br><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09.2.4시행 부칙 제3조 개정&gt;</p> | <input type="checkbox"/> 범위 조정<br><br><input type="checkbox"/>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br>농산물건조기<br><br><input type="checkbox"/>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br>보유현황을 신고하는 분부터<br>적용하여 중고농업기계 신규<br>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 |

### (2) 개정이유

- 면세유 부정유통 소지를 줄이고 부정유통 방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7.1 이후 보유현황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7. 면세유 사후관리 대행기관 추가(농림특례규정 §26②)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면세유류 사후관리 대행기관<b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br>(농업용 면세유)<br>※ 어업용 대행기관은 없음 | <input type="checkbox"/> 대행기관 추가<br>○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관련 전문<br>기관을 대행기관 지정<br>※ 어업용 면세유의 경우 동해·서해<br>어업지도사무소 추가 지정 예정 |

### (2) 개정이유

- 면세유 사후관리 책임을 강화, 효율적 사후관리 실시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부터 적용

## 28.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 요건 신설(외국인특례규정 §5조의2⑤)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input type="checkbox"/> 관할지방국세청장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 취소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법령에 의해 허가·지정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li> <li>○ 국세 등을 50만원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li> <li>○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은 경우</li> <li>○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li> <li>○ 당해 사업을 하지 않게 된 경우</li> <li>○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 <p><input type="checkbox"/> 지정취소 요건 신설</p>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height: 150px; margin: 10px 0;"></div> <p style="text-align: center;">&lt;좌 동&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법령의 환급·송금절차를 위반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li> </ul> |

### (2) 개정이유

- 법령 준수 유도 및 사후환급절차 실효성 제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4.1 이후부터 적용

## 29. VAT사후환급 가능한 거래가액 명확화(외국인특례규정 §3조②)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환급대상 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회 거래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5만원) 이상인 물품</li> <li>○ 1회 거래가액이 5만원 미달임에도 불구하고*하고 면세판매장 또는 환급창구 운영사업자가 당해 세액상당액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송금 또는 환급하는 경우</li> <li>* 통상 거래가액이 3만원 이상인 경우 환급</li> </ul> | <input type="checkbox"/> 환급대상 범위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 좌 동 &gt;</li> <li>○ &lt; 삭 제 &gt;</li> </ul> |

### (2) 개정이유

- 사후환급가능 여부를 법령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4.1 이후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

### 30. 일부품목에 대한 반출확인 절차 보완(외국인특례규정 §9조②)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출국항 관할세관장의 반출확인 절차<br><br><div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div> | <input type="checkbox"/> 관할세관장에게 추가자료 요구 권한 부여<br><br><div style="margin-left: 20px;">○ 수집한 전자판매확인서에 오류가 있거나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영수증 등 제시 요구 가능</div> |

#### (2) 개정이유

- 전자방식 판매확인서 도입에 따른 미비점 보완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부터 적용

## 개별소비세법·시행령·시행규칙



## [개별소비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개정된 주요내용】

#### [ 1. 개별소비세법 관련 ]

1. 경마·경륜·경정장 장외발매소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과세
2.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신고기한 합리화
3. 개별소비세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도 도입
4. 외국인 관광객 등의 유흥음식행위 개별소비세 면제제도 폐지
5. 주한외교관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제도 합리화
6. 미납세반출제도 추가
7. 폐업 신고제도 간소화

#### [ 2.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

8.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종료
9. 택시 LPG부탄 유류세 지원체계 합리화 및 일몰연장

### 【개별소비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일자】

- 법 률 : 2010.12.27 (제10404호)
- 대통령령 : 2010.12.30 (제22569호)
- 기획재정부령 : 2011.4.1 (제201호)

### 【조세특례제한법 · 시행령 개정일자】

- 법 률 : 2010.12.27 (제10406호)
- 대통령령 : 2010.12.30 (제22583호)

## [ 1. 개별소비세법 관련 ]

### 1. 경마·경륜·경정장 장외발매소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과세(법 §1②)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입장행위에 과세<br>○ 경마장 : 1인 1회 500원<br>○ 경륜·경정장 : 1인 1회 200 | <input type="checkbox"/> 입장행위(장외발매소·장외매장<br>입장행위 포함) 과세 |

#### (2) 개정이유

- 경마장 등이나 경마장 등의 장외발매소나 동일한 사행행위를 하므로 과세형평유지를 위해 과세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7.1. 이후 입장행위에 대하여 적용

## 2.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신고기한 합리화(법 §9)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물품 : 매분기 다음달 25일</li> <li>○ 과세장소(경마장 등) : 매분기 다음달 25일</li> <li>○ 과세유흥장소 : 매분기 다음달 25일</li> </ul> |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10px; margin-right: 10px;"> (현행유지)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유흥장소 : 다음달 25일</li> </ul> </div> </div> |

### (2) 개정이유

- 개별소비세의 분기별 신고·납부에 따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개별소비세를 월별 신고·납부로 전환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부터 시행

### 3. 개별소비세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도 도입(법 §10의3)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 신고·납부<br>○ 사업장마다 신고·납부<br><br><input type="checkbox"/> 개별소비세 신고·납부<br>○ 사업장마다 신고·납부<br><br><신 설><br><br>* 부가가치세 사업장이 둘 이상<br>경우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br>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

#### (2) 개정이유

- 부가가치세를 사업자단위로 신고·납부하기로 한 사업자는 개별 소비세도 사업자단위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4. 외국인 관광객 등의 유흥음식행위 개별소비세 면제제도 폐지 (법 §19의3)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다음 유흥음식행위는 개별소비세 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과세유흥장소에서 외국군인·외국인 선원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li> <li>○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경영자가 외국인 관광객·재외국민·외국인 선원에게 외화를 받고 숙박 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li> <li>○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과세유흥장소에서 주한외교관 등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li> <li>○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음식점업의 경영자가 외국인 관광객·재외국민·외국인 선원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과세유흥장소에서 외국군인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li> </ul> <p>&lt;폐 지&gt;</p> |

##### (2) 개정이유

- 불건전한 소비를 지원하는 제도 폐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부터 적용

## 5. 주한외교관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제도 합리화(법 §16, 법 §19의3)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input type="checkbox"/> 다음은 개별소비세 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한외국공관이 공용품(公用品)으로 구입하는 것</li> <li>○ 주한외교관 및 그 가족이 자가용품(自家用品)으로 구입하는 것</li> <li>○ 주한외국공관이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석유류</li> <li>○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 행위</li> </ul> <p><input type="checkbox"/> 주한외교관 등이 개별소비세 면제물품을 5년내 양도시 개별소비세 납부</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 <p>(현행 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한외국공관 · 외교관의 공용차량용 석유류</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폐 지&gt;</p> <p><input type="checkbox"/> 3년내 양도시 개별소비세 납부</p> <p><input type="checkbox"/> 외국에서 우리나라 외교관 등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상호주의)</p> <p>* 개별소비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면세하는 때와 개별소비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 때</p> |

(2) 개정이유

-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면제축소 및 국제적 관례인 공관원의 임기를 고려하여 사후관리기간 단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부터 적용

## 6. 미납세반출제도 추가(영 §19)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input type="checkbox"/> 미납세반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물품 반출</li> <li>○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li> <li>○ 승용자동차 하치장 반출 등</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제조장에서 제조장(하치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고 제조장(하치장)에서 반출하는 시점에 개별소비세 과세</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용자동차를 전시용으로 제조자등의 판매장으로 반출</li> <li>* 30일이상 전시하는 것 한정</li> <li>○ 석유류 제조자가 석유류를 제조장간 반출</li> </ul> |

### (2) 개정이유

- 소비자 판매로 볼 수 없는 제조장 반출에 대해 미납세반출 허용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제조장 반출분부터 적용

## 7. 폐업 신고제도 간소화(영 §35)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개별소비세 과세사업 폐업시</p> <p>○ 과세표준 신고서·폐업신고서 제출</p> <p>&lt;신 설&gt;</p> | <p>- 과세표준 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적어 제출한 경우 폐업신고서 제출로 같음</p> <p>* 부가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등을 적어 제출한 경우 폐업신고서 제출로 간주(부가영 §10①)</p> |

### (2) 개정이유

-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폐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납세편의 제공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부터 적용

## [ 2.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

### 8.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종료(법 §112, §121의14, §121의18)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br><br>○ 지방 회원제 골프장<br>- 일몰기한 : 2010.12.31<br><br>○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br>- 일몰기한 : 2010.12.31<br><br>○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 회원제<br>골프장<br>- 일몰기한 : 2010.12.31 | <p style="text-align: center;">&lt;일몰종료&gt;</p><br>- 일몰연장 : 2012.12.31(2년)<br><br>- 일몰연장 : 2012.12.31(2년) |

#### (2) 개정이유

- 지방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는 수도권회원제 골프장과의 과세불형평 해소를 위해 일몰종료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부터 적용

## 9. 택시 LPG부탄 유류세 지원체계 합리화 및 일몰 연장 (법 §111의3①)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택시 LPG부탄에 부과된 개별 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p> <p>○ 면제 지원규모 : 185원/ℓ<br/> * (개별소비세) : 161원/ℓ<br/> (교육세) : 24원/ℓ (개별소비세의15%)</p> <p>※ 유가보조금 지원 : 판매부과금 36원/ℓ</p> <p>○ 적용기간 : '08.5.1~'11.4.30</p> | <p>○ 택시 LPG 부탄 유류세 총 지원 규모(221원/ℓ)를 동일하게 유지 하되,</p> <p>-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인상 (36원/ℓ → 198원/ℓ)<br/> *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부)</p> <p>- 유류세 면제단가를 인하조정 (185원/ℓ → 23원/ℓ)</p> <p>○ 적용기간을 '12.12.31.까지 연장</p> |

### (2) 개정이유

- (지원체계 합리화) 택시에 대해 버스·화물차·연안화물선 등 타 운수업계와 마찬가지로 유가보조금 도입취지(유류세 인상분 지급)에 맞게 지원토록
  - 택시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총 지원규모(221원/ℓ)는 동일 하게 유지하되 유가보조금 및 면제 지급단가를 조정하여 지원 체계를 합리화
- (일몰 연장) 어려운 택시업계의 경영개선을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 【개정된 주요내용】

#### [ 1.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관련 ]

1.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사업자단위 신고 · 납부제도 도입
2. 주한외교관에 대한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면제제도 합리화
3. 미납세반출제도 추가
4. 폐업 신고제도 간소화

#### [ 2.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

5. 바이오디젤 유류세 면제 일몰 1년 연장
6. 경차 유류세 환급 일몰 2년 연장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일자】

- 법 률 : 2010.12.27 (제10403호)
- 대통령령 : 2010.12.30 (제9346호)
- 기획재정부령 : 2011.4.1 (제202호)

### 【조세특례제한법 · 시행령 개정일자】

- 법 률 : 2010.12.27 (제10406호)
- 대통령령 : 2010.12.30 (제22583호)

## [ 1.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관련 ]

### 1.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사업자단위 신고 · 납부제도 도입(법 §8의2)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br>○ 사업장마다 신고 · 납부<br><br><input type="checkbox"/>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신고 · 납부<br>○ 사업장마다 신고 · 납부<br><br><신 설><br><br>* 부가가치세 사업장이 둘 이상<br>경우 사업자 단위 신고 · 납부 |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br>사업자 단위 신고 · 납부 |

#### (2) 개정이유

- 부가가치세를 사업자단위로 신고 · 납부하기로 한 사업자는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도 사업자단위로 신고 ·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 주한외교관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면제제도 합리화(법 §14)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input type="checkbox"/> 다음은 교통·에너지·환경세 면제</p> <p>○ 주한외국공관이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석유류</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 <p>○ 주한외국공관·외교관의 공용 차량용 석유류</p> <p><input type="checkbox"/> 외교통상부장관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매 연도분 면세한도량을 전년도 말일까지 확정</p> <p><input type="checkbox"/> 외국에서 우리나라 외교관 등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상호주의)</p> <p style="text-align: center;">*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면세하는 때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 때</p> |

### (2) 개정이유

- 주한외교공관등 및 주한외교관등의 공용차량용 석유류로 면제 범위를 축소하고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면제축소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부터 적용

### 3. 미납세반출제도 추가(영 §15)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미납세반출<br><br>○ 수출물품 반출<br><br>○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br>다른 제조장으로 반출 등<br><br><신 설> | ○ 석유류 제조자가 석유류를 제조<br>장간 반출 |

#### (2) 개정이유

- 소비자 판매로 볼 수 없는 제조장 반출에 대해 미납세반출 허용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제조장 반출분부터 적용

#### 4. 폐업 신고제도 간소화(영 §25)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업 폐업시</p> <p>○ 과세표준 신고서·폐업신고서 제출</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 <p>- 과세표준 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적어 제출한 경우 폐업신고서 제출로 같음</p> <p>* 부가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등을 적어 제출한 경우 폐업신고서 제출로 간주 (부가영 §10①)</p> |

##### (2) 개정이유

-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폐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납세 편의 제공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부터 적용

## [ 2.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

### 5. 바이오디젤 유류세 면제 일몰 1년 연장 (법 §111②)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면제<br>○ 적용기간 : '08.1.1.~'10.12.31 | ○ 적용기간 1년<br>연장('11.12.31.까지) |

#### (2) 개정이유

- 친환경에너지인 바이오디젤 보급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6. 경차 유류세 환급 일몰 2년 연장 (법 §111의2①)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경차 소유자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내 유류세 환급<br><br>○ 적용기간 : '10.1.1.~'10.12.31 | <br><br><br><br><br>○ 적용기간 2년 연장('12.12.31.까지) |

### (2) 개정이유

- 에너지 절약 및 경차이용 서민부담 경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법]

### 【개정한 주요내용】

1.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규과세
2. 국가관리 공공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관세전환 명확화
3. 내국법인 증권예탁증권(DR) 증권거래세 과세

### 【증권거래세법 개정일자】

- 법률 : 2010.12.27 (제10401호)

## 1.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규과세(법 §6)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우정사업본부의 주권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 비과세 | <input type="checkbox"/> 우정사업본부의 주권양도에 대해 '13.1.1부터 증권거래세 과세 |

### (2) 개정이유

- 개인투자자 및 타 기관투자자 등과의 과세형평 제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2. 국가관리 공공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전환 명확화(법 §6)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117① 18호 폐지, ‘10.1.1 시행) 및 기존 유권해석 변경을 통해 ‘10.1.1부터 모든 연기금에 대해 증권거래세 과세 | □ 국가관리 공공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전환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를 증권거래세법에 명문화<br><br>○ 국가관리 공공기금을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6)인 국가의 범위에서 제외 |

### (2) 개정이유

- 세법 해석의 명확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부터 적용

### 3. 내국법인 증권예탁증권(DR) 증권거래세 과세(법 §2)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 과세</p> <p>○ 주권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li> <li>-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 시장 등에 상장·등록된 것 등</li> </ul> <p>&lt;신 설&gt;</p> | <p>□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내국법인 증권예탁증권(DR) 추가</p><br><br><br><br><br><br><br><br><br><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국법인 지분증권을 기반으로 발행된 증권예탁증권 (주권의 범위 확대)</li> </ul> <p>☞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등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증권거래세법 §1 1호)에 의해 내국법인 상장DR은 비과세되고 비상장 DR만 과세됨</p> |

## (2) 개정 이유

- 내국법인 증권예탁증권\*과 일반 주권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  
\* 외국 예탁기관이 국내주식(원주)을 자기명의로 보관기관(예탁결제원)에 보관  
시키고 원주를 기반으로 하여 해외에서 발행하는 주식대체증서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주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주세법·시행령·시행규칙]

### 【개정된 주요내용】

1. 탁·약주의 원료 및 주류 첨가재료 확대
2. 원산지 표지 위반에 대한 적용법률 명확화
3. 검사목적으로 수거하는 수입주류의 주세면세
4. 농민주의 생산자 및 제조원료 범위 확대
5. 국·공립연구기관 등의 시험재조시 제조면허 면제
6.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의 환급절차 간소화
7. 주류 제조시설 기준 완화
8.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완화
9. 의제주류판매업면허 범위 확대
10. 탁·약주의 알코올분 허용한도 확대
11. 탁·약주의 제조방법 다양화
12. 주류의 제조면허 등 신청 서류의 법령화

### 【주세법·시행령·규칙 개정일자】

- 법 률 : 2010.12.27 (제10402호)
- 대통령령 : 2010.12.30 (제22584호)
- 기획재정부령 : 2011.4.1 (제199호)

# 1. 탁·약주의 원료 및 주류 첨가재료 확대 (법§4② 별표, 영§2① 별표1, 영§3①)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lt;신 설&gt;</p> <p>○ 당분은 원료(녹말+당분)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50% 이하</p> <p>&lt;신 설&gt;</p> <p>□ 주류의 첨가재료</p> <p>○ 아스파탐·스테비오사이드·수크랄로스·『식품위생법』상 허용되는 식물약재 등</p> | <p>□ 탁·약주의 발효·제성과정에 과실 및 채소류를 원료 및 첨가재료로 각각 사용 가능</p> <p>○ 과실 및 채소류는 원료(녹말+당분+과실·채소류) 합계중량의 20% 이하</p> <p>* 현재 과실을 탁주에 20% 이하 사용할 수 있으나 살균하여야 하며, 약주에는 알코올분 1도 이상으로 발효시킬 수 있는 과채류를 제외하고 있음</p> <p>○ 녹말은 원료(녹말+당분+과실·채소류) 합계중량의 50% 이상</p> <p>□ 약주에 주정 또는 증류식소주 혼합 가능</p> <p>○ 첨가한도 : 제품 알코올분 총량의 20% 이하</p> <p>○ 제품의 알코올분 도수 : 25% 미만</p> <p>□ 첨가재료 범위 확대</p> <p>○ 식물약재를 식물로 확대하고 토마틴을 추가</p> |

## (2) 개정이유

- 다양한 주류 개발 지원 및 관련 산업 육성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4.1. 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 2.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적용법률 명확화(법§12①)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다음의 경우 3개월 이내 제조·출고 정지 처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위생법」등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경우</li> <li>○ 주류제조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사항을 위반한 경우</li> <li>○ 주류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li> </ul> <p>&lt;신 설&gt;</p> | <p>(현행유지)</p> <p>- 주류 원산지 표시 관련한 위반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적용</p> |

### (2) 개정이유

-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적용 법률 명확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 3. 검사목적으로 수거하는 수입주류의 주세면세 (법 §31②, 영 §32④, §32⑤)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다음 용도로 수입하는 주류는 주세 면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원, 교회 등에 의식용으로 외국에서 기증한 것</li> <li>○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서 수입하는 것 등</li> </ul> <p>〈신 설〉</p> <p>〈신 설〉</p> | <p>□ 수입주류의 주세 면세범위 확대</p> <p>(현행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세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검사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li> </ul> </li> <li>○ 수출한 주류가 품질불량 기타 사유로 동일 주류제조자의 어느 한곳 제조장에 환입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수출면세 승인서류를 첨부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li> <li>- 세관장은 환입 사실을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li> <li>- 수입신고한 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7일 이내 환입하여야 함</li> </ul> </li> </ul> |

(2) 개정이유

- 수입주류에 대한 과세불형평 및 납세자의 불편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검사목적으로 수거하는 분과 동일 주류제조자의 제조장에 환입되는 분부터 적용

#### 4. 농민주의 생산자 및 제조원료 범위 확대(법§22③, 영§9②)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전통주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문화를 전수·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류(민속주)</li> <li>- 추천권자 : 문화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li> <li>○ 주류 부문의 전통식품 명인이 제조한 주류(민속주)</li> <li>○ 농업인·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제조하는 주류(농민주)</li> </ul> <p>□ 농민주의 제조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 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li> </ul> | <p>□ 전통주의 범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추가</li> <li>○ (좌 동)</li> <li>○ 농어업경영체(농·임·어업인, 농·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가 제조하는 주류(지역특산주)</li> </ul> <p>□ 제조원료 범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자 단체 및 농어업경영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및 그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제조하는 주류</li> </ul> |

##### (2) 개정이유

- 농민주의 생산자 범위에 농·어업법인을 추가하고, 제조원료 범위를 확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4.1 이후 면허신청 또는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 5. 국·공립연구기관 등의 시험제도시 제조면허 면제 (법§6)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다음은 주류제조 면허없이 주류제조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제에 의한 분장 사항으로 시험제조를 하는 경우</li> <li>○ 국·공립연구기관, 국립·사립대학 등이 학술연구 목적으로 시험제조하는 경우</li> </ul> |

### (2) 개정이유

- 다양한 주류가 개발될 수 있도록 양조기술 연구를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제조하는 분부터 적용

## 6.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의 환급절차 간소화 (법 §34)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방법<br><br><input type="checkbox"/> 주세를 납부한 주류가 변질·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동일한 주류제조장에 환입된 경우에만 세액공제 또는 환급 | <input type="checkbox"/>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방법 개선<br><br><input type="checkbox"/> 주세를 납부한 주류가 변질·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동일 주류제조자에게 환입된 경우 |

### (2) 개정이유

- 다른 제조장으로의 환입을 허용하여 납세편의 제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환입되는 분부터 적용

## 7. 주류 제조시설 기준 완화 (영§5조, 별표3)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희석식 소주 시설기준<br>○ 희석조 및 검정조 총용량 : 130kl 이상<br><input type="checkbox"/> 맥주 시설기준<br>○ 전발효조 : 925kl 이상<br>○ 후발효조(저장조) : 1,850kl 이상<br><input type="checkbox"/> 농민주(§9②2나) 시설기준<br>○ 탁주·약주 및 청주의 국실(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 6m <sup>2</sup> 이상<br>○ 증류식소주·일반증류주·리큐르 및 기타주류<br>- 증류실(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 8m <sup>2</sup> 이상<br>- 증류시설(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br><input type="checkbox"/> 민속주 등(§9②2다·라)의 시설 기준<br>○ 국실(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 6m <sup>2</sup> 이상<br>○ 담금실 : 10m <sup>2</sup> 이상 | <input type="checkbox"/> 희석식 소주 시설기준 완화<br>○ 희석조 및 검정조 총용량 : 130kl 이상 → 25kl 이상<br><input type="checkbox"/> 맥주 시설기준 완화<br>○ 전발효조 : 925kl 이상 → 50kl 이상<br>○ 후발효조(저장조) : 1,850kl 이상 → 100kl 이상<br><input type="checkbox"/> 농민주의 시설기준 일부 폐지<br><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50px; margin: 10px auto;"></div> (현행 유지)<br><input type="checkbox"/> 민속주 등의 시설기준 일부 폐지<br><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lt;삭 제&gt;</div> ○ (현행 유지)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류실(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br/>: 8m<sup>2</sup> 이상</li> <li>○ 여과시설(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li> </ul> | <p>&lt;삭 제&gt;</p> <p>&lt;삭 제&gt;</p> |
|-----------------------------------------------------------------------------------------------------------------------------|---------------------------------------|

## (2) 개정이유

- 다양한 주류의 생산 여건 조성으로 소비자의 주류 선택권 제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면허를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

## 8.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완화 (영§9, 별표5)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종합주류 도매업 면허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금 1억원 이상</li> <li>- 창고면적 165㎡이상</li> </ul> </li> <li>○ 기타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금 5천만원 이상</li> <li>- 창고면적 66㎡이상</li> </ul> </li> </ul> | <input type="checkbox"/> 인구수 구분없이 요건 단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창고면적 66㎡이상</li> </ul> |

### (2) 개정이유

- 소규모자본에 의한 창업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면허를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

## 9. 의제주류판매업면허 범위 확대 (영§10⑤)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의제주류판매업면허의 범위</p> <p>○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하는 자</p> <p>○ 주류 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p> <p>- 식료잡화점 등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 <p>(현행 유지)</p> <p>- 「관광진흥법」제5조에 따른 외국인 전용 카지노사업장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공급하는 카지노사업자</p> <p>-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항공업자 및 선박업자(통칙 8-9...26)</p> |

### (2) 개정이유

- 카지노사업자와 외국항행(항공기 및 선박) 사업자에 대한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제도 신설로 주세법체계 내에 편입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0. 탁·약주의 알코올분 허용한도 확대 (영 §1)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주류는 최종제품 알코올분 표시<br>도수의 0.5도까지 증감 허용<br><br><신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살균하지 않은 탁·약주는 감(減)은 0.5도, 증(增)은 1도까지 허용</li></ul> |

### (2) 개정이유

- 유통중에도 발효되는 제품의 특성을 반영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 11. 탁주·약주의 제조방법 다양화 (영 §3①)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약주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 공전상 미탁 이하로 여과 | □ 약주 중 전통주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탁 이상으로 여과할 수 있도록 허용 |

### (2) 개정이유

- 전통문화의 전수·보존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주류의 제조면허 등 신청 서류의 법령화 (영 §4①, §6①, §8①, §9③·④, §11①·④, 규칙§ 11)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 제조면허, 용기주입제조장의 설치 허가, 밑술·술덧의 제조면허, 주류판매업 면허, 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서</p> <p>○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p> | <p>○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p> |

(2) 개정이유

-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4.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관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관세법·시행령·시행규칙]

### 【개정된 주요내용】

#### I. 수출입 통관질서 확립

1. 지식재산권 보호대상 확대
2. 허위·오인 표시 물품 통관제한
3. 특허보세구역 반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 신설
4.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범위 확대
5. 의무보관 신고서류에 반송신고서류 추가

#### II. 특혜원산지 제도 개선

1. 특혜원산지 확인기준 적용 범위 추가
2.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근거 신설
3. 세관당국의 수출물품 원산지 조사권한 신설
4.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등 진위여부에 대한 조사 절차 및 방법 신설
5. 수입물품 원산지증명서 확인요청 절차 신설

#### III. 관세감면제도 정비

1. 방위산업용품 관세감면제도 및 항공기 항행안전용품 관세감면제도 폐지
2.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기관 추가
3.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감면대상기관 추가
4.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세면제

#### IV. 기타 제도 개선

1. 기본관세율 인하
2. 승객예약자료 제출범위 명확화
3. 수출입 중소기업 AEO 공인인증 획득 지원근거 마련
4. 밀수품 취득죄 예비범에 대한 처벌 경감
5.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시 담보제공 생략 가능 범위 명확화
6.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 등 범위 신설

#### 【법 · 시행령 개정일자】

- 법 률 : 2010.12.30.(제10424호)
- 대통령령 : 2011.4.1.(제22816호)
- 기획재정부령 : 2011.4.1.(제197호)

## I. 수출입 통관질서 확립

### 1. 지식재산권 보호대상 확대(법 §235)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통관보류 대상 지재산 확대<br>○ (현행)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 ○ (추가)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 추가                                 |
| <input type="checkbox"/> 지재산 권리자의 통관보류 요청 대상 물품<br>○ 수출입신고된 물품    | <input type="checkbox"/> 대상 물품 확대<br>○ 환적물품, 보세구역 반입물품, 보세 운송물품 추가 |

#### (2) 개정이유

- 한-EU FTA(협정문 §10.67) 협정체결 이행을 위해 개정 필요
- 국내기업의 지재산 보호 및 국제적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한·EU FTA 발효일(특허권·디자인권에 대한 보호조치는 한-EU FTA 발효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이후 신고하는 분

## 2. 허위·오인 표시 물품의 통관제한(법 §230의2 신설)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원산지허위표시물품에 대해서는<br>통관을 제한<br><br><신 설> | <input type="checkbox"/> 통관 제한 물품 대상 추가<br><br>○ 허위·오인 상품표시 물품 추가<br>*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수량 등 |

### (2) 개정이유 : 소비자 보호 강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신고분

### 3. 특허보세구역 반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 신설(법 §178 ②~④, §205)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반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br>○ 반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반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연간 매출액의 3% 이내)<br>* 위반행위에 따른 구체적 과징금 산정방법은 시행령으로 위임<br>○ 과징금 미납부시 체납의 경우에 준하여 징수 |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종합보세구역에도 과징금 제도 준용                                                                                                                                                |

#### (2) 개정이유

- 반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반입정지 처분 대체 과징금제도 도입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4.1 이후 해당분

#### 4. 고액·상습 채납자 명단공개 범위 확대(법 §116의2)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고액·상습 채납자 명단 공개<br>○ 채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관세<br>및 내국세 등 채납액이 10억원 이상인<br>경우 | <input type="checkbox"/> 명단 공개 범위 확대<br>○ 10억원 → 7억원 |

##### (2) 개정이유

-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공개분

## 5. 의무보관 신고서류에 반송신고서류 추가(법 §12, 영§3)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의무보관 신고서류<br>○ 가격신고·납세신고·수출입신고·보세화물반출입신고·보세운송신고 서류<br>○ 적하목록 제출시 제출 자료<br><br><신 설> | <input type="checkbox"/> 의무보관 신고서류 추가<br><br><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height: 100px; margin-right: 10px;"></div> <div>             (좌 동)           </div> </div><br>○ 반송 신고 서류 |

### (2) 개정이유

- 사후심사의 실효성 확보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4.1. 이후 신고분

## Ⅱ. 특혜원산지 제도 개선

### 1. 특혜원산지 확인기준 적용 범위 추가(법 §229)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원산지 확인기준 적용 범위<br><br>○ 관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원산지를 확인하는 경우 | <input type="checkbox"/> 원산지 확인기준 적용 범위를 수출 등으로 확대<br><br>○ 관세의 부과·징수, 수출입물품의 통관, 조사요청 등에 의해 원산지를 확인하는 경우 |

#### (2) 개정이유

- 관세법에 수출물품에 대한 특혜원산지 기준 등 근거 마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7.1. 이후 신청분

## 2.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근거 신설(법 §232의2)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수출물품에 대해 협정 등에 의한 양허 관세 적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받는 경우<br><input type="checkbox"/> 세관 및 발급 권한 있는 기관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의무화 |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수출물품에 대한 특혜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br><input type="checkbox"/> 세관장은 확인자료 등 제출 요구 가능                                     |

### (2) 개정이유

-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의 정확성 등 확인 필요시 조사의 실효성 확보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7.1. 이후 신청분

### 3. 세관당국의 수출물품 원산지 조사권한 신설(법 §233②신설)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input type="checkbox"/> 원산지증명서 등 확인요청</p> <p>○ 세관장은 상대국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를 상대국 기관에 확인 요청 가능</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 <p><input type="checkbox"/> 원산지증명서 등 확인요청 및 조사</p> <p>○ (좌 동)</p> <p>○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에 대해 상대국의 진위 여부 등 확인 요청시 세관장이 조사 실시</p> |

#### (2) 개정이유

- 세관당국이 다자간 무역협정에 따른 특혜원산지 조사를 담당 하도록 근거 마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7.1. 이후 요청분

#### 4.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 진위여부에 대한 조사 절차 및 방법 신설(영 §236의8)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 서면조사</li> <li>○ 예외 : 현지조사</li> </ul> <input type="checkbox"/> 조사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 시작 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 통지</li> <li>○ (조사 후) 조사결과 및 결정 내용 서면 통지</li> </ul> <input type="checkbox"/> 이의제기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과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세관장에 신청</li> <li>○ 이의제기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결정 내용 통지 등</li> </ul> |

##### (2) 개정이유

- 세관당국의 효율적인 조사 지원 및 자의적 조사로 인한 조사 대상자의 피해 방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7.1. 이후 조사분

## 5. 수입물품 원산지증명서 확인요청 절차 신설(영 §236조의7)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p><input type="checkbox"/>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여부를 상대국(수출국)에 확인 요청시 필요한 자료 등</p> <p>○ 상대국(수출국)에 송부하는 자료</p> <p>- 확인 요청서 및 수집한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 사본</p> <p>○ 수입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p> <p>- 확인 결과 및 그에 따른 결정사항</p> |

### (2) 개정이유

- 확인요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확인내용의 내실 도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7.1. 이후 요청분

### Ⅲ. 관세감면제도 정비

#### 1. 방위산업용품 관세감면제도 및 항공기 항행안전용품 관세감면제도 폐지(법 §95①5·6)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방위산업 소요 시설기계류, 부분품, 원재료, 시험분석용품 등에 대해 관세 감면(10%) | <삭 제> |
| <input type="checkbox"/> 항공기 항행안전용품 관세감면(30%)                             | <삭 제> |

##### (2) 개정이유

- 비과세·감면 정비 및 일몰제도의 취지에 따라 폐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수입신고분

## 2.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기관 추가(규칙 §37②)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기관<br>○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연구소 등 28종 기관<br><br><신 설><br><br><br><br><신 설> | <input type="checkbox"/> 감면대상기관 추가<br>○ (좌 동)<br><br>○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br>- 다른 감면대상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포함<br><br>○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시험인증기관 |

### (2) 개정이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지경부장관 지정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을 감면대상 기관에 추가
- 국가표준기본법 개정('10.7월)에 따라 설립된 시험인증기관을 감면대상 기관으로 추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4.1. 이후 수입신고분

### 3.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감면대상기관 추가(규칙 §37③)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감면대상 기관<br><br><input type="checkbox"/>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br><br><div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div> | <input type="checkbox"/> 감면대상기관 추가<br><br><input type="checkbox"/> (좌 동)<br><br><div style="margin-left: 20px;">-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 중임을 교과부장관이 확인하는 기업</div> |

#### (2) 개정이유

- 연구소 등을 설립 중인 기업에 대해서도 관세감면 허용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규칙 시행 후 교과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기업부터 적용

#### 4.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세면제(규칙 별표2)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용품 관세면제대상<br>○ 희귀병치료제 10종 | ○ 임상시험용 의약품 추가<br>(시험약에 한정)<br>* 일몰 : 2012.12.31일 |

##### (2) 개정이유

- 임상시험 경쟁력 제고 및 해당 환자들의 신약 투약 기회 확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단 2012.12.31.까지 수입신고하는 건에 한함

## IV. 기타 제도개선

### 1. 기본관세율 인하(법 별표)

(1) 개정내용 : 43개 품목 기본관세율 인하

- ① 녹색기술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17개 품목)
- ② 희소금속 등 기초원자재에 대한 세부담 완화(17개 품목)
- ③ 중소·영세기업 경쟁력 강화(9개 품목)

| 개정 기준          |                | 품목수<br>(개) | HSK<br>10단위(개) | 세수감<br>(억원) | 실행관세율<br>인하 여부 |
|----------------|----------------|------------|----------------|-------------|----------------|
| 산업경쟁력<br>강화 지원 | ①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  | 17         | 16             | 48          | 인하             |
|                | ○ 그린카(이차전지)    | 5          | 4              | 4           |                |
|                | ○ 차세대디스플레이     | 6          | 6              | 32          |                |
|                | ○ LED 응용       | 1          | 1              | 1           |                |
|                | ○ 태양·풍력발전      | 5          | 5              | 11          |                |
|                | ② 기초 원자재 안정 확보 | 17         | 17             | 78          |                |
| ③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 9          | 60             | 18          | -              |
| 합 계            |                | 43         | 93             | 144         |                |

(2) 개정이유

-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수입신고분

## 2. 승객예약자료 제출범위 명확화(법 §137의2)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세관장이 열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br>○ 135조(입항절차)에 따른 선박·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 | ○ 135조(입항절차)·136조(출항절차)에 따른 선박·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 |

### (2) 개정이유

- 입항시 뿐 아니라 출항시에도 승객예약자료 요청이 가능하도록 명확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요청분

### 3.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한 AEO 공인인증 획득 지원근거 마련 (법 §255의2)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한 AEO 공인획득 지원<br>○ 수출입 중소기업에 AEO공인획득에 필요한 상담·교육 등 지원 |

#### (2) 개정이유

- 자체적으로 준비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쉽게 AEO 공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교육 지원 근거 마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 4. 밀수품 취득죄 예비범에 대한 처벌 경감(법 §274)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밀수품 취득죄 예비범 처벌<br>○ 본죄에 준하여 처벌<br>*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전자문서 위·변조죄 예비범은 본죄의 1/2을 경감하여 처벌 | <input type="checkbox"/> 예비범 처벌 경감<br>○ 본죄의 1/2을 경감하여 처벌 |

##### (2) 개정이유

- 관세법 형벌체계 정비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적용분

## 5.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시 담보제공 생략 가능 범위 명확화(법 §252)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시 담보 제공 생략이 가능한 경우<br>○ 정부·지자체가 수입하는 경우<br>○ 관세법, 환급특례법에 따라 벌금·통고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 <input type="checkbox"/> 담보 제공 생략 범위 명확화<br>○ (좌 동)<br>○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관세 납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br>* 구체 사례는 시행령에서 규정 |

### (2) 개정이유

- 관세 담보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4.1

## 6.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 등 범위 신설(규칙 §4)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p>g□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매자의 계산·위험부담으로 활동하면서 공급자 물색, 구매자 요구사항을 판매자에 전달, 샘플 수집, 물품검사,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알선하는 용역</li> <li>○ 구매대리 용역으로 보지 않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매대리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용역 수행</li> <li>- 구매대리인이 수입물품에 대해 소유권적 권리 보유</li> <li>- 구매대리인이 해당 거래·가격을 통제</li> </ul> </li> </ul> |

### (2) 개정이유

- 과세가격 산정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 범위를 명확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4.1. 이후 수입신고분

## 2010간추린 改正稅法

---

印 刷 2011年 6月 日

發 行 2011年 6月 日

發 行 處 企劃財政部 稅制室 租稅政策課

印 刷 處 신진기획(503-6688, 6691)

---

\* 본 冊子를 複寫出版하고자 하거나 본 내용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企劃財政部 稅制室 租稅政策課(2150-4116)에 事前問議 바랍니다.

\* 본 冊子는 改正된 稅法內容을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본 설명중 改正法令과 상이한 내용이 包含되는 경우에 法令에 우선순위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